

第10次 美洲地域 韓半島問題 情報交流會議 論文集

國際化時代の 韓半島 統一問題



統 一 院

목 차

개회식

- 개회사.....김홍락...5
치사.....송영대...7

제1분과 핵문제와 남북한관계

1. 북한 핵문제와 국제사찰박한식...15
2.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김용제...31
3. 핵문제이후의 북한변화 가능성안병준...57

제2분과 한반도 통일과 주변강대국의 정책

4.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이채진...77
5.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정책
.....김홍락...97
6.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과
정책사무엘 김...127

제3분과 국제화시대의 한반도 통일문제

7. 국제화시대의 한국의 통일정책이상우...167
8. 국제화시대의 북한의 대남전략고병철...181
9. 국제화시대의 남북화해협력김한교...199

開 會 式

開 會 辭

金 鴻 洛*

존경하는 송영대 통일원차관님. 그리고 멀리 한국과 미국각주에서 오신 여러 선배, 동료학자님들에게 준비위원회를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나와주신 한승수 주미대사님과 이 지역의 귀빈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학술회의는 우리민족의 오랜 숙망인 남북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원의 지원을 받고 1985년에 발족했습니다. 금년 제10차 회의는 이 회의의 발족(創立)1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회의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고문과 같이 지난 10년동안 한반도와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했습니다. 동구라파의 공산정책이 몰락했으며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해체됨으로서 냉전이 종식되고 동서간의 철의 장막이 제거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한반도통일이 이제는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목전에 다가온 긴박한 현실적 과제가 된 느낌입니다. 앞으로 2, 3년이 한국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북한의 핵문제로 말미암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한관계를 정상화하고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 美國側준비위원회 대표

는 온겨레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는 제10차회의의 주제는 “국제화 시대의 한반도통일문제”입니다.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명실상부한 국제화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전후 철의 장막으로 인해 분단되었던 동서양대진영은 소련공산권의 몰락으로 이제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세계는 하나의 지구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과 공간의 차이나 장벽을 초월하고 자유, 민주, 인권 등의 가치가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국제화시대의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도 반드시 실현될것을 확신하고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제1분과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김일성사망후의 남북한관계를 고찰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개최되는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한반도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정책과 시각을 분석하게 되며 마지막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국제화시대의 한반도통일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 2일간의 회의에서 발표되는 논문을 중심으로 진지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서 지혜를 짜냄으로서 우리민족의 지상과업인 조국통일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학술회의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이흥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비롯해서 관계 실무담당관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저 합니다.

1994년 8월 5일

致 辭

宋 榮 大*

존경하는 재미정치학회 회원 여러분!

마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시어 이번 회의를 더욱 뜻깊게 해주신 한승수 주미대사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이제 10회에 접어든 『미주지역 한반도문제 정보교류회의』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회의를 주관하시고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홍락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분들에게 이홍구 부총리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의가 시작된지도 어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반도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가 폭넓게 다루어지면서 여러 학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의 장으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남북한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다양한 대안이 도출됨으로써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국제화시대의 한반도 통일문제』라는 주제하에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등의 매우 시의성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듣

* 統一院 次官

는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번학술회의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근 반세기동안 그들의 체제를 끌고 왔던 김일성 시대가 종막을 고하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도체제가 김일성 시대의 마지막 정권이 될 것인지 또는 김일성 이후 새로운 정책노선을 지향하는 첫 정권이 될 것인지간에 어떠한 김일성의 사망이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충격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한반도 남쪽에서는 작년에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대전환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물결이 한반도에도 다다르고 있다는 징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정세는 동서 양 진영의 대결구조를 무너뜨리고 바야흐로 개방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은 어느 지역, 어느 국가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동서 화해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

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와 인권이 존중되는 통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이 우선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 관계를 도모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단계 접근방법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상호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고 협력의 장을 열어 가는 화해·협력단계

둘째, 평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남북이 동반자로서 민족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남북 연합단계

셋째, 1민족 1국가의 정치통합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의 민족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바라는 것은 흡수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단계로의 진입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을 제쳐놓고 다른 주장을 하는 태도는 신뢰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참다운 태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남북 합의사항을 조건없이 이행하고 역사적 조류와 민족적 여망이 부응하여 대화와 개방, 변화와 개혁에의 길에 호응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그들의 이중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와 합영법 시행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점차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현실 적응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동구제국의 사회주의 몰락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주석직을 비롯한 권력승계의 향방과 새 지도체제의 대내외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서는 북한은 적어도 당분간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기존 체제와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김일성 사망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상황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정책의 기본틀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지난 6월 28일 예비접촉을 통해 평양에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 주석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분단 반세기만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간의 만남은 일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나간다는 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원칙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간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핵문제의 해결입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분명한 목표와 원칙, 그리고 추진전략을 갖고 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폐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IAEA 사찰과 함께 남북 당사자 해결의 원칙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한 남북 상호사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마침 제네바에서 미·북한 3단계 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대화과 미·북한 대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한·미 양국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이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으로 출범한 문민정부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통일된 조국을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한국의 창조』는 바로 통일조국의 완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온 겨레가 다같이 동참해서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이러한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 문제들에 대해 보다 깊고, 보다 넓은 토의가 격의없이 이루어짐으로써 통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의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보람있는 자리가 될 것을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第1分科：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 北韓 核問題와 國際查察
(박한식, 조지아대)
- ◆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김용제, 퍼시픽대)
- ◆ 核問題 以後의 北韓 變化 可能性
(안병준, 연세대)

北韓核問題와 國際查察

박 한 식*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과 UN을 위시하여 세계 전체를 좌절속에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국제여론에 승복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형편이며 NPT 조인국가로서 평양당국이 취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동은 크게 비판을 받고 있으나, 그 비판은 그들의 행동결정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북한의 태도는 미국정부로 하여금 때로는 좌절과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의 여론은 북한을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이고, 예측불능이고,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단정짓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마침내 IAEA와 미국으로 하여금 경제제재와 군사적압력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정책을 취하게 하였고 마침내는 전쟁직전의 위기로 발전되게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의 사태에 이루어진 Jimmy Carter 전 미국대통령의 북한방문(1994년 6월)은 고조되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인것 같다. 또한 뒤따른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은 여러가지 문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평양은 미국과 다른 관련된 나라들의 상당한 양보가 뒤따르지 않는한 쉽게 IAEA의 전면적인 사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된다.

* 조지아대

그러면 과연 평양은 무엇을 원하며 왜 그러한 요구를 하는가? 무엇보다 평양의 그러한 의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전에는 쌍방과의 어떠한 합의를 보겠다는 노력은 다 헛것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의미에서, 핵문제를 위시한 북한의 정책의 목적과 그에 따른 행동원인을 토론해 보고저 하는데 있다. 이러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담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뿐 아니라 이북에게 더 많은 시간만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만일 미국이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양보할 용의가 있을 경우에는 또한 여기에 대처하여 이북의 심리작전과 뒤따른 행동을 즉각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이러한 분석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본다.

북한의 지배적 정책목적에는 두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주체사상에 나타난 이념적 차원이며, 둘째는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적인 면이라고 보겠다.

주체사상과 이념적 기반

북한은 IAEA와 NPT에 대해 완연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1987년에 북한이 NPT조인에 서명한 이유는 평양의 핵무기에 대한 세계적인 의심을 완한시키기 위해서거나, 혹은 모스크바의 압력, 혹은 단순히 김일성의 판단의 착오였을 수도 있다.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북한은 자체가 곧 제국주의적이고 차별대우에 기인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수없이 많은 핵무기를 스스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작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방어 목적으로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도덕적으로 불공평

하다고 믿고 있다.

주체사상은 자주국방을 이념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김일성은 한국이 일본에 침략당한 것도 군사적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김일성은 그의 자서전(세기와 더불어)에서, 일본의 한국합방의 원인이 바로 군사적 방어능력의 부재였다고 말하고 그 당시 미국과 다른 외국에 도움을 요청한 그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이 점에서, 비록 냉전시대중에서도 국가방위만은 중국이나 소련에 결코 의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이 군사방위산업을 그 국가정책의 제일의 우선으로 삼아온 것으로 알 수 있겠다. 그러한 결과로 이북의 군사산업과 방위과학(Defense science)의 발전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사람들은 핵무기를 자기나라에 보유하는것이 이러한 국가방위의 목적을 영원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의식구조 때문에 곧 북한은 핵무기문제에 대해 결코 양보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또한 IAEA와 미국에 대한 도덕적 불신임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보겠다.

실용주의(Pragmatism)와 국가이익

평양이 예측불능이고, 비합리적이고, 미친사람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평양이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과 전략은 그들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넓히겠다는 뚜렷한 목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몇가지로 북한이 핵무기를 발달시킨 동기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1) 정통성 利害(Legitimacy interest)

북한은 체제정통성에 관해 두가지의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김정일이 김일성의 정치권력을 계승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의 카리스마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김정일은 자기아버지같이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싸운 경력이 없는 것이다. 김정일을 예술과 철학면에서 천재적인 지도자로서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면으로 그나라를 외세에서 방어하고 지켜나온 경력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일을 1992년 원수로 호칭하게 되고, 인민국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최대강국인 미국과 맞서 싸운다는 거창한 무대를 만들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북한당국은 김정일을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 국민앞에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잊을 수 없다. 두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이라고 보겠다. 전 소련공화국이 넘어지고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됨에 따라, 평양은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계는 북한도 동독처럼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남한에 흡수될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었다. 남한정부는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크나큰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염려까지 하게 되었고, 이러한 불리한 여건들은 북한을 큰 공포속에 몰아넣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핵무기 문제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민족주의 정신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남한의 학생들, 지식인들, 노동자들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주체사상에 설득되어 날이갈수록 북한의 정

치체제를 지지하는 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것 같다.

평양주체과학원의 박성덕교수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 한 이유는 경제적인 우월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독이 가졌던 민족주의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동독이 외세에 의존한 나머지 자기 방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치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덧붙이고 있다.

(2) 자존심 및 정치적 영향력

북한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본주의의 병폐와 不正義를 막고 비뚤어진 사회주의를 바로잡아 가야 할 역사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파괴적인 테러행위에 대해 큰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핵문제에서 만일 북한이 특별사찰에(Special Inspection) 응한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굴욕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평양은 그들이 지금까지 NPT의 조인국가로서 모든 핵 시설을 IAEA에 보고했으며 지금까지의 사찰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 “특별사찰”만은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로 주권국가에게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이러한 북한이 가진 “체면유지”라는 요인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Carter대통령의 방문이 가져다준 상징적의미는 이러한 점에서 정당한 국위를 인정받는데 실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핵문제는 북한에게 의미깊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북한의 위치가 중요하게 들어나게

하는 역할도 하게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북한도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그중에서도 북한이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은 제삼세계진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삼세계 국가들도 역시 한반도가 당한 제국주의의 희생물로서, 혹은 항거하면서 끝까지 버티어나오는 뼈아픈 경험을 한 후 민족주의로 재생한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평양은 핵무기보유를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의 국가위신과 국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저 하고 있다.

소위 “핵카드”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최대의 양보를 받아낼 뿐 아니라 무기개발을 더 활발히 진행하고저 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저 하고 있다.

(3) 경제적 이점

1990년이래, 평양은 식량 등 기본 생활 필수품을 비롯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해 오고 있다. 이 원인을 잇달은 흉작에 기인한다고 하고 있으나, 점점 줄어드는 GNP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중점을 산업개발과 국제무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서 1992년 10월에, 평양은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인하고저 하는 일련의 법칙을 만들어내었고, 1994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소비품 생산의 중요성과 국제무역의 확장(특히 자본주의 선진국가들간의)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a) 국방비

북한사람들은 과중한 국방비가 곧 자기들의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어느나라도 그 국가전체의 GNP의

30%을 국방비에 쓴다면 결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 사실 북한은 이러한 막중한 국방비 지출을 실로 오랫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이룩할 계기를 찾지못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군사비를 줄이고 남한과의 군사적 대결에 대비할 수 있는 한 수단으로서 핵무기 개발의 실리성을 찾게 된 것이다.

(b) 외화

북한이 국방과 과학의 발전을 위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기산업 팽창이 전혀 경제성이 없는것은 아니다. 북한의 무기판매는 외화획득의 가장 큰 원천(source)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의 나라들이 북한의 SCUD미사일을 수입하고 있고, 이란과는 최근에 몇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SCUD missile과 또 거기에 관련된 기술제휴를 하기로 합의 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NPT의 효율성이 줄어들게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가져다줄 경제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4) 기술상의 이해

기술발전은 연쇄적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핵무기와 핵동력은 서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단 기술이 발전되면 그 자체가 급진적 효과를 내며 발전해 가게된다. 북한이 이러한 “자생적기술”을 얻게되면 그걸로 인한 국가이익은 외국의 경제제재에 종용당하지 않는 막대한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북한의 기술발전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해도, 자기나름대로 교육, Research 등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고등학교부터 학생들은 반드시

시 과학 project에 꼭 참석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것을 그들은 “장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고있다. 이런면에서 북한은 핵무기 기술발전은 곧 전체 기술발전의 일부분이라고 믿고 있는것 같다.

북한이 겨냥하는 시나리오

지금까지 필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동기와 행동원인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았다. 이러한 원인들은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주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큰 이해관계와 연결된것들 이라고 본다. 만일 IAEA나 미국의 경제제재가 북한의 정치체제자체의 존속을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 북한은 조금더 신중하고 화해적인 태도로 회담에 임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제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제재가 수십년 계속하여 왔다고 분석하며 또한 그와 같은 제재가 그들의 체제를 위협하는데는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1) 경제제재

핵무기 문제의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때, 평양은 경제제재는 곧 전쟁을 의미하며 거침없이 반격을 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가 진정이었는지 혹은 협박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제재가 평양의 정책을 변화시키는데는 하등의 효과가 없다는 점은 명백한 것 같다. 북한과 무역관계를 가진 나라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남한 등이고 미국등 서방국가들과는 아직 무역관

계가 전연 없는 상태이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무역품목들은 소비품이나 원자재들이며 소규모적이어서 이것은 곧 북한의 경제가 이러한 외국과의 무역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고 본다. 이중에서 북한의 원유공급의 7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고 그외에도 식량과 소비품들이 중국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그들이 미국편에 섰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극히 꺼려하고 있음을 표시했다. 3월 21일, IAEA 회의에서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결의에 투표하는 것을 기권하기까지 했다. 만일 중국이 UN안보리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반대하겠음 강요당하면 마지못해 응할지는 몰라도 결코 그와같은 결의를 집행함에 있어서 성의를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활동은 대부분이 친북 재일교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총련에 의해서 연간 약 6억\$의 현금이 전달되고 있다는 추측이 어느정도 정확성을 가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적지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기를 원하지만 일본 Yen이 국제시장에서 제3국을 통한 현금거래가 되는 한 이를 막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본다. 또 한가지는 북한이 이란과 같은 중동지역 국가와 원유거래의 협정을 이루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막는길은 공공해역(open sea)을 군사적인 방법으로 봉쇄하는길 밖에는 별다른 방지책이 없게 될 것이다. 또한 Russia를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간의 무역거래는 1980년이래 점점 감소되어감으로써 지금은 거의 무거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남한의 경우를 본다면 남한의 극소수의 회사들이 Hong Kong과 같은 제삼국을 통해서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으나, 북한경제에 결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경제제재에 전연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해석은 아니다. 다만 그 영향의 정도가 평양의 정책을 바꿀만큼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고려할 것은 북한은 이미 과거 몇 10년간 경제적인 곤난을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북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서방국가와 일본으로부터 무역금지(embargo)를 당해왔고 그들의 경제상태는 이미 빈곤상태에 다달아 있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에게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새로운 사실이 아닐뿐 아니라 그들은 이것을 정부의 잘못으로 규탄 하지는 않는다.

그와 반대로, 그들은 이것은 곧 외세와 제국주의적 세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믿고 더욱 단결하여 국가를 섬기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2) 군사적 측면

군사적제재야말로 UN이 취할 수 있는 궁극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경우에, 미국과 남한이 믿기로는 이러한 군사적제재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가져오거나, 김정일정권의 약화와 지도들간의 권력투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다 일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본다. 혹자는 1990년 여름에 Iraq에 가해진 "Desert-Storm"과 같

은 작전이면 북한을 파괴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과연 북한이 그런 공격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어 반격의 힘조차 없어지리라고 예측할 수 있겠는지 의심스럽다.

여기에서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공중기습공격의 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북한이 몇개의 땅굴을 만들었고 또한 지하 100m에 지하철을 만들어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었고 사실 그 속에 어떠한 군사력이 잠재해 있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때 과연 UN군이 모든 군사기지를 찾아서 파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며, 북한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미국과 남한에 대하여 보복행위를 감행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먼저 공격을 가해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음은 감행해야 한다. 그런경우에 수백만의 남한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며 그 결과는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경우 북한정부가 비논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권력을 잃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그 피해는 북한보다 남한이 더 크게 입을 것이다. 남한정부는 이러한 남북간의 교전으로 인한 위기를 초래한데 대해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자유국가인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큰 불안과 동요에 사로잡힐 것이다. 북한역시 지도층은 권력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 사실이나 완전하게 체제붕괴나 전복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가지 지적할 사실은, 국제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는 점이다. 한나라를 파괴시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히는 장면들이 그대로 세계에 방영될 것이고 세계는, 특히 제삼국가들은 결코 동정을 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단순히 NPT에서 탈퇴하는 것은, Iraq가 급작스레 Kuwait를 침략한 것에 비하면 그와같이 큰 규탄의 대상이 될수는 없다고 본다. 어떤나라들은 북한이 국방과 국가이익을 위해 핵무기를 가지는데 대해 이해와 동정을 표할 수도 있다. 또한 “제국주의”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남북간의 이념대결이 제기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NPT가 어떤나라들에게는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반면, 약소국가들에게는 금지하는 것이 곧 제국주의적 행동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핵무기 문제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군사적조치는 미국과 세계전체에 훨씬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보고싶다.

카터요인

전 미국대통령 Jimmy Carter는 1992년 11월에 북한을 방문하도록 초청을 받았다. 처음초청은 1992년 여름, 미국대통령 선거전, 즉 핵문제가 큰 외교정책으로 대두되기전에 이루어졌다.

그당시 Clinton이 민주당후보로 당선되었고 Carter대통령 방문이 민주당득표에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되어 그의 방문을 연기하도록 종용했었다. 그후 Clinton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계속 북한은 Carter대통령 방문을 원해왔으며 마침내 그도 방문요청을 수락했으며 전위대로서 Dayle Spencer(카터센터 분쟁해소국장)을 평양에 보낸바 있다.

그러나 Clinton대통령은 대통령당선이후에도 여전히 Carter의 방북

을 제지했었고, 그 정부시책에 호응하고자 하는 Carter는 방문을 미루어왔었다. 그러던중 1994년 6월에 마침내 미국정부는 핵문제타결을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별 승산을 보지 못한 나머지 마침내 카터씨의 평양방문을 허락했고, 떠나기전날 상세한 Briefing을 통해 정부입장을 그에게 전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카터대통령은 다른 공식적 외교 수단이 전혀 작용하지 않을때에 효과적인 평화조성의 역할을 해온바 있다.

카터대통령의 북한방문은 핵무기문제뿐 아니라 다른 한반도 문제에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김일성대통령은 기대이상의 화해적인 입장을 보여줌으로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는 연변의 원자로시설의 가동을 전면 동결시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남한의 김영삼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이러한 태도는 “전쟁의 마수”로 알려진 김일성의 이미지와는 달리 꽤 화해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는 태도였다. 따라서 카터방문후 3주내에 모든일들이 급속히 진전되기 시작했다. 미국-평양간의 고위회담이 Geneva에서 원활히 시작되었고 서울과 평양의 정상회담을 7월 25일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카터방문은 새로운 외교의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서방국가들의 북한과 김일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카다란 역할을 했다.

김일성의 사망

카터대통령이 가져온 이러한 모든 희망적인 발전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일어난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또한 그의 사망은 카터대통령의 방문을 더욱 의미깊고 중요한 사건으

로 만들었다고 보아진다. 만일 김일성의 사망이 이러한 대화의 창구와 교섭의 가능성을 열어놓기전에 일어났다면 세계는 평양에 조문을 보내기는 커녕 오히려 그의 사망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뻐했을지도 모른다. 김일성의 최후의 인상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게되었고 그의 화해적인 정책은 후계자인 김정일에 의해 그대로 계승될 것이라고 세상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해 주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확실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어떤 급속한 변화가 당장 일어나 북한의 정통성의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은 없는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핵무기개발이 추구하는 본질적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김일성 생존시와 대동소이한 정책과 전략을 펴낼것으로 예측된다.

평화적 해결모색

지금까지의 분석에 기초하여 볼 때, 과연 핵문제가 금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의문하게 된다. 평양은 이제 핵무기생산의 의혹을 덜어 준다는 조건으로 국가안전보장, 경제적지원, 정치적승인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본다. 이전에 분석해본대로, 이러한 목적들은 이념적, 또한 실리적인 이유에서 추구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강경책이 아닌 화해로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노력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IAEA는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협상에는 광범위한 일괄타개가 포함될 것이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평양당국은 핵무기 개발의혹을 제거시키는 댓가로 경

제적측면에서 본 경수로 지원, 안보적 측면에서 본 한반도에 대한 핵
우산제거, 정치적측면에서 대미국교정상화를 주장할 것이다. 만일 북
한이 김정일 체제에와서 옛날보다 더욱 불합리적이고 예측불능의 자
세로 변하여 김일성과 Carter가 합의한 문제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
다면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생산문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비합
리적인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은 포기하기 어려운 커
다란 댓가를 기대하고서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북한을 어떠한 강압적인 방법으로 설득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경우 그들은 보복할 능력이 있으
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체사상에 침취된 신념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곧 북한사람들의 생명선(生命線)이기
때문에 외세에 굴복하는 것은 곧 국가자체의 정통성을 사멸시키는 것
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볼때 평양은 이러한 국가이익과 목
적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해왔다고 보겠다.

동시에 이 논문에서 분석해온데로,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방법만
이 전세계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하고, 단 한가지 합리적인 방법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김 용 제*

I. 머리말

평양의 핵문제는 서울, 주변 4강 내지 전세계에 뜨거운 갑자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반도는 극동에서 냉전의 마지막 산물이다. 한반도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은 절반으로 두동강이 난 북한이 초강대국인 미국과 일년반 이상 핵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는 매력은 무엇인가 의심을 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양극 틀에서 남북한 관계와 극동지역에서 수수께끼 같은 영향을 가져왔다. 북한 핵개발과 남북한 관계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긴장감은 전쟁극에 가까이 가고 있다.

난국의 중요 요소는 1994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의 활동을 평양이 중단시킨데 있다. 1994년 6월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에 의하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이 영변 원자로 연료가 핵무기를 만드는데 변경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 16개월간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간에 평양핵개발의 검증을 하도록 방안을 조치해 왔다. 평양은 처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의 영변 원자로를 조사하도록 초청하고 또 이들에게 제재를 가한후 일정 한도된 영역에만 허용해

* 퍼시픽대

왔다. 사찰팀은 북한이 연료봉 교체를 급속히 진행, IAEA는 플루토늄 추출량이나 플루토늄이 비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하고 있다.¹

빌 클린턴은 우방국과 기초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 평양을 제재하는 국제연립을 시작한다고 언급을 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다.² 워싱턴, 서울과 동경 협의하에 유엔 제재안을 시작했다. 평양은 어떠한 제재안도 전쟁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³ 평양의 제재안은 각국의 국가이익, 전쟁위협, 즉각적 지구촌의 통신, 국제협력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평양제재의 차선책을 구하던중 클린턴을 지미카터카드를 사용했다. 카터카드는 북한 핵문제 대한 빌클린턴 행정부의 마지막 카드였다. 만약 카터 개인외교나 비둘기파가 평양의 위기를 해결치 못했다면 북한에 대한 강경책으로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었다.⁴ 카터의 임무는 평양의 의욕적인 핵개발에 대한 일년반 동안 곤경에 돌파구를 찾는 긍정적인 영향을 마쳤다.

이 논문의 목적은 평양의 핵개발의 현재 상태와 남북한 관계의 장래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논문은 북한 핵개발의 이론적 근거와 실질적인 문제와 남북한 관계의 미래전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끝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측면에서 평양과 서울이 전쟁은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적절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결론은 21세기의 국제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탈냉전시대에 핵전쟁이 날 경우 살아남아 있기 위해서 핵문제를 바꿔야 한다. 이 논문은 평양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가지 정책 추천을 제시한다.

II. 평양 핵문제의 이론과 실제

평양 핵문제의 이론과 실체는 다음의 3가지 질문과 관련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뜻은 무엇인가? 북한은 그들의 핵개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와 북한은 서방국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원조를 받기 위해서 핵개발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평양 지도자들을 핵문제를 주체 철학 미명하에 그들 국가 이익에 제일 중요한 가치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북한의 핵개발의 가능성을 국제사회의 외교승인, 경제원조, 주체(자주, 상호의존의 뜻은 제외) 철학하에 노벨 평화상을 겨냥한 유형, 무형의 보상을 워싱턴으로 외교 양보를 받도록 이용하고 있다. 김주석은 사상전에 평양 핵문제를 평양에서 7월 25일~27일간 남북정상회담을 열도록 이용해 왔다.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서 후에 분석하고자 한다.

평양의 핵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핵무기개발의 기술적인 용어는 무엇이고 또 북한 핵문제에 숨은 경과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서방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간직하고 있다. 핵무기를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을 분리된 플루토늄이나 고도의 농축 우라늄에 의한 분열성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다. 1980년 평양은 영변에 일년에 일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5MW 실험용 원자로를 갖기 시작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 238의 중성자에 의하여 실험용 원자로 내에 남은 찌꺼기이다. 북한의 실험용 원자로는 흑연형 감속체와 가스 냉각제로 1986년부터 가동되어 왔다. 인공위성 탐지기에 의하면 워싱턴을 핵폐

기물 저장소로 의심되는 2개 미신고 시설과 재처리 시설 “방사화학 실험실”을 알고 있다.⁷ 평양은 5MW 영변의 원자로를 100일간 1989년에 폐쇄한 후 8100개 연료봉을 추출했고 추후 계속 기회를 가질 수 없도록 플루토늄을 변경했다.⁸ 국제사회에 많은 사람들은 평양이 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그레이프 프루트 크기에 농축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그레이프 프루트 크기에 농축 플루토늄(수천개의 핵 연료봉)은 저수탱크의 연못에 있으면서 방사선을 식히고 있다. 영변의 5MW급 원자로에 연료봉을 식기전에 재장착할 수 없다. 워싱턴과 서울은 2개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무기 제작 플루토늄에 냉각 연못에 재처리 과정을 걱정하고 있다.⁹

1994년 4월 3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NBC-TV에서 평양은 이미 1개 또는 2개의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페리 장관에 의하면 워싱턴은 평양의 핵무기 개발을 현수준으로 동결하고 만약 평양이 핵무기를 소유할 경우 소급해서 북한의 핵보유를 막겠다고 말했다¹⁰ 페리 미국방장관의 성명은 1993년 11월에 발표한 미국의 대북한 핵무기 불허의 미대통령 빌 클린턴 말과 일치되지 않는다. 이 뜻은 북한이 단 하나의 핵무기의 개발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워싱턴은 평양의 한 두개 핵 노하우의 누출은 어쩔수 없다고 인정하는 쪽으로 가면서 더이상 핵무기의 개발을 허용하지 않도록 동결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 같다.¹¹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용어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세력균형에 변화가 오는것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숨은 배경은 무엇인가? 이 배경은 1992년 1월로 40년만에 처음 열리는 북미고위회담장인 미국 유엔대표부로 소급할 수

있겠다. 아놀드 켄터, 미국 전 부시 대통령의 대표는 북한 대표인 김 영성에게 평양이 핵욕심을 포기하라고 제시했다. 김영성이 켄터에게 워싱턴과 평양이 극동의 위협인 동경에 대해서 연합전을 벌리자고 대답하면서 켄터에게 평양을 방문토록 초청했다. 켄터는 평양이 핵욕심을 포기하지 않는한 평양방문을 거절했다. 잘못된 인식과 의사소통으로 고위급회담은 중단되었다. 평양이 부시 행정부하에 중심무대를 차지하지 못했다.

셀리그 헤리슨, 국제 평화 카네기재단의 한국 전문가에 의하면 평양의 핵문제는 1991년 12월에 북한지도자에 의하여 외부 투자와 군사비 삭감을 하는데 실패했다. 평양은 평화적인 경로로 서방국가도 얼마나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의 중간점에 도달했다. 하나 워싱턴이 평양에 줄 수 있는 보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린 워싱턴과 평양의 화해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부시행정부로 계승했고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하여 평양이 뒤로 후퇴하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와중에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은 평양이 1989년 플루토늄을 비밀리 전용했고, 좀더 세밀한 사찰을 요구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직면했었다. 빌 클린턴은 북한의 핵보유를 막아 궁극적으로 여타 지역으로의 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그의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목적이며 민주당의 최우선책인 것이다. 클린턴 팀은 1993년 6월에 평양을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를 방지하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플루토늄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긴박한 대북한 정책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다. 핵외교춤에 장단을 맞추어 워싱턴과 서울은 평양의 일괄타결책에 대

한 철저한 대책으로 대응하게 됐다. 전자는 후자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면 경제원조와 외교관계 개선을 제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도자들은 명확치 않은 정의의 철저한 대책은 그리 달갑게 생각지 않고 철저하고 광범위한 대책에 동의했다.

1994년 3월 1989년 북한이 영변 5MW 실험용 원자로의 가동을 잠시 중단시키면서 국제원자력기구 시찰팀의 제거했던 폐연료봉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아는 측도를 확인치 못하게 막았다. 빌클린턴은 평양에 대해서 양면정책 즉 평양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제재를 가하고 직면과 지미카터를 이용하여 평양의 반응도 알지 못한채 위기 탈출을 위한 외교 카드를 쓰고 있다¹²

평양의 핵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서 북한은 5개의 선택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기 위해 워싱턴과 대화에서 시간별이 작전을 쓰고 있다. 이 뜻은 평양이 워싱턴과 외교전략을 전개했다 중단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과 CIA는 평양이 울연말이면 핵폭탄을 10내지 12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핵물질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국방부와 CIA가 외무부와 백악관 보좌관 보다 덜 관심을 갖게 되며 북한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데 대통령에게 납득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¹³

둘째, 만약 평양이 1~2개 원자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남아공이(80년대 몇개의 초보단계 핵무기를 만들었으나 91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후 모든 핵무기를 해체했다고 지난 93년에 발표)한대로 평양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고 하면 서

방국과 남한으로부터 직·간접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논리는 평양의 초점은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 만료 전 경제원조, 김정일 승계와 같은 현저한 보상과 국제사회와 워싱턴으로부터 외교승인 같은 간접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다. 한두개의 원자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직접, 간접 보상을 받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전체 핵보유국가들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재검토해야 한다.¹⁴

셋째, 평양은 워싱턴과 서울에 대해서 일괄타결책을 계속 주장해왔다. 평양이 원하는 것은 미국,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다. 북한은 나진 선봉 지역, 청진 지역, 원산, 금강산 지역, 신의주 지역, 남포 지역, 경제투수지역을 설정했고 1992년 이후 외국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¹⁵ 이 뜻은 북한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서방으로부터 경조원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이다. 제3단계 북미고위급회담이 양국사이에 공통점을 다루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7월 8일부터 14일간 열도록 되어 있었다. 워싱턴이 요구하는 공통점은 북한이 추출한 사용후 8000개 핵연료를 제3국에 인수하게 하거나 재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된 플루토늄 역시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지하콘크리트에 매장하는 것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아시아 발전 은행으로 차안을 받거나 흑연 감속형 원자로의 경수로 건설용으로 대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경수로 건설용 차관은 20억 달러선으로 수년간 시간이 소모되며 경수로 원자로는 소련식의 흑연원자로와는 달리 플루토늄 생산율이 적은 대신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¹⁶

북한측이 요구하는 것은 핵무기 배치 및 선제불사용 약속과 1953

년 한국전 이후 워싱턴이 가한 경제제재 해소와 관련한 방무 및 다자간 협정에 의한 외교대표부 설치를 포함한다. 워싱턴을 1개요구 사항을 주장하는 반면 평양은 3가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혹자는 북한의 일괄타결책과 남한의 포괄적 타결책을 합친 일치된 타결책으로 상호간 줄것과 받을것을 동시에 이행하고 양자 모두가 승자가 되는것을 주장할 수 있겠다. 일치된 타결책을 동시에 줄것과 받을것을 동시에 교환하고 양자 모두가 동등한 결과를 영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북한은 워싱턴을 상대로 외교를 전개하다가 마지막으로 핵확산조약을 탈퇴하는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핵확산조약탈퇴에 선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점을 알고 있다. 북한은 아주 작은 나라로서 핵확산조약탈퇴전략으로 전세계에 이목을 끌었고 또 이 전략에 한계성도 느끼고 있는것 같다. 만약 워싱턴이 평양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위협을 줄때 현재 진행되는 연극은 위기로 치달리게 될것이다. 평양은 경제제재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있다.¹⁸

다섯째, 미국과 서방국가로 실질적인 경제 외교 보상을 받은 다음, 북한은 그들의 핵외교에 성공을 김일성지도력과 주체사상에 돌리면서 낮은 정치 즉, 핵문제로 부터 높은 정치인 통일로 옮겨간다고 보고 있다. 평양지도자는 북한에 의한 장래통일을 달성하는데 핵문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두번째 질문인 “북한은 핵개발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있나?”에 대답은 “아니오”다. 평양은 서울과 워싱턴과 군사대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일성은 제2차 대전과 중국의 1964년 핵개발을 통해서 핵무기에 위력을 알고 있다. 김일성은 평양이 포화

로 서울을 파괴할 수 있는 위협이 있는것 같이 미국군이 군사전개로 북한을 위협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 재처리 공장을 파괴할 수 있는 미국과 서울에 핵위협을 느끼고 있다. 만약 양쪽이 핵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많은 한민족의 희생과 더불어 평양은 패배할 것이다. 북한은 평양정치체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핵프로그램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평양은 1년반동안 2가지 핵전략을 워싱턴과 서울을 향해 써 왔다. 하나는 Samson's option(삼손의 선택)이다. 평양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때 삼손처럼 사원을 밀어 넘어뜨려 모든 사람들(국제사회)과 동반죽음을 맞는 극단적 최후 수단을 쓰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보듯이 삼손에게 약점이 있다. 북한도 마지막카드로 제한된 선택이 있는 법이다.¹⁹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문제는 핵개발 자체를 위해서 평양의 국가이익에 마지막카드로 싸울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쌀라미 전략(Salami Tactics)은 또 하나의 북한의 핵전략이다. 이 전략은 핵 협상 과정에서 줄것은 아주 작게 주면서 새로운 조건을 계속 첨가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보다 많은 것을 받아내는 외교전략이다. 평양은 쌀라미 전략을 써서 5MW 원자로에서 나온 핵연료를 약간 제거하는 대신 ①워싱턴, 동경, 서울로부터 외교승인, ②일본, 한국과 유럽국가로부터 경수로 원자 기술로 영변시설을 대치, ③북한 핵 종결로 미국이 북한에서 핵무기 배치 및 선제 불사용으로 북한 안전 보장의 조건을 받아 내는 것이나, 제3단계 북미고위급회담이 1994년 7월 8일에 열렸다.²⁰

마지막 질문인 “북한은 서방국이나 국교정상화와 경제원조를 받기 위해 핵개발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에 대한 대답은 “예”이다. 이미 서술한대로 북한은 외교승인, 새로운 경수로 핵기술, 아시아발전은행으로부터 차관이 평양의 핵프로그램과 바꾸는데 충분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정일 지도자 밑에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중요한 목적이다. 핵카드를 사용하는 길은 김정일에게 간접, 직접 보상을 받는 수단이다. 간단히 말해서, 평양의 핵문제의 이론과 실체는 서방세계와 남한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한반도에 돌리고 워싱턴의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 정책에서 워싱턴의 당근, 평양의 채찍으로 변했다.

Ⅲ. 남북한 관계의 현재와 장래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은 82세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중 가장 오랜 독재자로서 통치해 왔던 인물이며 그의 죽음은 김영삼 한국대통령과 핵긴장과 장기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몇주전에 사망한 점이다. 최근 김일성은 미 전대통령 지미카터와 만나 평양 핵문제를 동결하고 제네바에서 제3단계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재하며 김영삼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기로 예정했다. 김일성의 사망소식은 현재 남북한 관계의 예정표에서 알수 없는 미래로 바꾸어 놓았다.²¹

현위기 상태와 알수 없는 미래의 남북 현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이전 제3단계 북미회담과 첫 정상회담을 가능한 시나리오와 더불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전술한대로 김

일성은 제3단계 북미고위급회담을 제네바에서 성취시키기 위해 평양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기로 결정했다. 일년전 미국측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와 북측 회담 대표인 강석주의교부장은 김일성주석이 핵보유국이 되는것을 포기하나와 또 국제사찰을 영변원자단지에 맞나를 알기위해 또 평양의 핵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났다. 그러나 평양의 인정도 아니고 부인도 아닌 그리고 워싱턴요구에 의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원자 시설에 감사를 반대함으로써 어떤 합의도 보지 못했다. 1994년 6월 평양은 영변 5MW 원자로에 대한 연료봉 교체 작업을 국제 사찰 없이 워싱턴과 서방수로를 혼란시키면서 감행했다.

제3단계 북미고위급회담은 1994년 7월 8일 제네바에서 7월 25일~27일간 평양에서 첫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순조롭게 열렸다. 양측은 평양의 흑연감속형 원자로의 경수로 건설용 대치 북한 정권 체제 유지 보장과 워싱턴으로 부터 외교승인에 대한 요구조건에 동의했다. 평양 역시 “대화과 평화적 수단”으로 핵문제 해결을 한다는 유연성을 보였다. 이 회담은 7월 9일까지 계속하고 몇일 쉰다음 계속회담을 하면서 각국에 의논을 교환후 정의하도록 되어 있었다.²²

김일성주석의 급작스런 사망은 김일성의 장례식 7월 19일이후로 미루고 남북정상회담도 무기한 연기를 하게 되었다.

새로운 질문은 누가 김일성을 계승하나다. 52세의 김정일은 지난 20여년간 북한의 2천3만의 주민과 1.2만 군사력을 통치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²³ 김정일은 1994년 7월 17일 687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소집하여 김일성장례식 동안 주석으로 등주하려 했고 145명 당중앙위원회 의원을 동시에 소집하여 노동당 총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회장

의 형식적 절차를 받으려고 했다. 전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과 당중앙위원 의원들은 김일성 장례기간동안 평양에 도착하여 장례를 치루면서 김정일을 지지했다.²⁴

평양의 정권교체에 대하여 김정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체제에 2가지 견해가 있다. 김정일의 성격, 능력과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별로 없다. 첫째 견해는 김정일이 방탕아로 나쁜 사람이다. 김정일은 북한인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지만 그는 북한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않고 있는 인물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기쁨조에 스웨덴 미녀를 수입해 왔고 빠른 스포츠자동차와 20,000 외국 영화와 비디오를 즐기는 이상한 사람이다. 그의 난폭한 성격은 1983년 버마 남군에서 한국의 17명의 장관을 죽인 사건과 1987년 115명의 승객과 KAL기를 공중폭파한 장본인 이라는 것이다.²⁵ 김정일은 1991년 12월에 군무의 실권자로 등장했다. 나쁜 방탕아의 이론은 서울과 인접국가을 향해 앞으로 평양의 플루토늄을 사용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점이다. 김정일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장본인이며 북한의 핵무기를 만든다는 위협으로 국제긴장을 조성한 사람이란 면이다.

2번째 견해는 김정일이 쓸만한 좋은 사람이다. 자기부친인 김일성과 달리 김정일은 김일성대학에서 4년제 정기대학부를 졸업했고 두만강지역 자유무역지대를 1984년 9월 설치하는 건이나 해외 외국투자를 끌어들이는 1992년 법안과 같은 서방국가에 대한 이해심과 개방적 비존은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다. 김정일은 미국 CNN 텔레비존을 즐기면서 북한 젊은층에 디스코춤이나 장발을 허용하는 인물이다.²⁷

김정일은 경제개방과 북한의 외국을 싫어하는 점을 이해시키는 개방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은 자기정권 유지에 필요한 외교승인과 경제도움을 받기위해서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다.

1994년 7월 11일 이태리 나폴리에 G7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미국무장관 웨렌 크리스터머에 의하면 미국은 김정일이 체네바에서 시작되는 북미회담과 남북정상회담에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²⁸ 이뜻은 한국측에서 김정일을 사납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반면에 미국측인 좋은 면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김정일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로 그의 개성이나, 경험, 능력에 대한 정보 미비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김정일의 개성은 혼합적으로 서술된다. 김정일은 1972년 3인소조원 창설부터 1992년 4월 원수를 1991년 12월 군사 최고사령관을 통해서 거의 20여년에 걸쳐 권력체제를 이어 받도록 준비해 왔다. 김정일은 그의 계모 김성애와 군대에서 노련한 그룹에 저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지난 20여년동안 생존자로서 과시해 왔고 경험있는 권력 추종자가 되었다. 김정일의 능력은 앞으로 도전을 받게되며 또 예상되기는 북한 정치 체제가 보여주듯이 제2세대를 대표해서 중용적이고 개혁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²⁹

현재 정상회담을 무한정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이 포기나 없는것으로 하기보다도 연기를 한다는 자체는 희망적인 표시라고 보겠다. 평양이 긴박한 시기에 새로운 후계자를 결정하는 동안 서울은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서 북한의 정치발전을 가깝게 주시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는 유효하다. 남북한은 한반도에 테탕드가 오

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한관계 미래를 생각해 볼때 서울, 평양, 한반도를 단기, 중기, 장기적 시나리오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A. 서울 측면

서울에서 남북한 관계를 단기, 중기, 장기적 시나리오로 볼수 있겠다. 단기적 시나리오에서 서울은 한국측에서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지만 정상회담을 포기하기보다는 평양의 연기를 환영하고 있다. 서울은 핵문제 해결을 제1단계로 또 정상회담을 제2단계로 해결하는 면에서 안정과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고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20년간 계승하도록 준비하면서 김일성 장례식을 위원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북한의 마스크업은 주석궁에 안치된 김일성시신에 통곡하는 장면만 아니라 김정일이 그의 왼쪽 팔에 단상체에 표시인 검은 안장과 흰색의 모택동 단장을 보여 주었다. 김정일은 북한의 안정과 견고성 및 질서를 회복하는데 가장 적절한 선택이다.³⁰ 김일성의 급사는 남한의 대북한 정책을 수정하도록 바꾸어 놓았다. 제2대는 정통적 주체 사상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김정일이 오랫동안 그의 정권을 끌고 간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다. 김정일 국내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서울의 중간 시나리오는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서서히, 조심스럽게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다. 워싱턴과 평양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남북한 관계 순서는 한반도 문제를 워싱턴에서 한국인에게 옮기면서 평양을 국제 사회 일원으로 만들게 될것이다. 서울이 원하는 점은 평양을 냉전으로부터 테탕트로 바꾸는 점진

적 과정을 의미한다. 서울의 정력적이고 적극적인 재벌들이 처음에는 특수경제지구와 북한 지역에 경제원조를 시작할 수 있겠다.³¹ 한국 경제활동은 남북한 정치 사회 군사비에 따른 긴장 감축을 하면서 북한 정책가와 주민을 도와 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서울의 자세는 서방국의 자본과 투자가 남한과 북한에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중간 시나리오의 중요한 점은 서울과 평양 사이에 평화공존과 신뢰회복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한국기업체는 북한 경제를 돕기위해 선의무 경제원조를 유도하면서 남한기업인이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전에 북한의 내부 경제체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³²

장기적인 시나리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타협 내지 절충된 통일안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인은 급작스럽고 동독에서 보여준 북한 경제 붕괴를 피하면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원한다. 서울의 절충 통일안은 평양의 점진적인 경제계획에 의한 대안을 부추기는 것이다. 북한이 억압적이고 위태로운 정권을 유지하면서 중국식 개방 내지 점진적인 대화에 의한 통일을 남북한간에 경제 간격을 좁히는 것에 타당하다고 본다. 예컨대 북한 개인 연소득이 943달러인데 반해 남한은 북한보다는 7배나 넘는다. 남한은 급작스런 독일식 통일안은 피하고 한국경제 번영에 위협을 20~30년간 싸운 공적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1 trillion 이상 쓰는 것이 좋다고 본다.³³ 한국측면에서 볼 때 서울은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단기, 중기 내지 장기적인 남북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B. 평양측면

북한은 김일성의 급사를 김정일 정권을 공고하는데 또 신방향으로

북한을 이끌어 가는데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의 단기, 중기, 장기적 시나리오는 북한 발전에 부정확과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최근 안정추세나 단기 시나리오가 모든 면에서 김정일은 정부, 군사, 정당을 장악하기 위해 권력을 장악할 필요성이 있다. 김정일의 생존은 핵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른 기술이다. 만약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의 약속인 핵동결을 위반했을때 악몽시나리오가 1994년 8월말 저수탱크의 연못에서 방사선을 식히는 수천개의 핵 연료봉을 옮길때 뒤 따르게 될 것이다. 김일성의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정일은 핵문제를 일괄타결책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 없다고 본다.³⁴ 김정일은 미국과 핵문제로 강경책을 쓰는 군부에 욕구를 충족하면서 하루 3끼를 먹는 식량 부족 문제해결에 북한주민에 관심을 사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악화일로에 있는 평양경제란은 북한 주민이 허기에 찰때 “시간 폭탄”이 된다.

북한의 새지도자인 김정일은 핵폭탄과 경제시간 폭탄을 동시에 쥐고 문제를 푸는 면에서 전세계 이목을 한몸에 지니고 있다. 핵폭탄은 미국의 가능한 지상 공격을 피하기 위해 북한 저수탱크의 연못에서 방사선을 식히는 핵 연료봉을 지하에 숨기기 전에 시간의 제한이 있다.³⁵ 북한 경제는 북한 주민에게 하루에 3끼를 공급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있다. 만약 김정일이 북한주민에 필요한 필수적 조건과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경우 북한주민은 김정일체제에 반기를 들 수 있겠다. 북한에 필요한 점은 단기적 측면에서 핵무기를 갖는것 보다도 경제시간 폭탄에 압력을 해소하는 것이다. 핵폭탄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 일본, 대만으로부터 기대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김

정일이 매파군부장성의 지지로 초기에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비둘기파의 도움으로 일본과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느냐는 어떻게 그가 제3단계 북미고위급회담에 처신하느냐에 달려 있다.³⁶

중기적 시나리오에서 핵카드를 포기하면서 그의 정권을 강화하고 중국식 경제개발을 따르고 서방세계와 원만한 외교관계를 김정일이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중기단계에서 김정일은 어떻게 북한에 매파와 비둘기파를 활용하나를 습득하면서 그의 정치체제를 강화하는 면을 습득할 것이다. 김정일의 목표를 김일성 정책을 처음에 따르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면서 그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은 김정일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을 따르면서 변화를 촉구하게 조성되고 있다.

장기적 시나리오는 한국 경제와 경쟁하기 위해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일 것이다. 평양지도자들은 말로는 서울정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적극적이고 침투력있는 남한 경제가 민주화를 가져다 줬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남북한에 공통점을 찾으면서 장래 통일한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 남북한 관계의 현재와 장래는 단기적 측면에서 테탕트로 긴장완화와 협력추구며 중기적 측면에서 북한주민을 도우는 평양경제지원에 의한 경제교류와 협력이며 장기적 측면에서 남북한 사이에 절충과 공통점에 의한 통일한국을 달성하는 것이다.

간추려서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김일성주석 사망후 바뀌지기 시작했다. 현존하는 틀은 김일성의 남북한 이념적 기초에 의한 것으로 대내외적 측면이 하루가 바쁘게 변하고 있다. 평양핵문제와 관련하여 변

혁은 서울 지도자들은 평화공존 5대원칙과 한반도에 외세 영향을 감축시키는 면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사명이 있다고 본다.

IV. 평양핵문제와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6가지 정책추천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서 남북한 지도자에게 6개 정책추천을 한다. 첫째, 김정일은 평양의 핵카드가 워싱턴으로 부터 일괄타결책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쌀라미전략과 삼손의 선택은 김일성 지도하에서 가장 유효한 정책이었다. 하나 김정일의 신체제하에 김일성의 정책을 수정 내지 완화하면서 핵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김일성정책을 따르면서 김정일은 자기 두발로 서기 위해서 북한주민의 요구, 기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 첨가해서 일본 국방백서는 평양의 핵개발은 극동안보에 위협을 주는 요소라고 경고하고 있다.³⁷

둘째, 남북한 정책 수립자들은 그들의 남북한 관계를 냉전개념인 적에서 한민족 공동체 일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온 한민족은 인정하던 부인하던가에 탈 냉전시대에 살고 있다. 냉전시대에 상대방을 적으로 아니면 친구로 흑백논리에서 보아 왔다. 그러나 현재는 공동가치관과 인류형제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공통분모점을 찾기위해 남북한 정책 수립자들은 쌀라미전략과 삼손의 선택을 피하고 국가이익을 초월해서 민족 발전에 치중해야 한다. 남북한 사이에 국가이익에 중점을 두는것은 낮은 정치이며 미래 통일한국에 민족공동체에 중점을 두는것이 높은 정치인 것이다. 어떻게 인간다운 생을 영위하며 자유내지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로 산다는 것은 7천만 남북해

외 한민족에게 주어진 인권이 남북한 관계에 첫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 지도자들은 21세기 국제화와 근대화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공동이념과 한민족에 새로운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 소위 “통일된 한국문화”는 위기로 보는 기대치 않는 결과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 새롭게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남북한 정책 수립자들은 제3단계 북미고위급회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도 꼭 열어야 한다.³⁸

셋째, 김영삼대통령은 김정일의 제2세대가 김일성을 계승하고 있는 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김정일에 대한 자론부족으로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일은 김일성후계자로 등장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준비해 온 점이다. 북한의 경우 구소련, 중국, 동유럽국과 지정학, 역사, 이념적 측면에서 상이하게 다르다. 김정일은 제2세대로 젊은 층으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2세대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며 실질주의자들이다. 그들은 김일성의 기본정책은 따르되 서서히 변혁과 수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제3단계 북미회담과 남북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최근 경향은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일, 빌클린턴 외 김영삼은 단기, 중기, 장기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하면서 남북한 관계도 개선하기 위해서 김일성에 대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칙은 동의하지만 방법론은 시간과 파트너가 바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만약 3 지도자가 일괄타결책에 합의하면 핵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다섯째, 한국정체자들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역할을 변경시켜야 한다. 평양의 핵카드와 자료부족으로 서울은 평양 핵 게임에서 후견인 역할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하에 남한은 핵개발을 추구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포기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제2의 한국전을 시작한다면 결과는 1950년 한국전보다도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 원칙상으로 한국은 일괄타결책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사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이 핵문제에 협조한다면 남한은 경제원조, 외교승인과 점진적 통일과정을 위해서 다른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난 18개월간 서울은 후견인의 역할만 해 왔다. 서울은 동시에 경제원조를 평양에 주고 핵투명성도 받는 일괄타결책을 써야 한다. 한국은 남한의 단기적 국가이익 보다도 전한민족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상회담에 능동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만약 한국이 1994년 말이나 1995년초에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면 남한은 극동에서 군비축소를 하도록 중국, 일본 등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한반도 미핵화를 할 수 있겠다.³⁹

여섯번째, 남북한은 탈 김일성시대에 맞게 이상적, 실질적, 단기, 장기, 상이하고 독특한 한반도에 맞는 통일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신통일 정책은 신시대에 4가지 원칙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1) 탈냉전시대 틀에 맞게 준 전시상태(1953년 휴전부터 현시점) 환경에서 평화환경에 틀로 전환 (2) 남북, 해외 7천만 한민족이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변 4강에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3) 남북한의

국가이익보다는 한민족 공동체에 이익이 앞서는 점, (4) 은 한민족의 요구, 지지와 기대를 포함하여 새롭게 통일 정책 질문을 만들어 한민족의 합의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평양의 정치체제가 바뀔에 따라서 서울의 단기적 남북한관계 장기적 통일정책이 변천하는 추세들에 따라서 공통분모점을 찾으면서 변해야 한다. 서울정책은 북한 정치체도와 북한주민의 이익을 지지 내지 도우면서 평양의 쇄신과 개방정책을 유도해야 한다. 평양은 폐쇄된 강경노선을 피하고 서울에 대한 유화 정책을 쓸 때가 왔다. 남북한 지도자들은 남북한 관계를 증진시킬 의무와 합리적인 국법하에 통일과정을 만족시킬 의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V. 결론

한반도는 극단적인 전쟁 분위기에서 극단적인 평화분위기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 변경은 시계의 추와도 같다. 시계추는 정지할 수 없으며 계속 움직이고 있다. 현재 시계 추가 중간점인 전환기에 와 있다. 한반도가 전쟁과 평화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남북한지도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남북 지도자들은 서로 도와야 할 도전점에 와 있다. 이상적으로 남북지도자들은 광범위한 역사적 관점에서 평양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대내외적 압력에 의하여 김정일정권은 남한과 서방국가에 경제원조를 받는 길 밖에 다른 방안이 없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48시간부터 5년간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있다. 중요한 점은 김정일이 당·정·군을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 지도자라는 점이다. 김정일이 정권을 유지하느냐는 그가 어떻

게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의 제2세대를 대표해서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기술가 출신의 고급관료와 개혁지도층을 활용하고 김일성의 대내외 정책을 잠시 사용한후 자기자신의 정책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있을 21세기 추세를 볼 때 지난 선례를 봐야 한다. 이념 중심의 사회국가는 경제중심의 자본국가를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다. 이상 역사적 전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평양의 신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좋은 징조는 한국이 민주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점이다. 김일성하에 북한은 준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일하에 만약 그가 경제시간 폭탄을 해결치 못하면 김정일은 북한 주민으로부터 많은 반항을 받게 될 것이다. 김정일은 그의 부친의 핵폭탄을 포기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유지하며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베트남모델로 국내경제발전을 속히 시켜야 한다.

단기적 시나리오는 핵문제와 중기적 경제교류 시나리오를 따르면서 통일한국은 통일백서에 기초하여 신통일 정책을 독일모델을 피하면서 달성해야 한다. 한민족 공동체와 한민족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민족은 통일백서와 조사연구를 통하여 미래 민족적 비존을 반영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 통일은 멀지 않다. 남북 지도자들은 모든 차선정책을 내놓고, 기대치 않는 결과를 피하고 한민족이 원하는 통일안을 총선거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남북 지도자가 이상 6개 정책추천을 따른다고 하면 통일과정은 단축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말미의 주석(Endnote)

1. Art pine “U. S. to press U. N. for saucfion on North Korea,” Los Angeles Times(June 3, 1994), p.1.
2. Los Angeles Times(June 25, 1994), p.A12.
3. 『한국일보』, 1994년 6월 3일자 1면 참조
4. Los Angeles Times(June 14, 1994), p.1.
5. 상동(June 21, 1994), p.1.
6. The Wall street Journal(June 15, 1994), p.5.
7. David Albright, “A proliferation primer,” The Bulletin of the Scientists, Vol.49, No.5(June 1993), p.16.
8. “Looking for Lelerage,” Newsweek(June 13, 1994), p.23.
9. The wall street Journal(June 8, 1994), p.1 and Los Angeles Times (June 8, 1994), p.137.
10. 『한국일보』, 1994년 4월 15일자 C5면 참조.
11. 상동 1994년 4월 17일자 C6면 참조.
12. Robert S. Greenberger, “Now U. S., North Korea went from promise to peril in Two Years,” The wall street Journal(June 8, 1994), p.1.
13. “N. Korea Crisis Eases as Inspectors Report No Nucrear Fuel Diversion,” Los Angeles Times(May 4, 1994), p.A5.
14. “North Korea Dewords ‘Higher price’ for Albowing luepectins of ifs

- Nucler Facilities,” Vantage point(Journay 1994), Vol.xvii, No.1, p.19.
15. 남강진 “북한정책의 재조정” 통일한국(1995년 5월) Vol.125, pp. 69-71.
 16. Bruce W. Nelau, “As the Plutonium Cools,” Time(June 4, 1994), Vol.144, No.1, pp.33-34.
 17. 『한국일보』, 1994년 7월 7일자 1면 참조.
 18. 상동 1994년 6월 2일자 C2면 참조.
 19. 상동 1994년 6월 3일자 C9면 참조.
 20. Jim Mann, “U. S Hopes Swiss Talks will Bare N. Korea’s Intent,” Los Angeles Times (July 8, 1994), p.A4.
 21. “Kim Il sung, N. Korea’s Long time Leader, Dies,” Los Angeles Times(July 9, 1994), p.1.
 22. Alan Riding, “U. S. and the North Korean Start Talks on Upbeat Note,” The New York Times(July 9, 1994), p.3.
 23. USA Today(July 11, 1994), p.8A.
 24. Sam Jameson, “Smooth Trausition Seen in N. Korea,” Los Angeles Times(July 11, 1994), p.1.
 25. Ibid., (July 11, 1994), p.1
 26. Ibid., p.10A.
 27. 『한국일보』, 1994년 7월 11일자 C9면 참조.
 28. Los Angeles Times(July 11, 1994), p.A11.
 29. Ibid., (July 10, 1994), p.A10.

30. Ibid., (July 12, 1994), p.A10.
31. Ibid., (July 12, 1994), p.B6.
32. 『한국일보』, 1994년 7월 12일자 C4면 참조.
33. James Stern gold, “South Waits Calmly as North Korean Transition Proceeds” The New York Times(July 11, 1994), p.A3.
34. Los Angeles Times(July 14, 1994), p.B7.
35. Ibid., (July 15, 1994), p.B7.
36. 『한국일보』 1994년 7월 15일자 A2면 참조.
37. Los Angeles Times(July 16, 1994), p.A10.
38. 김용제 “‘통일 한국’ 머지 않다,” 주간시민의 신문 1994년 7월 9일자 4면 참조.
39. 상동., p.4.

核問題 以後의 北韓 變化 可能性

安 秉 俊*

I. 불확실성과 도전

김일성이 사망한뒤 한반도는 불확실성과 도전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과도기는 통일로 가는 가장 위험한 과정이 될 것이다. 불확실성은 북한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며 도전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완전해결하느냐의 문제이다. 긴 안목에서 볼때 한반도의 장래는 김정일정권이 정치논리를 포기하고 경제논리를 선택하여 변화를 시도하느냐가 좌우할 것이다. 여기서 정치논리란 이른바 「김일성주체사상」을 계승하고 동시에 핵무기도 개발하여 자기체제의 생존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논리란 중국과 베트남에서와 같이 개혁 및 개방정책을 도입하여 체제의 생존과 정당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 핵심적인 주제를 부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점을 정리해 둔다.

첫째, 김정일정권은 김일성체제로부터 그와 다른 체제로 가는 과도기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김정일도 김일성의 「주체」노선과 정책을

* 延世大

지속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실제로 그는 어느정도의 개혁 및 개방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이 기로에서 실패한다면 군 및 관료연합이나 아주 혼란스러운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둘째, 김정일은 김일성이 이미 시작했던 핵문제의 일괄타결을 성공시키고 있으나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한대로 핵의 현재 및 미래만을 동결할 뿐 아니라 과거 핵에 대한 투명성도 증명해 주어야 핵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고 대미국교 정상화가 이룩될 것이다. 그러나 군부가 핵무기개발을 생존과 안보의 최후수단으로 삼는 한 그것을 그리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핵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 미해결상태에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도 북한국내정치 변화와 미북한합의의 이행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 한다면 그것은 남북간의 전쟁억제와 균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통일가능성도 배제하게 될 것이며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자극하여 동북아에서 핵경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일종의 개혁정권이 집권하여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논리를 추구한다면 남북간에 진정한 의미의 화해협력시대가 개시할 것이다.

넷째, 통일은 일정한 설계에 의해서 보다는 자충수에 의하여 올 것이므로 우리는 미래지향적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돌발적 변화와 그 결과 초래될 수 있는 위기와 통일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 미국 및 일본은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하여 선제외교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평화, 비핵화 및 화해과정을 통하여 가능하다면 합의통일을 이룩하

기 위해서나 예견할 수 없는 사태가 파생될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국내에서 대북 및 대미일정책에 대한 광범한 합의와 연합을 구성하고 미국 및 일본과도 공동이익 및 가치영역을 확대하여 대외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통일외교를 슬기롭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 김정일정권의 선택:정치 또는 경제논리?

김정일은 이른바 「주체사상」을 계속 지탱하는 정치논리와 개혁 및 개방정책을 도입하는 경제논리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자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그는 그대로 김일성이 이미 구축했던 정치논리를 지속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구사고를 고수하면 할수록 식량, 에너지 및 외환부족등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김정일은 현재 두가지의 큰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그 첫째 목적은 김일성이 정의했던 「주체사상」과 「고려민주공화국」 통일정책을 계승하여 체제생존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을 권력계승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삼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저버리고도 권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김일성이 내세웠던 「조선은 하나」다라는 논리를 고수하는한 남한과는 공식대화를 회피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협상하여, 정전협정을 대체하겠다는 「통일전선」도 계속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기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주체사상」을 고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둘째 목적은 미국, 일본 및 기타 국가들에서 정치적 승인과 경제협력을 얻어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을 국가이익이라 한다면 그의 첫째 목적은 국내이익이라 하겠다. 국내이익은 정치논리를 기초로 하여 추구되어 「조선은 하나」라는 것을 우기고 있지만 국가이익은 경제논리를 기초로 하여 사실상 「두개의 코리아」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핵무기개발은 이 두가지 이익을 옹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김일성 사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기서 정확하게 그리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순화해서 표현한다면 김정일하의 과도기, 군부관료연합 및 체제붕괴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어느 것이 오래갈지는 지도력의 자질, 엘리트의 단결, 경제난을 타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핵문제를 원만히 관리하는 과정에 달려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구조적 변혁을 거치지 않고서 현재의 북한체제가 오래동안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 김정일하의 과도기 정권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개인숭배를 갖지 않고 있는 김정일은 개혁적인 정권이나 붕괴가 일어나기까지 지속할 과도기만 채울 가능성이 크다. 그는 당분간 조선노동당의 총비서, 인민군의 총사령관 및 국가주석으로서 권력을 한손에 장악하게 될 것이다.

지도층과 주민들간의 단결과 안정을 위해서도 그가 구심점에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일찍이 그는 1970년대에 「당중앙」으로서 부상했고, 1980년대에는

「혁명소조」들을 양성하여 권력기반을 다졌으며, 1990년대에는 군의 통수자가 되어 군부도 장악했다. 그가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총리 강성산, 그의 삼촌 김용주, 외교부장 김영남과 같은 원로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의 권력은 현재로서는 안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정일의 인품과 능력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예컨대 그의 건강도 당뇨, 고혈압 및 심장병을 갖고 있으므로 그렇게 양호한 것이 못된다고 한다. 그가 KAL기 사건등 여러가지 모험적인 행동을 지도했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위험한면을 갖고 있다. 중국의 강택민과 양상곤, 캄보디아의 시하누쿠공을 제외하고 그는 외국지도자들을 만난적이 없다고 하니 그의 실체와 행동은 미지수인 것이다.

원칙적으로 김정일은 김일성의 노선을 답습해야겠지만 실제로는 개혁 및 개방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북한 경제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약 20%까지 후퇴하여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먹는 문제부터 그는 해결해야 한다. 1993년 12월에 북한당국은 최초로 제3차 7개년계획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어느면으로 보나 북한은 침몰하는 배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 추세를 번복하려면 김정일은 경제논리를 따라서 중국에서와 같이 개혁과 개방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우선 핵무기개발을 완전하게 포기해야 한다. 이와같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권력핵심부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들의 부패한 생활상이 탄로 된다면 김정일정권은 쿠데타, 내부 권력투쟁, 민중봉기등

에 의하여 전복될 수 있을 것이다.

2. 군부관료연합정권

김정일정권이 몰락한다면 군부관료연합정권이 계승하여 중국식개혁을 위로부터 실시하여 민생문제해결과 안보확보를 시도할 것이다. 1994년 현재 북한에서 등소평이나 엘친과 같은 「개혁파」 지도자들을 발견할 수는 없다. 김정일정권이 당면한 문제해결에 실패하여 실각한다면 북한에서도 개혁파지도자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하나의 집단지도제를 형성하여 합의와 연합을 구성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당독재를 지속할 것이나 동구에서와 같이 시민사회가 희생하여 다당제정치를 도입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라건대 이와같이 중국형의 개혁정권이 출범한다면 그들은 남한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화해협력을 실천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여 핵무기도 투명하게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 하겠다.

그러나 이 정권도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주민들의 기대는 상승하는데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은 부족하므로 욕구좌절의 혁명이 불가피하게 파생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더 많은 개혁을 도입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도 중국에서와 같은 「실사구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것을 허용한다면 북한당국이 우려해온 「평화이행」이 일어날 것이며, 중국의 천안문사건에서처럼 정권타도를 외치는 봉기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폭발적 붕괴

김정일정권이나 군부관료연합이 권력투쟁 또는 민중봉기에 직면하여 권력을 상실한다면 폭발적 붕괴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루마니아, 알바니아 및 불가리아에서와 같이 매우 혼란스러운 체제붕괴가 북한에서도 생긴다면 무정부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이 경우 수백만명의 피난민들이 휴전선, 황해, 동해, 만주동지로 탈출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개입할지도 모르므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태진전은 한국은 물론이고 기타 강대국들도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이 「안전착륙」을 질서있게 하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만약 경제논리가 정치논리를 압도하여 성공을 거둔다면 그와같이 평화로운 체제변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체제의 경직성과 지도층의 예측불허등을 고려할때 북한은 「안전착륙」보다는 「충격착륙」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남한은 북한을 편입하여 통일을 이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Ⅲ. 핵계획과 대미 일괄타결

북한은 핵계획을 은밀리에 추진해 왔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벼랑끝 외교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일괄타결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994년 10월 21일에 발표한 「기본합의」에 의하면 북한이 현재 및 미래핵계획을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 대체에너지 및 경수로를 제공하는데 합의하여 타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거핵규명에

대한 특별사찰은 5년이상이나 거부할 수 있게 되어 북한은 여전히 핵카드를 사용하여 대미 및 대한 지렛대를 갖게 되었다. 북한이 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느냐가 대미 및 대한관계의 장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1. 생존수단으로서의 핵무기 계획

북한은 체제생존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핵무기개발에 의존해 왔고 이것으로서 미국과 협상을 성공시켜 왔다. 김정일에게도 핵무기계획은 미국 및 남한과 협상하는데 대등한 위치를 확보해주는 수단이 되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핵개발에 착수했고 1980년대에 무기개발을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이것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북한의 핵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다. 다만 1989년에 북한은 가동중인 5-MW 원자로에서 적어도 7kg 이상의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이에 대한 IAEA의 사찰을 거부해 왔으며, 1994년 10월에야 미국과 기타 완성된 재처리공장과 건설중인 2기의 원자로를 중단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1991년 12월에는 남한과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의하여 핵물질의 재처리와 농축을 하지 않으며 이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남북상호사찰을하기로 합의했던 것도 지적한다.

핵개발이외에 기타 분야에서 남북한간의 경쟁은 남한의 승리로 끝났으므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그것을 체제생존을 옹호하는 최후수단으로 삼았다. 이때문에 끝까지 북한은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

았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것을 5년이상이나 지연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2. 북한핵의 현재, 미래 및 과거와 대미「일괄타결」

북한은 현재 가동중인것, 미래에 완성할 것, 그리고 과거에 완성한 핵계획을 갖고서 미국과 「일괄타결」을 하여 외교승인, 경제지원 및 핵무기불사용약속 등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다해 왔다. 클린턴행정부는 이것을 대폭 수용하여 결국 「일괄타결」을 골자로하는 「기본합의」에 조인했다. 결국 북한은 핵계획의 현재 및 미래를 동결하는데 동의했고 미국은 과거에 대해서는 특별사찰을 지연해서 그 모호성을 인정해 주어서 타결이 성사된 것이다.

북한핵의 현재

북한은 5MW 원자로에서 1994년 5월에 8천개의 폐연료봉을 추출했는데 이것을 재처리한다면 4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하여 5개정도의 핵탄을 만들수 있으니 이것이 곧 북한핵의 현재이다.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은 이것들을 일단 북한내에서 「건식보관」하고 경수로 건설이 거의 완성된 시점, 약 8년뒤에 이것들을 제3국에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이 합의가 발효한뒤에 6개월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3개월내에 경수로지원을 협의하는데 동의했던 것이다. 이 건식보관한 연료봉은 나중에 북한이 재처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것들의 처리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북한핵의 미래

북한은 현재 가동중인 5MW 원자로 이외에 1995년에 완공될 영변 소재의 50MW 원자로, 1996년에 완공될 태천소재의 200MW 원자로, 이미 완공된 방사화학실험실을 갖고 있으니 이것들이 곧 북한핵의 미래에 속한다. 이것들을 다 가동한다면 북한은 연간 12~20개의 핵탄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미국은 이들을 동결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북한은 가동중인 흑연감속로는 폐쇄하고 진출중인 것들은 중단하며 방사화학실험실은 「봉인」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이것 때문에 손상될 에너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중유」를 제공하고 두기의 1,000MW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 경수로는 울진의 3 및 4호기와 같이 「한국형」으로 할 것과 국제컨소티움(이른바 The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을 구성하여 건설을 추진하는데 북한은 묵시적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미국은 북한핵의 미래에 대하여 뇌물을 선불해주기로 하면서까지 북한은 NPT에 복귀시키고 IAEA의 사찰을 받겠음 종용했던 것이다. 한국은 경수로 지원에서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50% 이상을 하기로 약속했으며, 대 일본등 기타 국가들도 참여하여 미국주도하에 국제컨서티움이 조직될 것이다.

북한핵의 과거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과 은익하고 있을지도 모를 핵무기가 곧 북한핵의 과거이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IAEA는 두 곳의 핵폐기물저장소를 특별사찰하기를 요구해 왔으나 북한은 끝내

이것을 거부했다. 제네바합의에서도 경수로의 핵심기자재가 도착하기 전에 북한은 IAEA의 전면사찰을 받겠다고 했으니 적어도 5년간 북한은 과거규명을 연기하게 되었고 그결과 핵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게는 이 과거핵의 불규명이 크나큰 위협이 되므로 「선택별사찰후 경수로」원칙을 주장했으나 이것은 관철되지 못했다. 더구나 특별사찰실시 단계와 경수로건설단계를 연계하는 것도 한국은 실현하지 못했다. 이결과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그것을 투명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게 되었으며 파키스탄에서와 같이 과거는 기정사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핵무장을 하든지 미국에게 의존하든지 양자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다면 한국은 비핵화정책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한반도에서 핵확산과 경쟁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IV. 미북한관계와 남북관계:연계 또는 병행?

북한이 핵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협상하는 동안 한국은 소외되었고 남북관계는 동결되었다. 종전에 미국은 남북관계와 미북한관계를 연계해서 후자가 전자에 앞서가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했었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처한 미국은 자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없어졌으므로 미군이 희생될 전쟁이나 제재는 꺼려했고, 1995년 4월에 갱신할 NPT를 유지하여 핵확산금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북한을 NPT에 묶어두려

고 막대한 댓가를 지불했으며 심지어 남북대화 와 대북한협상을 연계하지 않으면서 단독으로 핵타결을 지었던 것이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한반도비핵화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전에 미국이 먼저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은 확실하다. 이제부터 미국은 남북대화 와 대북한협상을 「병행」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자기의 범세계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북한과 단독으로 협상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상적으로는 양자가 상호보완해야 하겠지만 양자간의 연계를 중단하는 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대미협상과 대북한협상을 전략적으로 조화하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남북한간에 관계정상화를 하지 않고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미국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들 자신이 대북한관계와 대미관계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전력적 사고를 실시해야 한다.

1. 북한핵무기의 영향:남북간의 전쟁억제와 통일저해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은 한국에게는 전략적인 악몽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북간에 군사균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여 전쟁억제력을 약화할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온 합의통일가능성도 저해하고 나아가서 한국 및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하여 동북아에서 핵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그것은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비록 북한이 핵탄을 사용하지 않는다해도 남한이 그것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남한에게 정치 및 군사적 공갈을 할 수 있게 하고 재래식무기로도 겁내지 않고 도발행위를 감행할 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남한이 제시하는 단계적 통일방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할리가 없다. 이때문에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미국의 구두공약만 믿고서 북한의 핵공갈에 대항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소련이 사라진 세계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대하여 「확대된 핵억제」를 행동으로 과시할 가능성은 없기때문이다. 보스니아, 소말리아, 르완다, 하이티에 대하여 나타낸 사후 반응적인 미국의 외교정책이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 우리가 미국외교정책을 당연시하여 공약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오고 있다.

2.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1992년 2월 19일에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시켰다. 그러나 그 뒤에 북한은 이들을 일방적으로 외면하여 아직도 그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출범한 뒤에 남한은 진실로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남북화해를 희망했으나 북한은 이것마저 외면했던 것이다. 1993년 4월에 북한은 「민족대단결을 위한 10대강령」을 발표하여 「외세의존탈피」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사교환」을 제안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것을 수락했으나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북한

대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까지 공갈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1994년 4월에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대표들을 철수했고 대미평화협정을 다시 요구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은 공동억제 및 방위력을 강화했던 것이다. UN에서 대북한제재를 논의하는 도중에 미국의 전대통령 지미카터가 평양을 방문하여 핵 동결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일성의 희망을 가져왔던 것이다.

제네바합의는 남북대화를 언급했으므로 남북한은 다시 당사자간의 노력으로 기본합의사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하겠다. 즉 경제 협력과 비핵화는 남북간의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결실을 거두어야 경수로지원도 순조로워질 것이고 특별사찰 이전에 상호사찰을 실천하여 핵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남북정상회담

카터가 방북했을때 김일성이 제안했던 정상회담을 김영삼대통령이 수락하여 7월 25일에 이 역사적인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가 7월 8일에 사망하여 이 계획은 아쉽게도 무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결정은 유효하다고 했다.

김정일집권후 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는 그의 결정과 북한내의 사정에 달려있다. 정상회담이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남북이 이미 발효시킨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

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과감하게 수용할 정도로 김정일이 북한체제를 변혁하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나아가서 그것이 획기적인 성공을 가져 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 통일 가능성:설계 또는 자충수

김일성사망후 북한의 변화가능성은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어떠한 설계에 의하여 오기보다는 자충수에 의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여건들이 구비되면 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남북간에 상호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대대로 온다면 불수는 없으므로 결국 북한체제가 변혁함에 따라 통일은 자충수에 의하여 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흡수통일」을 극구 경원하고 있다. 남한도 10년간에 1조달러이상이나 소요될 수 있는 통일비용을 부담할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태여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도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장과 전쟁도발을 막아서 남북간에 평화공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지향하여 한국은 「2+4」회의와 같은 동북아안보 대화를 제의했으나, 중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냉담하게 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통일은 남북당사자들이 성취할 과제이지만 그것이 주변지역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

해와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통일된 조국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기구를 채택한 나라로서 주변국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우선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도화해야 하고 이것을 주변국들이 지지해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이룩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기발한 방안이나 설계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변화가 초래할 자충수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북한의 변화가 수반할 여러가지 위기 및 사태에 대하여 관리능력을 양성하고 철저한 예비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V. 통일외교: 한반도화와 국제화의 조화

이처럼 북한에서 어떠한 변화라도 생길수 있는 불확실한 시대에 처하여 우리는 통일외교를 슬기롭게 전개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활성화하여 한반도문제를 한반도화하는 것과 대미 동반자관계를 재정비하여 한반도문제를 국제화하는 것을 잘 조화하여 평화, 비핵화, 화해협력을 달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통일외교의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이 글을 끝맺는다. 첫째, 우리는 대미외교를 재정비하여 북한이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서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는 목적과 그 실현방법에 대하여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제네바합의를 북한이 이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남북간에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재개하여 비핵화를 위한 상호사찰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

금 사전에 대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교는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의회, 언론, 학계 및 이익집단들을 상대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연합을 구성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도 북한핵의 과거에 대해서는 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본과도 제휴하여 남북간의 사찰과 검증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거나 5년 후까지도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에서 통일외교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폭넓게 확대하여 큰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막연히 초당적이고 국민적합의를 주장해봐야 그것은 추상적인 수사에 불과하므로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정책, 즉 북한핵무기방지와 남북대화 활성화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해야 한다. 국내에서 이와같은 지지기반을 공고히 해야 그에 대한 대외적 지지가 따른다.

셋째, 외교는 힘의 바탕에 기초해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미국 및 일본과 안보협력을 보장해야 한다. 북한에서 핵투명성이 증명되기까지 한미간에 공동억제력을 강화해야 하며 우리도 독자적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도 개발해야 한다.

이제부터 북한의 제네바합의를 이행케 하는 것은 당근만 더 제공함으로써만은 불가능하다. 이 합의는 어디까지나 자기 충족적 예언에 불과하므로 이행과정에서 현실점검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행동한다는 보장은 없다. 힘으로 그 이행을 강압하지 않고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협조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극히 나이

브한 발상이다. 북한이 이행을 중단하거나 또 다시 위반을 범하면서 까지 전쟁위협을 할때 한미양국은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완비해 두어야 한다. 전쟁을 방지하려면 그에 대비하고 싸울 각오도 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끝으로 통일외교는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은 목적들을 우리자신들이 정의하고 그것을 대외에 선제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제부터는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여 우리의 안보와 번영 및 통일을 자연발생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사활적 국가이익을 선명하게 설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는데는 끝까지 버티는 자세로서 임해야 한다. 내용에 대해서는 신념과 의지를 갖고 단호하게 우리의 국가이익을 수호해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과 스타일에는 신축성있고 유연할 필요는 있다.

통일외교는 북한이 핵무장하거나 전쟁을 도발하는 것을 막고 우리가 원하는 대화와 합의에 호응하도록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대미 동반자관계를 공동이익 및 가치의 토대위에 굳건히 구축하고 국내에서 폭넓은 지지연합을 형성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과제들을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질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第2分科：韓半島 統一과 周邊 強大國의 政策

- ◆ 韓半島 統一에 대한 美國의 視覺과 政策(이채진, 클레르몽 맥캔나대)
- ◆ 韓半島 統一에 대한 日本의 視覺과 政策(김홍락, 웨스트 버지니아대)
- ◆ 韓半島 統一에 대한 中國과 러시아의 視覺과 政策(사무엘 김, 콜롬비아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이 채 진*

I. 서론

1994년 6월,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Jimmy Carter)의 개인적이거나 평화를 위한 북한방문 직후, 한반도의 핵긴장 상태는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 7월 8일 세번째의 고위급회담을 제네바에서 가졌다. 두 나라는 양국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더 많은 협상을 할 것에 합의 하였다. 그 이전 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주석과의 역사적인 정담회담이 19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삼일 동안 열릴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7월 9일 발표된 김일성주석의 동맥경화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은 미국과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을 연기시켰으며, 한반도의 정세는 다시 불확실과 근심외의 상태로 돌아갔다. 결국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죽음은 한반도 평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빌 클린턴(Bill Clinton)대통령은 즉시 북한국민에게 조의를 표하고, 북한에 조문사절단 파견을 희망하였다. 그는 또한 사망한 김일성의 대화에 입각한 외교정책이 계속되기를 원했다.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의 권력과 정책을 승계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집권초기 그의 대미정책은 유화적

* 클레르몽 맥켄나대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많은 국내외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첫째, 한국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정부도 김일성 사후의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김정일의 인간성과 통치능력 및 미래의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둘째, 클린턴 대통령의 한반도정책은 설정된 목적과 사용 가능한 수단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가 풀어야할 과제는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에의 복귀, 다국가간 외교, 대북한 경제제재,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제임스 매케인(James McCain)과 로버트 도울(Robert Dole) 상원의원 들과 같은 강경분석가나 정쟁적(partisan) 비판자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들은 클린턴의 대북한 유화, 수용 정책에 반발하고 있으며 행정부 내에서도 심각한 정책대립을 보이고 있다. 넷째, 클린턴의 외교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미국국민들이 냉전체제 종식 이후 신고립주의적(neoisolationist)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했다고 간주하는 미국국민들은 국가의 모든 힘을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쓰기를 바라고 있다. 1993년 10월 12일, ABC 방송국 조사에 의하면, 불과 22%의 응답자 만이 미국이 세계문제 해결에 있어 지도적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70%의 응답자는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적 부담에서 서서히 벗어나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1993년 12월 10일자 로스 앤젤스 타임즈(the Los Angeles Times)는 미국국민들은 국제문제에 관심이 적다고 썼다. 미국이 처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사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단지 3%의 응답자 만이

국제문제라 대답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클린턴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수행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하겠다. 클린턴행 정부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미국의 외교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며, 한국문제에 있어도 주요국가(중국, 러시아 및 일본)들의 의견일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한 경제제재를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노력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의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 러시아 소외경향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국내문제를 이유로 대북한 제재조치를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의 정책조율에 있어 매끄럽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이며, 잘 조화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한반도정책을 펴기에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II. 한반도의 무력 통일

1953년 한국전쟁 종결 이후, 북한의 무력통일 야욕을 저지하는데 있어 미국의 역할은 지대했다. 1953년 11월 20일,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행 정부는 “한국에 있어서 미국의 행동목적과 전개(U. S. Objectives and Courses of Action in Korea)”라는 제목의 한 비밀문서(NSC 170/1)를 미국의 한국전 이후 한국정책의 기본 전략으로 채택했다. 이 문서에 의하면,¹⁾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의 장기목표는 한반도가 통일되어 경제자립을 이룩하고, 미국에 대하여 우호적이며, 자유롭고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며,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내치안 유지와 외침으로부터 자국

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며, 정치와 국토의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은 어떠한 침략에도 반대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며, 한국의 안보를 미국의 안보와 연결해야 한다는 유엔결의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강력한 입장(position of strength)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의한 대중국, 대북한 군사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도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채택된 NSC 170/1에 기초를 둔 ‘군사 봉쇄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세계 내지는 지역적 전략환경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미국의 대한국정책의 지속성이 대단하다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무력침략을 억제하고 한국과의 휴전협정 당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미국의 정권교체(아이젠하워에서 클린턴)에도 불구하고 대한방위공약은 계속해서 준수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때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였다. 예를들면, 1975년 인도차이나(월남)공산화에 즈음하여, 헨리 킨신저(Henry Kissinger)국무장관은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시험하지 말도록 엄중히 경고했다. 그 이후, 제임스 슬레진저(James Schlesinger)국방장관 역시 한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에 있는 전술핵의 사용가능성을 시사했다.²⁾ 이러한 미국의 대북한 경고는 박정희대통령 암살과 광주항쟁 등과 같은 한국내의 심각한 문제가 발

생했을 때에도 계속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남침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도 자체방위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의 지도층은 비이성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반미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판단은 ‘푸에블러호 납치사건’, ‘EC -121 격추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 일련의 비정상적인 북한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북한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팀스피리트(Team Spirit) 군사훈련 중지’, ‘주한 미군철수’, 및 ‘한반도 내의 군축’ 등과 같은 북한의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발생 가능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1990년 4월 18일, 미국의회에 제출된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략 개요(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에 의하면,³⁾

한반도는 무력충돌의 발화가능 지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북한국민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100만이 넘는 군대로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국부의 상당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무력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호전성은 자유와 민주로 향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있어서 안보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만일 억제가 실패하면 격퇴시킨다. 미국은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대화 및 신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방법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전환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는 단계적 미군감축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지상군, 전투기, 폭격기, 탱크, 포대, 장갑차, 공격용 잠수함, 수륙양용 전차, 특공대원 등에서 수적으로 한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이 군대를 군사분계선 부근에 공격형으로 전진배치시키고 있으며, 스커드(SCUD)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 무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종식을 이유로 미군의 감축을 주장하는 미국의회는 기세를 꺾기 위하여,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리스카시(Robert W. RisCassi)대장은 1992년 3월 미국 상원군사위원회(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⁴⁾

냉전체제가 종식되었다 해도, 미국은 이 지역의 지속적 긴장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된다. 이 지역은 분단되어 있으며, 감정적 상처와 불신이 가득차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은 분단한국의 분쟁을 해소하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힘차게 발전하고 있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투자인 것이다.

그는 또한 북한의 공격용 지상군의 그 민첩성과 파괴력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의 수준에 있음으로 주한미군의 지상군과 공군의 전진배치는 북한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비록 1991년 12월 남북한 정부는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으나, 미국의

정보계통과 군사계통은 김일성의 약속과 합의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였다. 리스카시 대장도 그러한 남북협정은 중대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의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⁵⁾ 미국 중앙정보국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국장은 남북한 협정들이 실행에 옮겨지기 까지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부언했다.⁶⁾ 그는 경고하기를,

가까운 장래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더욱 위협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군사전략가들은 북한이 병력과 무기의 수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남침을 해야한다고 북한지도층에 조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양정부의 재래식무기의 유지와 현대화에 따르는 어려움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국방성의 “지역을 중심으로 본 국가 군사전략(Regionally Focused National Military Strategy)”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⁷⁾ 1994-99년 동안 있을 수 있는 일곱 개의 가상 시나리오 중의 하나에 의하면, 북한은 비행기나 미사일로 운반이 가능한 다섯 개 내지 열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다음 위장된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30만의 정예병력을 이용한 총공격으로 서울을 단시일 내에 점령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이러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군의 반격 또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5개의 전투사단을 신속히 파견하여 82만 명의 한국군을 도와, 5,000대의 탱크와 600대의 전투기로 무장된 120만 북한군과 맞설 것이며, 5개의 항공모함 함대, 2개의 해병 원정사단, 16개의 전투기 편대, 그리고 4개의 폭격기 편대가 한국에 추가 파견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

이 국가의 존폐위기에 놓이지 않는 한, 또는 대패전의 위기에 처하기 전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만일 이라크(Iraq)이 쿠웨이트(Kuwait)나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를 침공한다면, 이 기회에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러한 예상들에 대하여, 펜타곤(Pentagon)은 이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한반도에 발생 가능한 또 다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전략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은 아니라고 했다.

1993년과 1994년 한국에 긴장이 또 다시 고조되었을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미국의 한국방어와 주한미군의 강화를 재천명하였다. 1993년 11월 7일, 미국 NBC 방송국의 “언론과의 만남(Meet the Press)”이라는 프로에서 클린턴대통령은 한국을 공격하는 행위는 곧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선언했다.⁸⁾ 그는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패트리엇(patriot)미사일 부대를 신설했으며, 코브라 헬리콥터를 H-64 아파치 헬리콥터로 교체했고, M-113 장갑차(Armored Personnel Carriers)를 브래들리 전투차량(Bradly Fighting Vehicles)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그는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한국에 사용하려 한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국민들은 미국이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에 있다. 1993년 11월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1%는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하였을 때 미국이 참전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63%는 참전에 반대했다.

한국문제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언급이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국방장관으로부터 나왔다. 리스카시대장의 북한의 군사적 우세론에 반하여, 그는 한국군은 잘 훈련되고, 잘 지휘되고 있으며, 사기가 충천함은 물론 최신무기로 무장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⁹⁾ 그는 또한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준비태세와 북한공격에 대한 격퇴능력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자신있게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미국내의 남북한 군사균형에 대한 평가의 미묘한 변화는 북한 군사전문가에 대한 억제효과와 미국내의 강경파들의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한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일 미국과 북한의 핵회담재개가 실패한다면, 전쟁재발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나 미국-일본-유럽의 공조체제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워렌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국무장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¹⁰⁾

북한이 이러한 협상들을 거부한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욱 강한 조취를 취함에 있어 국제사회의 동조를 쉽게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제재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될 것이며, 최하급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 북한 국민은 드라마틱한 경제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에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조치는 전쟁선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김정일의 괴팍하고 해괴한 습성 또한 북한 군사전략에 모험주의적 요소와

비신뢰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경제제재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한다면, 클린턴 행정부는 국내 정치집단으로부터 해상봉쇄나 공습에 의한 핵시설파괴를 요구받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또 다른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윈스턴 로드(Winston Lord) 국무성차관보는 미하원 외교위원회(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에서의 증언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¹¹⁾ 클린턴대통령도 취임연설에서 “미국의 중요한 이익이 도전을 받을 때나 국제사회의 요구나 뜻이 거부당할 때 미국은 가능하면 평화적 외교수단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에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년 11월에 실시된 갤럽(Gallup)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9%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찬성했고, 33%는 반대했다. 최근(1994년 6월) 뉴스위크(Newsweek)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31%가 클린턴의 대북한정책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42%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¹²⁾ 동조사는 또한 미국민의 43%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에 지지를 표했고, 28%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린턴대통령의 재선운동이 시작되면, 그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보스니아(Bosnia), 소말리아(Somalia), 및 헤이티(Haiti)사태에 대처함에 있어서 우유부단함을 보여 국민적 지지를 상당히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행동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여러 국가들의 미묘한 ‘이익균형’을

파괴할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다. 미국의 군사행동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엄청난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Ⅲ. 한반도의 평화 통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최우선 정책이 북한의 ‘군사적 적대행위 봉쇄 또는 억제’였기 때문에, 1980년대 말까지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지 않았다. 단지, 미국은 유엔의 감시하에 자주적 통일국가를 세운다는 오래전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한국에 의해 제안된 북한과의 평화공존 만을 지지하는 정도였다. 사실 미국은 한반도통일에 있어 어떠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냉전 종식, 독일 통합, 동유럽 사회주의 소멸 및 소련의 붕괴)은 미국으로 하여금 현재 한반도에 대한 현상유지정책을 넘어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1992년 1월 6일, 조지 부시(George Bush)대통령은 한국국회 연설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의 상처가 치료될 날이 올 것이며, 미국국민은 한국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건 하에서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¹³⁾ 부시행정부도 한국의 성공적인 북방정책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나아가서는 통일로 가는 길을 닦았음을 인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한 총리에 의해서 서명된 “남북한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찬사를 보냈다.

이 합의서는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한국국민을 위하여, 양측의 무력사용은 절대 없어야 하며, 양측의 차이점이나 쟁점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함을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3년 7월 클린턴대통령이 와세다 대학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에 대한 그의 시각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클린턴 대통령은 “두 나라는 동일한 문화, 가족적 유대, 공통된 경제이익 및 평화로운 장래라는 공동의 이익에 기초해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¹⁴⁾고 대답했다. 그는 또한 “인도적이고 합리적이며 명예스러운” 조건 하에서 통일의 날이 앞당겨지기를 원했다. 클린턴대통령은 한국국회 연설에서도 16개월 전 부시대통령의 연설내용과 비슷한 연설을 했다. 그의 연설은 다음과 같다.¹⁵⁾

냉전이 과거의 역사로 기록됨에 따라서, 분단된 한국은 그 냉전의 가장 비극적 유산의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언젠가 한국의 인위적인 분단이 종식될 것으로 믿고 있는 한국국민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국국민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한국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통일되었을 때, 미국은 한국이 설정한 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한국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미국대통령의 연설은 미국의 대한국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스턴 로드(Winston Lord)는 한반도의 장래는 남북한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미국은 이러한 협상과정을 조언과 다각적인 외교를 통하여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¹⁶⁾ 남북화해

를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의 한 방법으로, 미국은 “Two-Plus-Four”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3월, 러시아가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8자간의 회의”를 제안했을 때 미국은 단지 미온적인 지지를 보냈을 뿐이다.

이러한 부시와 클린턴의 공약과는 달리, 미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한반도의 갑작스러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은 갑작스럽게 통일된 한국은 거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자립경제체제를 유지하기 힘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독은 한국경제 보다 다섯 배에 이르는 국내총생산 규모를 가진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비교적 적은 인구의 동독을(육천 만 vs. 일천 육백 만)흡수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은 두 가지 경제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하나는 구동독의 경제체제 재구성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구서독의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¹⁷⁾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의 붕괴는 한국의 경제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중 붕괴(Double Collapse)”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 통일로 인한 한국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투자 및 합작투자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임으로, 미국이 받을 수 있는 경제손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북한이 일본의 경제원조를 받은 후에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의 경제손실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둘째, 미국은 갑작스런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역효과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 예상한다.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¹⁸⁾

한국 장래에 관한 시나리오들은 다양한 가능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의 몇 가지 시나리오에 한국의 통일과정은 독일의 통일과정 보다 더욱 심각한 무질서를 동북아시아에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되고 경제적으로 강한 한국의 탄생은 이 지역에 냉전시대의 긴장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경쟁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며,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해묵은 의심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만일 통일이 필요에 의해 핵개발을 추진한다면 이 지역의 불안정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걱정이 지나친 사람들의 생각이라 간주할 수 있으나, 미국의 정책결정자가 한반도 통일이 이 지역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식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통일독일은 유럽공동체, 북대서양 조약기구 및 다른 서방의 단체들에 잘 적응하면서 통일을 정착해가고 있으며, 미군의 주둔도 계속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이 지역에는 어떠한 경제적 또는 군사적 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한국은 독자적인 체제를 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통일한국이 이 지역에서의 미국국익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호의적일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는 분석이다.

셋째, 미국은 분단된 한국 보다 통일된 한국에 대하여 훨씬 많은 불확실성을 느낄 것이다. 통일한국이 지극히 민족주의적 국제관을 갖게 되고, 중립적 외교와 군사정책을 유지하며, 자급자족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또는 경직되고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에는 통일한국이 미국에 우호적이고, 시장경제 정책을 유지하며,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미국의 희망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전의 서독에 비해, 한국은 정치제도나 민주주의 운용에 많은 약점을 갖고 있다. 게다가 예상되는 통일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통일에 합의한다면,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미국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미국이 줄 수 있는 도움은 열강들의 보장을 위해 “Two-Plus-Four” 정책을 추진하며, 유엔의 평화유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경제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양보가 없으면, 미국 행정부는 강경파의 의견에 따라 북한의 생존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고, 체제약화를 부추기고, 붕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강경파들은 이러한 방법만이 북한의 위험한 반항을 단번에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외교노력에 의한 핵투명성 보장과 한국과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이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할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핵문제와 다른 사안(중동에 무기수출, 국제 테러 및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양보 정도에 비례하여 미국은 단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지미 카터 전대통령

이 1994년 6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미국행정부의 의사를 김 일성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미국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생각해 보자. 첫째, 미국은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하고,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정식 수교도 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어주기 위해 “적과의 무역법”(the Trade with the Enemy Act)을 폐기할 수도 있으며,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북한에 평화적 목적으로 핵원조나 경제원조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 구도(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에 기초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북한과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원하는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된다면, 김정일의 합리적인 행동을 부추기기 위해, 클린턴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갖음으로써 김정일 체제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방법을 합해보면, 미국은 두 개의 한국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북한이 책임감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남북한 상호협력에 있으며, 모든 협약이 준수되고, 신뢰감이 구축되면,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다. 다른 주변국들도 이에 동조할 것이다.

IV. 결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반도통일 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또 다른 한국전쟁을 억제하고, 점진적으로 평화로운 통일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서의 힘의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것도 원치않으며, 김정일이 온건하고 협조적인 정책을 구사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무력침공 한다면, 미국 국민들의 무관심 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것이고, 북한을 응징할 것을 공언했다.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무력에 의한 한반도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욱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경제제재나, 핵시설에 대한 무력사용을 결정하도록 종용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제2의 한국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다른 강대국들(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하여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많은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 있는 유일한 군사강대국인 미국은 한국의 통일과정이 가능하면 질서적이고 고통이 없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만일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한 정책(군사봉쇄, 외교적 불인정 및 경제제재)을 완화한다면, 미국은 남북한 모두에 대하여 자비로운 중재자(benevolent arbiter) 또는 정직한 중개인(honest broker)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문제에 관심이 있는 열강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알베르토콜(Alberto R. Coll) 교수는 미국의 중재자로서의

적합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⁹⁾

미국은 자비로운 중재자가 되기에 특히 적합한 나라이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정복을 위한 전쟁을 혐오했으며, 여러가지의 현대신앙과 민족성을 가진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와 정치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나라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또한 모든 나라에 믿음을 줄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사회의 자비로운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즉,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미국은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가? 미국은 미국국민의 국내지향적이며 신고립주의적 정서, 계속되는 재정적자, 무역 불균형, 증가하는 국가부채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클린턴행정부의 국내에서의 정책분쟁 해결능력과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미국의 지도력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 15, part 2,
(Washington D.C.: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1621.
2. Chae-Jin Lee and Hideo Sato, U.S. Policy Toward Japan and Korea(New York:Praeger Publishers, 1982), p.103.
3.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April 18, 1990).
4. “Briefing Remarks by Gen. Robert W. RisCassi”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March 4, 1992).
5. Ibid.
6. Robert Gates, “Regional Threats and Defense Options for the 1990s” at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March 27, 1992).
7. New York Times, February 17, 1992.
8. Los Angeles Times, November 8, 1993.
9. William Perry, “U.S. Security Policy in Korea,” in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May 9, 1994, pp.275-279.
10. Warren Christopher, “America and the Asia-Pacific Future,” in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May 30, 1994, p.350.
11. Los Angeles Times, March 18, 1994.
12. Newsweek, June 17, 1994. p.39
13. George Bush, “The U.S. and Korea:Entering a New World,” in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January 13, 1992, p.23.

14.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July 12, 1993, p. 1280.
15. William Clinton, "Fundamentals of Security for a New Pacific Community," in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July 19, 1993, p.550.
16. See Winston Lord's statement in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April 5, 1993, p.218.
17. See Timothy Garton Ash, "Germany's Choice," Foreign Affairs (July/August 1994), pp.65-93. For a discussion of Germany's resurgent nationalism in favor of a German Europe rather than an European Germany, see Jacob Heilbrunn, "Tomorrow's Germany," The National Interest(Summer 1994), pp.44-52.
18. James A. Winnefeld and others, A New Strategy and Fewer Forces: The Pacific Dimension(Santa Monica:Rand Corporation, 1992), p.13.
19. Alberto R. Coll, "America as the Grand Facilitator," in Steven L. Spiegel and David J. Pervin, eds., At Issue: Politics in the World Arena(New York:St. Martin's Press, 1994), p.99.

韓半島 統一에 대한 日本의 視覺과 政策

김 홍 락*

I. 서 론

1994년 6월 30일에 무라야마 수상이 영도하는 사회당주도하의 연합정부가 수립된 이후, 새 일본 정부의 한국정책에 관한 많은 추적이 난무하고 있다. 일본사회당이 북한과 밀접한 유대를 갖고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전력에 비추어 이러한 추측들이 무성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1993년 이후 일본사회당은 한국정부를 승인하고 한·일 기본조약도 인정하는 정책변경을 한 바 있다. 또한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해 일본인들은 김일성이후의 북한의 공산정권의 장래와 한국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논지의 목적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의 양한정책과 한국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는데 있다. 본논문의 주요논점의 하나는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되고, 비핵 시장경제위주의 민주적통일국가가 한반도에 수립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지만 한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때까지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남한간의 평화공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 웨스트 버지니아대

서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북한과 국교정상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

II. 冷戰時代의 日本의 對韓政策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 양국관계는 상당한 개선을 보았다.¹⁾

일본 자민당 집권 시기에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긴밀하며 양호했다. 지난 약30년간 일본의 보수당지도자들은 한·일간의 안보관계는 불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대체로 순탄했다.

이시기에 한국의 안보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원에서 일본에게 상당히 중요성을 지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9년 11월의 미·일 공동성명에서 ‘사또’ 일본수상은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를 위해 “긴요”하다고 선언하였다.²⁾ 그후 사또의 후계자들은 1969년 공동성명중의 “한국조항”을 약간수정하였지만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아시아의 다른 어느나라 보다 일본에 주는 영향이 크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미 안보조약을 감안할 때 일본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한국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며 남북한과 미·소 초강대국들과의 동맹체제가 형성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원자핵전으로 확대될 소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³⁾

이러한 군사적 위험성에 못지 않게 일본의 보수당 지도자들을 불안하게한 정치적 요인은 한반도에서 야기되는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적

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을 내포했기 때문이다. 남한의 공산화는 일본에게 대해서는 귀중한 완충지대의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백만의 대군을 보유하는 비우호적인 최근접 국가와 상대를 해야하는 안보상황의 대폭적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남한의 공산화는 일본의 전략적 환경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냉전기간동안 일본의 보수당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공산화를 방지하는데 일본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아왔다.⁴⁾

물론, 진정으로 중립적이고 어느 강대국에도 종속되지 않는 통일된 한국은 일본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남북한관계와 강대국관계 등이 변화가 없는한 실현될 수 없는 먼 장래의 목표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냉전시대에 일본의 자민당 지도자와 유력한 여론형성자들은 한국의 평화적 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까지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촉진하고 남북한간의 접촉과 대화의 폭을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보았다.⁵⁾ 동시에 1970년대 중반부터 자민당정부는 남북한의 UN동시가입과 강대국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승인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미국이 지지한 반면 평양 뿐만 아니라 북경과 모스크바도 반대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남북한간의 관계개선과 강대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남북한의 평화공존의 길을 개척하려고 했다. 여하튼, 1990년까지 일본의 대한정책은 한국을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⁷⁾

Ⅲ. 일본의 대북한정책

1990년 이후에 일본과 북한관계가 개선되지 못한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평양은 한·일간의 경제협력의 증진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다. 둘째, 북한은 일본이 남한 및 미국과 공모하여 남북한의 “교차승인”과 UN “동시가입”을 통해 한반도를 영구분단하려고 “음모”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셋째, 일·북한간의 소원한 관계는 북한이 800억엔에 달하는 대일 무역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므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넷째, 1980년대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 테러행위(1983년 랑군 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를 자행함으로써 일본이 북한에 대해 제제조치를 취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다섯째, 일본과 북한관계는 북한이 1983년에 체포한 일본인선원 2명을 석방하지 않으므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동구라파의 공산정권들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로 인해 냉전이 구라파에서 종결되자, 일본은 한반도를 포함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교정책의 조정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0년 여름에 접어들면서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이후 수상은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접촉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으며 또한 일본사회당 대표단과 함께 자민당대표단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방안을 찾기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지지할 의사를 표시했다.”

가이후내각이 북한에 대해 이렇듯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된 것은 다음 몇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1990년 6월 4일에 개최된 한-소 정상회담은 일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소련과

남한의 관계가 그렇게 급격하게 진전될 줄을 예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따라서 일본지도자들은 소련에 대해서 취한 남한의 이니시아티브로 인해서 외교적으로 선수를 빼앗긴 기분을 맛보게 되었다. 1956년부터 소련과 평화조약체결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보지 못한 일본으로서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것은 당연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제적 위신과 영향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제2차대전 후 미결사항으로 남아있는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외교적 이니시아티브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소련이 평양과 서울 양쪽과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해진 시점에서 일본이 북한과 화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일본지도자들은 일본과 북한의 접촉의 증가가 평양으로 하여금 외부세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러는 것이 강대국과 남북한의 교차승인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뿐만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정치적 주무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북한을 고립시키기 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보다 현명한 방안으로 생각했다. 끝으로, 만약 일본이 탈냉전시대에 아시아와 세계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보다 큰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수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북아시아에서 보다 큰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보다 주도적 정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의문시된다고 보았다.

가네마루가 인솔한 자민당대표단과 다나베가 이끄는 사회당대표단은 1990년 9월에 공동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서 9월 28일에 3당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8항목으로 구성된 선언문을 통해 자민·사회양당과 북한 노동당 대표들은 일본이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 끼친 손해뿐만 아니라 전후 45년간에 북한이 입은 “손실”까지 사과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일본과 북한은 위성중계를 통한 통신개설 및 항공노선을 직결 하는데 합의했다. 뿐만아니라 “조선은 하나다”라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한국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지은 후 일·북한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 부터 외교교섭을 시작하도록 각자 자국정부에게 권고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가네마루는 “전후 45년의 비정상적관계”에 대한 북한의 보상 요구를 받아드린데 대하여 일본의 보수적 지도자들은 일본은 “비정상적 관계”에 대한 법적책임이나 보상에 대한 도의적의무가 없다고 보고 가네마루의 북한방문 외교를 비판했다.¹¹⁾ 또한 많은 일본인들은 이러한 “비정상적 관계”가 형성된 것은 냉전과 같이 일본이 콘트롤(Control)할 수 없는 국제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본외무성은 보상문제에 관해서 가네마루와 동의할 수 없으며 공동선언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네마루가 저지른 외교적 실수에 관해서 일본인들의 비판뿐만 아니라, 일·북한간의 국교정상화의 조건과 내용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도 우려를 표시했다. 남한은 일·북 정상화가 안보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커다란 불안을 느꼈다. 즉 일본이 제공하는 막대한 보상금과 경제원조가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세력 균형은 남한에 불리하게 변화될 것을 우려했다. 미국 역시 한국과

같은 의구심을 갖었다. 따라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요망을 받아드리기로 결정하고 1991년 1월에 다음 4 원칙을 채택했다. ① 교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도록 추진하며 ②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기존의 일본·남한간의 우호적 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며 ③ 36년간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보상은 하되, 제2차대전후의 “손실”에 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④ 북한의 핵사찰이 일본의 안보에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평양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받아드리도록 노력할 것 등의 원칙을 채택했다.¹³⁾

1991년 정월부터 1992년 11월 5일 까지 8차의 일·북한 국교정상화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양국간의 어려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첫째, 일본과 북한은 보상문제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좁힐 수가 없었다. 북한은 일본이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는 한 일본과의 수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북한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처음부터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한일합방조약 및 관련 제 협정은 한국에 강제로 조인케 한 것임으로 불법 및 무효이며 한국과 일본은 1945년 이전에 전쟁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⁵⁾

그러나 일본측은 양국은 전쟁상태에 없었으며 따라서 북한의 요구는 1945년 이전에 일본이 북한에 대해 끼친 재산적 손실에 대한 청구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반론했다. 일본은 이와 비슷한 원칙을 1965년 남한과 국교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 해결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1965년에 남한과의 교섭에서 적용한 해결방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민에게 끼친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사과나 보상문제를 제쳐놓고 수교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전후 “비정상적 관계”로 인해 생긴 “손실”에 대한 북한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거절했다.

둘째, 일·북수교를 불가능하게 한 다른 큰 장애물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문제에 관해 합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측은 일·북 국교정상화는 양국간의 외교관계정상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북한이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사찰 문제는 국교정상화 회담의 적절한 의제가 될 수 없고 이문제는 평양과 워싱턴이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남한에 저장되어 있는 미국의 핵 무기에 대한 사찰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에 관해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국제사찰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미국과 남한 정보계통의 보고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정월에 IAEA와 핵안전 협정에 서명했고 1991년 12월말에 남한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서명하였으므로 일본과 북한간에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IAEA의 사찰을 북한이 받아드릴 뿐만아니라 남한과의 상호사찰로 이해해야 하며 핵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한 북한과의 수교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제3차 회담때부터 실종된 일본여인 “이은혜”에 대한 정보를 일본이 요구함으로써 수교회담의 다른 큰 문제로 부상했다. 실종된 “이은혜”라는 일본여성의 신원은 KAL기 폭파범인 김현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즉 “이은혜”라는 일녀는 납치된후 평양에서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교사며 본명은 전구 야예요(Tagudic yayeye)임을 일본 경찰당국이 제공한 실종인 사진 첩을 통해서 확인 하였다.¹⁷⁾ 그러나 북한은 “이은혜 문제”는 완전히 “조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교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 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요구에 분개해서 2회나 회의장에서 퇴장하기까지 했다(1992년 11월 제 8차 회담 포함). 북한측은 일본측의 요구가 북한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하고 이 문제를 일본이 제기하는 한 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인의 일본인 처의 일본방 문허가문제, 조총련계 교포들의 법적 지위 개선 문제 등이 있지만 전술한 3개 문제처럼 심각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1993년 12월에 방북한 일본 사회당 인사를 통해 금일 회담 재개할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일본이 “적대적 정책”을 견지하는 한 가능성이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IV. 北韓核開發과 日本의 對應

1993년 여름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일본의 의혹과 불안은 보다 명백해졌다. 왜냐하면 북한은 IAEA 사찰관이 영변에 있는 두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을 뿐만아니라 사정거리 1,000키로미터로 추정되는 “노동1호”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6월 7일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미야자와수상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증언했다. 뿐만아니라 평양측이 IAEA의 사찰거부도 일본의 관심을 낳게 했다.

북한이 IAEA의 요구(2개 미신고시설 사찰에 관한)를 거절하자 IAEA 이사회는 1993년 2월 25일에 채택한 결의문에서 북한이 3월25일까지 핵사찰을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UN안보이사회의 후속조치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IAEA의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불확산조약(WPT)에서 탈퇴하기로 결정 발표했고 발표 3개월후인 6월 12일에 발효하게 되었다.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게되면 핵무기개발을 방지할 법적 제어장치가 없어짐으로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게 되자 UN안보이사회는 북한이 탈퇴에 대한 의사를 번복할 것을 종용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5월 12일) 미국은 북한과의 고위회담을 6월 2일부터 12일까지 갖게 되었다. 이 회담의 결과 북한은 6월 11일에 NPT탈퇴를 당분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²¹⁾ 미국과 북한은 상호주권을 존중하며 무력(핵무기포함)을 행사하

지 않고 대화를 계속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7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2차 회담에서 북한은 IAEA와 핵사찰에 관한 교섭을 재개하는데 동의했고 남한과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는데도 합의 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흑염 원자로를 경수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약속했고 미·북한 양국은 국제 핵사찰과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는 경우 제3차 미·북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북한이 2개 미신고 시설을 핵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이라고 강변하면서 핵사찰을 거부하며 남북대화를 위한 실무접촉에서도 남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을 고집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은 9월에 개최 예정이던 제3차 회담을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IAEA의 정규사찰도 거부함으로써 현장에 장치된 필립과 밧데리가 소진됨과 동시에 북한이 핵물질을 핵무기에 설사 전용하더라도 그것을 탐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임박해졌다.

북한의 국제 핵사찰 거부로 긴장이 조성되자 일본은 한국 및 미국과 전폭적으로 협조할 의향을 재확인 했다. 즉 1993년 11월초에 경주에서 있는 한·일정상 회담에서 93년 8월에 자민당 정부를 축출하고 연합정부의 수반이 된 ‘호소카와’ 수상은 북핵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 남한과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표명했다.²³⁾ 호소카와는 자민당 정부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고 특히 일본의 많은 지역을 사정거리권에 둔 노동 1-호 미사일의 개발에 대해 불안스러워했다.²⁴⁾ 따라서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강력한 사찰로 방지하여야 하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남한

과 미국과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994년 봄에, 북한의 비협조로 IAEA가 핵사찰을 행할 수 없게 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대표의 폭언과 함께²⁵⁾ 제8차 남북실무회담이 결렬되자 미국과 남한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강경히 하면서 미국은 3월 21일에 예정된 북한과의 3차 고위급회담을 연기하고 북한의 핵사찰문제를 UN안보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3월 31일 UN안보리는 의장성명을 통해서 IAEA의 사찰요구를 수락할 것을 권고하였고 만약 북한이 IAEA의 사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제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UN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정하는 경우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조치에 관해 관련 부처가 계획을 마련 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이 북핵문제에 관해 남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94년 3월 24~26일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방문시에 다시한번 확인 했다. 호소카와수상과 김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했으며 공동조치를 취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이 목적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협력할 것을 다짐했고 호소카와는 만약 UN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일본헌법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국, 일본 및 미국 삼개국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필요성도 함께 확인했다.²⁷⁾

북핵문제에 관해 일본이 남한 및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일본정책은 북한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으며 3월 26일자 노동신문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반동분자들의 허위 선전과 알력”을 비난하면서 “만

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도 무사할 수 없다”²⁸⁾는 경고를 했다.

호소카와의 예기치 않은 사임이 있은 후 ‘하타 즈토무’가 후임자로 등장했으며 우전 역시 호소카와와 같은 대북한정책을 지속할 의향을 보였고 외교면에서는 과거 자민당정부가 책정한 외교정책을 따를것을 확정했다.

새 하타 연합정부를 수립함에 있어서 8개 정당은 10항목의 정책협정²⁹⁾에 서명했으며 외교정책분야에서 일미안보조약 견지하면서 일본은 UN의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에 관해서는 북한의 핵 개발문제를 포함 한반도 정세는 일본 및 아시아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기구(UN)가 한국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UN결정도 존중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 및 남한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과도 필요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³⁰⁾

이러한 정책협정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및 해상봉쇄에 대처해서 유사입법을 해야한다는 신생당과 UN에 대한 협조는 어디까지나 일본헌법의 한도내에서 해야만 한다는 사회당과의 견해차이는 메울수가 없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고³¹⁾ 또한 양당은 세계개혁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결과적으로 사회당은 새 수상을 선출한 직후에 연합정부를 탈퇴하기로 결정했고 사회당의 이탈로 인해 하타정부는 국회의 다수표를 확보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약소

정부가 되고 말았다.

하타수상 역시 대북한정책에 있어서는 호소카와수상과 비슷했으며 호소카와정부의 대한 반도정책을 견지할 것을 김대통령에게 전화로 전달하였고 북한핵문제에 대해 미국 및 한국과 긴밀한 협조를 다짐했다³²⁾

1994년 6월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에서 IAEA의 사찰을 거부한채 핵연료봉(鋒)을 제거하기 시작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찰의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급격히 증가되었다. UN안보리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IAEA사무총장 Hans Blik는 북한이 핵연료봉을 계속 제거하고 있음으로 이상태가 지속되면 “몇일 내”에 “IAEA 소정절차에 의해 차후에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봉을 획득하는 능력이 크게 손실될 것”이라고 언명했다.³³⁾ 5월 31일에 UN안보리는 이러한 “IAEA의 상황 판단은 커다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북한이 IAEA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각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UN안보리는 사용이 끝난 연료봉을 원자로에서 추출하는데 있어 IAEA와 협력하는 것을 종용했다. 그렇게 함으로서 IAEA사찰관들이 당해 원자로의 핵심부분의 역사를 측정하고 또한 핵물질이 핵무기생산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제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필요한 경우 안보이사회는 후속 심의를 할 것이라”는 제재를 암시하는 구절을 첨부했다.³⁴⁾

이에대한 북한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북한의 UN부대사 김수만은 “우리는 안보리의 행위를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언명하고 미국과 IAEA가 “북한을 질식시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⁵⁾

이렇듯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하타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미국 및 한국과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카키자와 코지’외상은 UN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 미국이 단독적으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일본은 가능한데까지 협력할 것이다”라고 언명했다.³⁶⁾ 그러나 사회당의 구보는 그런 경우 일본의 협조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6월 6일 하타수상은 북한에 대처할 방침으로서 첫째, 제재를 가하기 전에 경고를 행할 것 둘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호소하고, 셋째, 북한이 핵사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미국 및 남한과 협력한다는 3원칙을 채택했다. 하타내각은 UN의 인준을 받은 제재에 참가한다는 것을 선호하지만 UN의 승인 없이라도 제재를 가하는데 일본 및 남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³⁷⁾

반면 북한은 제재를 가해오면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를 발표했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6월 15일 대북한 UN안보리의 제제조치에 대한 미국이 기초한 결의문을 받고 이를 지지하기로 하타내각은 결정했다. 왜냐하면 이 미국안은 일본정부의 제재정책 및 조치방침과 기본적으로 동일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제일단계에서 U.N.의 경제원조 등을 중단하고 외교적·문화적 교류를 축소하고 무기수출입 금지 및 여객운송용 이외의 항공내왕을 중지하도록 했으며 제2단계에서는 모든 금융거래를 동결하도록 되어있다. 단 제1단계의 제제조치는 동결의안을 채택한 30일 후에 발효하게 함으로써 북한이 노선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게 되어있다.³⁹⁾

일본의 하타정권이 기입한 제제조치에 의하면 1983년 및 1988년과

같이 ① 북한과의 외교관접촉을 제한하며 ② 일본 관리들의 북한방문을 불허하고 ③ 북한관리의 일본입국을 거부하고 북한인들의 입국사증심사를 강화하고 ④ 북한으로부터 오는 비행기의 일본착륙을 불허하는 것에 첨부해서 일본으로부터의 송금불허 무역중단 및 투자나 차관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⁴⁰⁾

하타내각은 비록 UN의 제재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제재조치 가운데 제일교포(친북계)가 매년 북한으로 송금하는 600억엔 내지 14억엔의 송금금지가 가장 북한에게 큰 타격을 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해상봉쇄를 하는 경우에는 보급병참 관계지원을 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UN의 결정이 없는 대북제재에 일본이 참가하는 경우 자위대의 활동을 제약하는 헌법 및 정치적 규제에 비추어 병참지원의 범위나 성격에 관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⁴¹⁾

한편, 6월 15일 북한은 IAEA를 탈퇴한다는 통고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 기관이 사찰을 불허할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의 오진우(무력부장)는 평양방송을 통해 “거만하고 무례한” IAEA의 사찰을 절대로 받아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⁴²⁾

한반도의 긴장은 미국 전 대통령 지미카터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극적으로 완화되었다. 6월 15일에 평양을 방문한 카터는 김일성과의 수차에 걸친 회담을 통해서 핵사찰문제에 관한 타협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즉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동결”하겠다는 김일성의 약속을 받아드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UN 제재를 위한 노력을 “유보”하

고 북한과 제3차 고위급회담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보았다.⁴³⁾ 김일성은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비록 카터 전대통령은 미국의 공식특사가 아니었지만 그가 김일성과 합의한 타협안은 미국과 한국정부가 즉시 수락하게 되었다. 즉 미국의 크린턴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정부의 의향을 6월 22일에 발표했으며⁴⁴⁾ 김영삼 대통령도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급진전을 보게됨으로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으로 생긴 약 15개월간의 외교적 교착상태가 극적인 타결가능성을 보이게 되었다. 7월 8일에 제네바에서 미-북한 고위회담이 재개되고 남북한 정상회담을 7월 25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게 됨으로서 북핵문제로 생긴 위기는 효과적으로 수습 진정 되었고 일본은 이러한 외교적 진전을 환영하였다.⁴⁵⁾

한편, 하타내각은 사임하고 6월말에 사회당·자민당 사끼가게당으로 구성된 새로운 연합정부가 무라야마수상(사회당)을 수반으로 발족하게 되었고 이 무라야마내각의 출범은 일본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하였다.

새 연합정권을 수립하면서 3당이 서명한 정책합의서⁴⁶⁾에 의하면 새 정부는 호소카와 및 하타정권 수립과 관련해서 채택했던 정책협정을 기초로 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정책분야에서 무라야마내각은 그 전임 내각에 비해 보다 “비둘기 색”이 짙다. 즉 새 내각은 일본헌법의 이념을 존중하고, 핵무기를 갖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으며, UN안보리의 상임이사회국이 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UN평화유지활동(PKO)에는 헌법의 범위내에서 참가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물론 일·미안보조약을 지속하는 것도 명백히 선언 하고 있다.

한반도에 관해서, 새 내각은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받아드리고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며 만약 북한이 국제사찰을 거부하고 U.N.안보리가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일본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⁴⁷⁾ 따라서 무라야마내각은 대북한 제재에 일본이 참가하는데에 U.N의 동의가 필수적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U.N.승인하에서의 제재 참가 등 국제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일본헌법의 규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라야마내각의 대한정책은 전임내각의 정책과 별차가 없다. 무라야마는 김영삼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새정부는 전임내각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남한 정책을 견지할 것을 약속했으며 북한의 핵문제는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7월 23일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무라야마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미국·중국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했으며⁴⁸⁾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범한 잘못과 비행에 대해 깊은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무라야마 내각이 일본외교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의 대북한정책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 전대통령 카터가 독매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북회담과 남북한 정상회담이 진전되어 만약에 결과가 긍정적이면—비록 완전하지 못해도 긍정적이면—일본이 북한과 외교교섭을 재개하고 대사를 교환하며 무역관계를 확장할 것을 권하고 싶다⁴⁹⁾고 발언한 보도가 나오자 카터가 일·북한 국교정상화에 관한

평양으로부터 모종의 메시지를 갖고 온 것 같다는 추측을 낳게 했다.⁵⁰⁾

사실, 무라야마내각은 일·북한 수교회담재개에 관해 관심을 이미 표명한 바 있고⁵¹⁾ 미국과 남한이 북한과의 고위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명백해지자, 일본만 북한과의 외교게임에서 배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북 회담과 남북한 회담이 진전여부에 따라 일본도 북한과의 수교회담을 재개할 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무라야마내각은 전임내각들에 비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무라야마내각의 수립을 환영했다.⁵²⁾ 왜냐하면 일본사회당과 북한의 오랜 우호관계를 비롯해 사회당이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UN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일본이 참가하는 것을 반대해 온 사실 및 참가하는 경우에도 헌법의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 등의 명백한 이유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무라야마수상은 김일성 사망에 대해 애도의 뜻을 북한에 전달한 바 있다.⁵³⁾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는 어렵다고 본다.

V. 日本과 韓國統一問題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많은 한국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일정권의 장래와 남북한 통일에 관한 전망에 관해서 구구한 추측을 하게 되었다. 빈곤한 나라를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맡긴채 타계함으로써 사망한 김일성은 북한의 스탈린 주의·독재 체

제의 종말을 기록하게 되었고 김정일의 지도력은 상급 시험받지 못한 미지수인 점에 비추어 북한의 장래와 한국통일의 가능성에 관한 추측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동구라파의 공산정권들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의 결과 일본인의 한국통일문제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많은 일본인들은 남한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고 따라서 한반도의 세력균형은 남한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여러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소련권 공산주의의 패망은 경제적으로나 안보면에서 소련에 크게 의존해왔던 북한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둘째, 남한은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적입장이나 위신이 크게 향상되었다. 남한은 소련 및 과거의 소련 위성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1992년에는 중국과도 국교정상화를 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로 인해 남한의 국제적 입장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반면 북한의 입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셋째, 남한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북한 경제의 침체화로 인해 남북한간의 경제력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3,200억불 대 210억불 GNP면에서 1993년 현재).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남한을 따라 붙을 수 없으며 이렇듯 경제력의 격차가 커지면 군사력의 균형도 남한에 유리하게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1987년부터 남한의 민주화의 성공으로 인해 남한은 정치체제를 자유화했을 뿐만아니라 대외적 이미지로 현저하게 향상시켰다. 반

면 북한은 정치적 자유화 개혁을 도입하는 것을 거부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력을 승계한 것 역시 북한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습적권력승계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상술한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일본인들은 남북한의 세력균형은 남한에 유리해졌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많은 일본지도자들은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남한이 북한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적통일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던 냉전시대와는 달리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보다 많은 일본의 여론형성자들은 남북한의 평화적통일이 가능하다고 보기 시작했다. 또한 19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화해협력 및 불가침 협정에 자극 받았을 뿐만아니라 많은 경우에 한국통일은 소위 ① “독일 모델”이나 ② “교섭에 의한 통일 모델”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독일 모델”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일본인들에 의하면,⁵⁴⁾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가까운 장래에 최악의 지경으로 전락하게 되고 김일성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은 그의 권력을 오랫동안 지탱할 수 없다고 본다. 김일성 사망 후 몇년 내에 북한의 공산정권은 쿠데타나 민간인의 폭동에 의해 붕괴될 것이며 이런 경우 남한은 반 김정일세력편을 도와 북한을 흡수통일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식 통일과 대조적으로 다른 일본인들은 남북한은 비교적 장기간의 “평화적 경쟁적 공존”을 거친 후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격차의 폭이 확대된 결과 “흡수통일”은 남한에 막

대한 부담을 안길 것이며 남한이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지탱할 수 있는지 의심하며 따라서 남북한간의 장기간의 공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비교적 오랜기간의 “경쟁적 공존”을 거친 후 남북한은 교섭에 의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교섭에 의한 통일은 미국·일본·한국이 정책을 협조조정하는 경우에 그 성공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이경우 일본의 적절한 역할에 관해서 이 “교섭 모델”을 선호하는 일본인은 남북한간의 “장기간의 공존을 확립”하기 위해 일본은 북한의 “경제재건”에 협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의 생활을 향상하고 간접적으로 정치 개혁과 북한의 경제적 대외개방을 권장하기 위해 일본은 협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⁵⁶⁾ 이들은 또한 소위 “2 플러스 4”기구로 한국통일을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기구의 주 목적은 동북아세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보장하며 (다자협의를 통해) 동북아 및 한반도의 신뢰조치를 촉진함으로써 한국통일을 촉진 및 보장 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일본이 한반도에 경제적 영향권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영구 분할을 위한 일본의 획책이라고 한국인들은 해석할 수 있다. 사실, 많은 남한사람들은 90년대에 일본이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남북대화과 경제협력을 탈선케 하기 위한 획책으로 보고 비난해 왔다. 왜냐하면 수교를 통해 일본이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하게 되면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추구할 흥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⁵⁸⁾

물론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은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통일의 가능성

을 믿지 않고 있다. 1990년 7월에 조일신문(Asahi Shimbu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43%의 일본인들은 한국 통일의 가능성을 믿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⁹⁾

뿐만아니라, 일부 일본의 여론형성자들(예, 다께야마)은 한국통일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적으로 표명했다.⁶⁰⁾ 왜냐하면 통일된 한국은 일본에 대해 경제적으로 강한 경쟁자가 되고 안보적으로 핵무장한 통일 한국은 일본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을 자극할까 우려해서 많은 경우에 이러한 의견을 솔직히 표명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통일문제에 관해서 일본정부는 아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은 남한이 제안한 민주적 점진적 과정을 거쳐서 남북한의 화해를 통해 남북국가연합(한민족공동체)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통일 민주공화국을 설립한다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통일이 평화적 민주적으로 달성되는 한 일본은 통일된 비공산적 민주한국과 공존하는데 이의가 없다. 한반도 통일은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정을 제거하며 전쟁의 위협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VI. 結 論

상술한 분석을 토대로 몇가지 결론을 도출해보면 첫째,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통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일·미안보조약이 지속되고 남북한간의 대

립이 계속되는 한 일본은 미국 및 남한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문제를 다루려고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일본의 영향권을 확대하고 평화통일에 필요한 단계로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촉진한다고 보고 일본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왔다.

사회당 주도하의 연합정부가 발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의 수교를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당의 정책노선이 보다 실용주의적으로 수정되었고 자민당이 무라야마내각의 외무대신직을 포함 절대다수의 각료직(20개나 13개)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무라야마내각이 대북한정책을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외 전임내각과 같이 무라야마정부가 북한이 국제핵사찰을 받아들이고 핵무기개발계획을 포기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한국통일문제에 관해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남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해왔다. 일본은 한국통일이 평화적 민주적 방법에 의해 달성되고 비공산, 비핵, 민주적이고 시장경제중심의 통일국가가 탄생한다면 공존할 의향이 있다.⁶¹⁾ 그러나 한국통일을 위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의향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비록 민주적이고 비핵화한 통일한국도 일본에게는 분단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다 큰 경쟁상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일본은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공존이 한국통일의 선행조건으로 보고있다. 북한에서 공산체제가 급격하게 몰락하는 경우 독일식 흡수통일을 배제하지 않지만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일본은 남북

한이 상당한 기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교섭에 의해 한국 통일이 달성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은 이러한 시각이 보다 현실적일 뿐만아니
라 남한정부의 통일 접근방안과도 일치상응한다고 보고 있다.

참 고 문 헌

1. For a detailed analysis, see Hong Nack Kim, “Japanese–Korean Relations in the 1990s, (Occasional Paper #59) (Washington, D. C. :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1994)
2. New York Times, November 23, 1969
3. Hideki Kase, “South Korea’s Pivotal Role in Japan’s Defense”, in Richard D. Foster et al. (eds.), Strategy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New York : Crane, Russak & Co., 1979), p.149.
4. Edward A. Olsen, “The American and Japanese Stake in Korean Reunification,”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Spring–Summer 1983, pp. 8–9. See also, Tsuyoshi Yamamoto, “Nikkan Kankei no Iso”, Sekai, April 1981, pp. 198~200.
5. Hong Nack Kim, “Japan’s Two Koreas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in Tae–Hwan Kwak et al. (eds.), Korean Reunification :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Seoul :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4), pp. 217~228.
6. Asahi Shimbun, April 13, 1983.
7. Hong Nack Kim, “Japanese–Korean Relations in the 1980s, “Asian Survey, May 1987, pp. 497~514.
8. For a detailed analysis, see Tsuyoshi Yamamoto, “Nicho Fuseijo Kankeishi”Nitcho KanKei(Sekai April 1992 Special Issue) (Tokyo : Iwanami Shoten, April 1992), pp. 183~184.

9. Asahi Shimbun, June 16, 1990.
10. For the text of the joint declaration, see Asahi Shimbun, September 29, 1990.
11. Hong Nack Kim,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Current History, April 1991.
12. Japan Times, October 9, 1990.
13. Asahi Shimbun, January 26, 1991.
14. People's Korea, February 8, 1992. See also, Pyongyang Times, May 23, 1992.
15. Yomiuri Shimbun, May 15, 1992
16. For a detailed analysis, see Hong Nack Kim, "Japan and North Korea : Normalization Talks between Pyongyang and Tokyo", in Yong Whan kihl(ed.), Korea and the World : beyond the Cold War (Boulder, Co : Westview Press, 1994), p.199.
17. Hankuk Ilbo, May 17, 1991.
18. Yomiuri Shimbun, November 6, 1992. See also, People's Korea, November 14, 1992.
19. Asahi Shimbun, January 11, 1994.
20. Prime Minister Miyazawa's statement is quoted in Tsuyoshi Yamamoto, "Kitachosen o kataru Zentei towa", sekai October 1993, p.260.
21. Yomiuri Shimbun, June 13, 1993.
22. For the North Korea's preconditions, see National Unification

Board, South—North Dialogue in Korea, No. 59, May 1994 (Seoul : Office of the South—North Dialogue, National Unification Board), p.82.

23. Japan Times, November 7 & 8, 1993.
24. North Korea successfully test—fired Rodong—1 missile (estimated range : 1,000 kilometers) in late May 1993. For the Japanese Defense Agency's assessment of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s, see Boei Hakusho Heisei 5—nen ban (Tokyo : Boeicho, July 1993), pp. 63—64.

According to the agency's the annual white paper for 1994, North Korea constitutes a “main destabilizing factor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including Japan and Northeast Asia.” Yomiuri Shimbun, July 16, 1994.

25. Hankuk Ilbo, March 20, 1994. See also, National Unification Board, op. cit., p.85.
26. Yomiuri Shimbun, March 22, 1994.
27. Yomiuri Shimbun, March 25, 1994. See also, Korea Newsreview, March 26, 1994.
28. Yomiuri Shimbun, March 27, 1994.
29. Yomiuri Shimbun, April 22, 1994.
30. Yomiuri Shimbun, April 19, 1994.
31. Yomiuri Shimbun, April 26 & 28, 1994.

32. Yomiuri Shimbun, May 2, 1994.
33. Yomiuri Shimbun, June 3, 1994.
34. Yomiuri Shimbun, June 1, 1994.
35. Ibid.
36. Yomiuri Shimbun, June 4, 1994
37. Yomiuri Shimbun, June 7, 1994
38. Yomiuri Shimbun, June 3, 1994
39. Yomiuri Shimbun, June 17, 1994
40. Yomiuri Shimbun, June 5 & 7, 1994
41. Yomiuri Shimbun, June 5, 1994
42. Yomiuri Shimbun, June 16, 1994
43. Yomiuri Shimbun, June 18, 1994
44. Yomiuri Shimbun, June 24, 1994
45. Yomiuri Shimbun, June 30, 1994
46. Yomiuri Shimbun, July 1, 1994
47. Yomiuri Shimbun, July 1, 1994
48. Yomiuri Shimbun, July 24, 1994
49. Yomiuri Shimbun, July 4, 1994
50. Hankuk Ilbo, July 6, 1994
51. Asahi Shimbun, July 3, 1994
52. Hankuk Ilbo, July 6, 1994
53. Yomiuri Shimbun, July 10, 1994
54. Tadashi Takahashi, "Heijo to Peking no 'sono hi' wa itsuka",

- Chuo Koron, January 1992, p.45. See also Mineo Nakajima's statement in ibid., p.59 ; and Katsumi Sato, "Koritsuka ga shinko suru Kitachosen no sanjo", ibid., pp. 72~73.
55. Masao Okonogi, "Kyozon ni mukau Nanboku Chosen ni taisuru Nihon no yakuwari wa nanika", Sekai Shuho, March 5, 1992, p.54.
56. ibid., p.55.
57. Masao Okonogi,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a Northeast Asian "Two plus Four," in Amos A. Jordan(ed.), Korean Reunification : Implications for Notheast Asia(Washington, D.C.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3), p.58.
58. Hong Nack Kim,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n-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 Problems and Prospects", Korea and World Affairs, Winter 1990, pp. 664-666.
59. Asahi Shimbun, August 1, 1990
60. For Takemura Kenichi's statement, see Jae Hoon Shim, "So Near, Yet So Fa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 31, 1991, p.39.
61. Jordan, op. cit., p, 2.

韓半島 統一에 대한 中國과 러시아의 視覺과 政策

사무엘 김*

서

냉전의 종식에 이은 독일의 통일이 그러했듯이 한국의 민족재통일도 필연적 추세라는 것은 이제 공론화 되었으며,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성의 단계를 벗어나 이젠 시간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유일한 지도자였던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에 사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북한정권의 필연적 붕괴와 재통일을 확신하고 있으나¹⁾ 한반도의 통일전망은 많은 불확실성과 모순점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의 국제정치 추세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중 하나는 미소양극체제에서 지역 중심적 다극체제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위협성에 관련된다. 비록 냉전체제가 생성되고 또 소멸된 유럽에서조차 냉전의 구심력과 원심력은 여전히 똑같이 발전되고 있다. 냉전이후 극동에서의 지정학적 그리고 지리경제적 현실은 너무나 복잡하여 다양한 해석과, 모순되는 진단을 놓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를 국제적 지역체제로 보는

* 콜롬비아대

것을 불합리하게 하고 있다. 아시아는 막연한 지리적 개념일 뿐이며 어떤 문화, 이념, 그리고 일체감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단지 새로 겹치는 4~5개의 주요한 문화와 3~4개의 주요한 종교, 수백의 언어권, 그리고 무수한 인종적 분역과 다양한 기후조건이 혼재되어 있을 뿐이다. 세계의 모든 지역 중에서 아시아의 지역주의(regionalism)가 아마도 가장 약한 것이다. 분단된 한국의 경우에, 김일성의 사망은 한국 통일에 대한 불확실성의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동서갈등의 구조적·규범적 분명성과 단순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미소 양 강대국과 양국의 동맹국들에게 대외정책에서의 공동기반을 제공해 왔던 경직된 이원론적 세계관 또한 사라졌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의 대외정책 과정은 국내정치와 혼란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은 상호 밀접히 관련이 지어져, 충성심과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 및 비국가 개체들을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침투적인 정치체를 구성하고 있다. 동서갈등 체제의 붕괴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같은 외적요소가 일국의 국내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 국내의 특정 이익단체들이 국가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끔 한다. 소위 탈공산주의 시기의 아이러니는 자본주의국가들의 대외정책을 추동하는 주요 동기가 해외시장에서의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독점자본에 있다는 레닌의 개념이 중국식 “시장레닌주의”에 힘입어 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정학적 양극체제에서 지역적·경제지리적 다극체제로의 탈냉전기(post cold war era)적 변이는 지난 수년간의 대외정책에서 국내지향적 그

리고 시장지향적 추세를 가져왔다.

이러한 불확실성들에도 불구하고 한가지는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주장한³⁾ 것처럼, 역사는 종식된 것이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과열되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붕괴를 어떤 정부나 국제정세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했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누구도 상호의존적인, 그러나 분열적인 탈냉전 세계의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많은 나라들, 특히 현재 공산국가이거나 과거 공산국가였던 나라에서 1990년대초 보다 새로운 민족정체성과 역할개념을 추구했던 시기는 없었다.⁴⁾ 세계정세가 이처럼 빠르고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는 다가올 통일한국의 모습을 성급히 구체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회고

보다 넓은 지역적 맥락에서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증소의 시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우리는 한국통일의 미래를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Marx의 역사성립에 대한 유명한 관찰—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뜻대로 할 수는 없지만, 오직 과거로부터 직접 주어진 상황하에서는 가능하다—을 상기하는 것이 이러한 과거·미래적인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⁵⁾

동북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강국정치에 한국이 저항적 임은 명백하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전성기에 조선의 개방은 은자의 왕국을 거대세력간 경쟁의 장으로 변화시켰다. 중일전쟁(1894~95)과 러일전쟁(1904)은 전략적 요충지,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잡

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매우 중요하고도 이질적인 결과를 가져와, 극동에서 일본의 해계모니를 반세기가량 고착시켰다.

아이러니컬하게도 2차대전의 종식으로 일본의 식민주의에서 해방된 한국은 바로 미소 두 초강국에 의해 38선으로 분단되었다. 한국전쟁(1950~53)의 민족적·지역적·세계적 체제에 대한 재편효과는 묵과되어 질 수 없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세계대전이후의 어떤 사건보다도 냉전논리의 성립 및 극동과 그 이상의 지역에서 동서갈등의 유형을 고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전쟁은 냉전의 특징인 높은 군사예산, NATO의 군사화, 경쟁적 동맹체제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적인 동서양진영간의 대립을 초래했다.⁶⁾ 냉전동맹조약이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잇달아 성립되었다. 한국전쟁은 동서갈등을 경직된 전략문화로 고착시키며, 급변하는 세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했다.

중국의 대외자세에 미친 한국전쟁의 영향 또한 중대하다. 1950년 2월 14일 체결된 중소 우호동맹·상호협조조약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활성화 되게 되었다. 스탈린은 모택동이 또 다른 티토가 아니며 중국은 또 다른 유고가 아니라는 설득,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모택동은 회고하고 있다. 또한 UN의 한국전쟁개입은 중국이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하여 오랜동안 부정적으로 보게하는 효과를 낳았다.⁷⁾ 서구의 다수가 믿는 것과는 달리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공산주의적 팽창주의하에 크레믈린에서 계획되고 통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로서 명백하다. 근자에 유출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자료들을 종합, Sergei Goncharov, John W.Lewis, 그

리고 Xue Litai 등 3인은 주목할 만한 삼각협력을 통하여, 김일성으로부터 전쟁의 아이디어가 나왔으며 그가 50년 4월 스탈린과의 만남에서 남한해방은 삼일안에 끝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이 개입할 시간이 없다고 확신시킴으로서 초기의 의혹과 동상이몽적 동기에도 불구하고 스탈린과 모택동의 협력을 구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⁸⁾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한국전쟁시 2년이상에 걸쳐 세계의 주목이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의 공군이 북한과 중국 동북쪽에서 실제로 전투를 가졌었다.⁹⁾

한국전쟁은 예측하지 못했던, 그리고 모순적인 결과들을 발생시켰다. 첫째로 김일성의 전쟁에 의한 재통일이라는 무모한 시도는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간 동족상잔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운명을 두개의 분리되고 이질적이고 분기해가는, 공존불가능한 분단정치체제로 고착시켰다. 한국전쟁후 41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180만 이상의 병력이 대량살상의 최신무기로 무장한 채 DMZ을 가르는 '인계철선'에서 대치하고 있다. 이 사실은 분단된 독일의 종전후 경험과는 다른 차이점으로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재통일의 전망에 소극적이게 하는 요인이다. 둘째로 한국전은 최고의 관점에서 볼 때, 일면 중소동맹관계를 교착상태로 이끌어 초국가적 공산주의 단결을 해체시키는 중소갈등의 시발점이 되었고, 반면 미중 화해의 시발점이 되었다. 세계로 중소갈등의 심화는 중소동맹하에서 실질적으로 상정되어 질 수 있는 것보다 김일성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넓은 운신의 폭을 제공하였다. 사실 평양의 독자적 대외정책은, 필요하면 특정 이슈에서 한쪽편을 들지만 항상 최대한의 경제·기술·군사 원조를 얻어내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는, 김일성의 중·소관계를 다루는 특별한 능력에 힘입은 바 크다.

미·중·소 3각 관계의 종언

냉전기의 미·중·소 삼각관계는 남북간의 관계를 규제하며 한반도에 오래 영향을 주어 왔다. 예를들면 일본에 닉슨쇼크로 알려진 1971~72년의 중미 재접근의 분수령은 분단한국의 정치에 즉각 반영되었다. 남북양측이 받은 충격은 한국전이후 처음으로 고위층 회담을 성립시켰고, 1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삼대원칙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남북회담은 즉각 결렬되었지만, 중미 재접근은 남북관계에 중요하고도 이질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평양에서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국제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되는 관행을 들어, 박대통령의 유엔 동시 가입 제안을 한국의 분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분리주의자의 계획이라고 거부하며 절대적인 합법성의 추구를 계속하였다.¹⁰⁾ 반면, 남측의 박대통령은 외교정책면에서 절대적 합법성으로부터 상대적 합법성의 추구로 변신하는 동시에 남한에서 그의 독재지배를 정당화하는 법적장치인 유신헌법을 실시하였다.

소련의 전략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이르기까지 냉전체제에 잘 적용하고 있었다. 분명히 양극화된 세계의 단순성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의하여 지배되던 지역국가들에게 민족적 동일감과 안보추구에 반론의 구실을 제공하였다. 비록 소련의 민족 정체성은 민족적경험, 가치관 그리고 이해가 혼합된 산물이지만, 소련의 대외정책의 가이드는 미국적 헤게모니의 현실과 자본주의자를 포위한다는 레닌, 스탈린적

사고였던 것 같다. 동등한 초강대국이 되기위한 과도한 노력은 극동과 그 이외의 지역에서의 전략적 삼각구도의 모색과, 스탈린·후르시초프·브레즈네프 통치하의 소련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련은 국가적위치를 동맹형성, 미소간 협력, 제3세계에의 적극개입, 그리고 경쟁적인 무력경쟁 등의 일련의 정책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해결하려 시도해왔다. 과거에 있어서, 소련의 영향력은 중소동맹(1950~58) 기간동안 절정에 있었으며, 중소관계의 악화를 전후하여 쇠퇴하기 시작했다.¹¹⁾

고르바초프에 이르러서는 기존정책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급진적 정책개혁이 진행하게 되었으며 국가안보를 재정립하는 일련의 활동도 진행하게 되었다. Vladivostok(27 July, 1986), Krasnoyarsk(16 Sep 1988), New York(8 Dec 1988), 그리고 Beijing (mid-May 1989)에 이르는 고르바초프의 태평양지역에 대한 제스츄어들은 과거의 제로섬방식의 사고와 행태로부터의 급속한 결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태지역에 초블록간 쌍방 또는 다자간 협력의 운신공간을 제공했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중국을 위대한 사회주의적 대세력으로 인정하고 대접함으로써 중국의 주체성과 안보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는 고질적인 이념적·지정학적 갈등의 원인이었던 브레지네프독트린(소련방식의 도미노 이론)을 중국의 평화공존 오대원칙과 공존시켰다. 고르바초프는 무엇보다도 그의 전임자들이 중국국경에 배치해 놓은 병력상당수를 실질적으로 철수시켜왔다.

이러한 일련의 일방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대 중국과 미국간의 모

든 안보문제를 재정립함으로써, 고르바초프는 중·미·소 삼각관계의 전략적 *raison detre*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Robert Fegvold가 기술했듯 “이 모든 것이 소련의 붕괴 2년전인 1990년까지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대외정책에 가져온 개혁의 결과로 발생했다. 기존질서의 상징이었던 이 삼각관계의 붕괴는 기존질서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다.”¹²⁾

소련의 붕괴과정에서 중소관계에 특징적인 것은 많은 격변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소양국이 상대방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상호호혜적 동반자의 관계로 서서히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중소국경은 새로 태어난 중앙아시아 4개국에 의해 분할됐고, 나머지 3,605km의 중소국경은 통상공간으로 변형되었다. 나아가 중국은, Soviet 공산주의 몰락의 충격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중국은 최신 SU-27 장거리 초음속 전투기를 포함하는 18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92년에 구매하였다.)¹³⁾

탈 냉전기의 중소관계의 이러한 주목할 만한,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에 대한 설명중의 하나가 기능주의 이론(점진적 평화접근방식)이다. Lowell Dittmer가 주장했듯, 전략적 삼각관계의 붕괴는 현재의 양호한 관계를 설명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1982년 관계정상화(Normalization)회담의 재개에 의해 시작된 접근법(소규모 접촉을 통한 교류전략)이 충분조건이 되었다.¹⁴⁾ 중국 국내정치 of 보수화와 반미성향은 또 다른 설명을 제공하였다. 1993년 4월 정치국 상임위원이었던 Lin Huaqing은, 군부가 미중무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간 관계에 관한 중국의 기본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반미청원을 위해 50명의 장교를 동원했음이 보고

되었다.¹⁵⁾ 93년 9월초에는 두개의 비밀문서가, 미국의 패권주의가 중국정권을 타도하거나 아시아 국가 내부분제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설립하는 문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⁶⁾

냉전이후 세계의 재조명

Power Politics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경정권은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기본척도를(비록 무게중심이 세계적 무대에서 아·태지역으로 옮겨졌지만), 현실정치적 세력균형이라고 규정한다.¹⁷⁾ 오랜기간의 냉전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은 아·태지역을 초월하게 되었지만, 한편 중국시장의 매력은 아·태지역과 기타지역에서 냉전 이후의 파워게임의 균형에 새로운 카드가 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힘의 분산과정으로서 세계정치 다극화는 양극체제이었을 때보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운신공간을 넓혀주고 있다. 1992년 10월 14차 중국공산당전당대회에서 Jiang Zemin의 정치적 보고에서¹⁸⁾ 천명된 바와 같이, 중국의 새로운 정책방향은 종합적 국력증강(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CNS)으로 규정된다. 이 CNS방침은, 다극화가 아·태지역에서의 새로운 지정학적, 지리경제적 동맹들의 형성을 가져오고 동시에 새로운 지역적구도하에서 파워정치에 대한 경쟁을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세계의 상황에 대한 CNS의 해석은 세계갈등구조적 해석보다는 현실적 민족주의의 그것에 가깝다.

천안문 사태이후 소련의 붕괴와 극동에서의 미군철수전망은 구속에서 벗어난 일본이 거대한 경제적 능력을 군사·정치적 능력으로 변형

하면서 강력한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위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힘의 공백을 선점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중국은 국제적 상황을 자국 이익을 위한 현실적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주목할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 군사유형은, 지구적 군사위협으로부터 특정지역의 다양한 규모의 전략적 무주지(strategic no-mans-lands)에서 나오는 지역적 군사위협으로 변화되고 있다. 탈냉전기의 중국대외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세가지로 귀결되어 진다: “서구제국간의 대립의 이용, 국력강화 그리고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인근지역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 등이다.”¹⁹⁾ 중국내부의 문서와 현실의 행동은, 국가적 정체성의 표출과 탈 냉전기의 주도적 아시아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맡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냉전이후의 국제적 상황에 대한 시각의 이해의 시발점은 국내정치의 우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소련이 대외정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붕괴했을 때 무엇이 국내무대에서 강한 정부를 그리고 무엇이 세계무대에서 ‘superpower’를 의미하는 가에 대한 신화 또한 붕괴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superpower 경쟁에서 균형에 이르르고, 심지어 우월한 위치에 서는 듯이 보이던, 그리고 보편적으로 강한 정부로 인식되던 다민족 제국은, 고르바초프의 소련뿐만 아니라 엘친의 러시아로, 대외정책의 중심과제를 외부환경의 안전보장과, 국내경제의 개혁과 구조조정에 우호적인 조건조성으로 재정의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진양지로서 공산주의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 대외정책의 동인이었던 이념은 국익으로 바뀌어졌다. 이 사실은 북동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그리고 남북한 뿐만 아니라 분리된 중앙아시아 제국들에 대한 동방정책(Eastern policy)에서, 경제적 이슈를 우선 과제로 하고 평화와 안정을 주요한 대외정책과제로 부각시켰다. 첫 주한러시아 대사이자, 현 외무부차관인 Alexander N. Panov에 따르면, 아·태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주된 국익은 “이 지역에서의 힘의 안정적 균형”, “러시아 국경인근의 부분지역들(sub-regious)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이 지역국가들과의 친선관계증진”이라고 한다.²¹⁾

상이한 정책간의 조화

중소갈등이 종식된 때 세계무대에서의 전략적 삼각관계의 논리와 분단한국에 대한 중소관계 또한 종식되었다.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증대시켜 주어 왔던 전략적 삼각관계의 카드를 잃어버린 북경은 인접국과의 방벽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비록 중국의 아시아정책이 수퍼파워(superpower)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열된 세계의 유일한 초강국으로서, 상호의존적 지구에서 중국의 최대수출시장으로서 미국은 중국의 얼룩지고, 다방향적이며, 양면적인 지역정책에 보다 중요하게 생각된다.

오늘날 중국은 공식적 외교차원에서 진실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 천안문 사태와 초국가적 공산주의의 붕괴에 의해 고립되거나 한계상황에 있다기 보다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남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키즈스탄, 그리고 카자카스탄 등 아시아 주변국들과 공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정상화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중국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의 숫자는 89년의 132개국에서

94년 중반에 158개국으로 26개국이 늘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의 단계에서 중국대외정책의 궁극적 외형은 북경당국이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이질적 문제들을 개별화된 정책으로서 복수의 대외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인되기 쉽다. 북동·중앙·남·남동아시아에서 오늘날 중국은 차등적인 외교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모택동사후의 중국의 대한정책은 변화하는 국내적,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상황논리에 적절한 균형적 조치였다. 초기의 단일한국(one-Korea)정책에서 법률상(dejure) one-Korea정책은 여러단계를 거치며 진화해왔다. 중국의 대한정책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현실적 Maxi/mini 전략과 거대세력으로서의 책임감에 의해 인도되어 왔다.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차별화된 그렇지만 상호보완적인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다각적 작업의 접근법을, 북경당국은 한반도에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 정책이, 북경이 평양측의 one-Korea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서울측의 유엔가입을 비토하지 않음으로서, 1991년 중반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국가입문제에 대해, 유엔안보이사회가 단지 5분을 소모하며 Rubicon강을 건넌 91년 8월 8일에 뚜렷해졌다. 아무런 토론도 없이 안보이사회는 유엔에의 DPRK와 ROK의 회원신청에 관한 신규멤버가입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Admission of New Members)의 보고서를 채택했다.²²⁾ 이 조치에는 명백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 담겨 있다. 안보이사회는 빠른 결정은 북경의 원칙적 자세의 변화가 안보

이사회의 Big Five로 하여금 두개의 개별적 회원신청을 통괄하여 수용하는 것을 가능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처입은 평양의 에고를 달래는 듯, 안보이사회는 이 조치를 남북한의 국제적인준을 위한 요청에서의 남북한 모두의 승리라고 전했다.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은 수년동안 유엔을 고심케한, 고질적 분단국가로서 한국문제의 결의가 등소평의 중국이 아닌, 고르바초프의 소련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급속히 진전된 서울-모스크바 화해는 90년 9월 완전외교관계수립으로 정점에 이르러 나아가서는 한국 유엔가입의 장애물 소련을 제거했다. 이상옥 외무장관이 북한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가 곧 유엔가입신청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91년 3월에, 서울측은 결정적인 전술의 변화를 가져왔다. 북경의 명백한 지지를 얻는데는 실패했지만, 중국측이 72년 방글라데시의 유엔가입을 비토한 단독행위를 재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계획된 대로 진행하기로 서울은 결정했다.

이 외교적 모험은 성공했다. 91년 5월 27일, 평양은 세계적 기구에 의 남북동시가입에 대한 오랜 반대를 포기하고 당의 방침을 전환했으며 중국이 이러한 반전을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89년 11월 말에 중국의무장관은 동시가입을 반대함으로써 평양의 방침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히 재확인했다. 일년후 북경은 국제사회가 남북간 협상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도록 고무해야 한다고 전하며 불확실한 태도를 보였다. 즉 외교계에서 널리 의심하고 있던 것 같이, 평양측이 안보이사회에서의 북경의 투표를 결정하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Li Peng총리의 91년 5월 3~6일간의 평양방문 기간 동안 확인시켰다. 평양의

단독가입에 대한 지지로 비토권, 특히 단독 비토를 행사함을 어렵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안보이사회의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하여, (중국국가안보에 직관되는 한국의 핵 stand-off의 경우는 예외), 중국은 표결에의 불참으로 반대의견을 일관되게 표시해 왔다. 20년동안의 참여에서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회원가입건과 72년 중동개입문제에 대해서만 비토권을 행사했다. 72년 9월 이후에 중국의 비토권 행사는 없었다. 주도권적 행위의 표현으로서 소련이 사용한 비토권 행사를 비난해왔던 중국은 비토권 행사외에는 대안이 없는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장막외교노력을 통해 비토권을 행사하곤 했다. 간략히 핵 무기와 같은 비토권의 효용이 실제의 사용보다 실행위협을 통한 억제적 가치에 있다는 것을 북경은 경험으로서 습득했다.²³⁾ 북경측은 분단국을 통일하는 두 방법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했다. 베트남식의 무력통일과 독일방식의 평화적 진전에 의한 흡수통일, 천안문사태 이후의 중국의 심각한 주체성, 합법성 위기를 고려할 때, 두가지 모두 중국에게는 위협적이었다. 동독의 사실상, 법률상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가맹이었던 독일통일을 계기로, 중국지도층은 특히 미국의 평화적 진전에 의한 흡수전략의 위협속에서 한반도통일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임을 깨달았다.

수많은 비밀회담을 가진 뒤, “이길 수 없으면 동맹하라!”라는 논리하에, 북경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2국 2체제 전략으로 바꾸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해진다. 북경의 장막뒤의 설득에 힘입은 서울측의 북방정책(Nordpolitik)은 91년 5월의 시점에 북한에 두가지 대안을 남겨 놓았다. 첫째, 유엔가입의 최종(아마도) 기회를 상실하고

패배가 확실시된 최종대결을 가지는 것. 둘째, 유엔가입의 독자적 활동을 개시하는 것. 91년 5월 27일 유엔안보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외무장관의 성명서는 쓰라린 목소리로 평양의 곤경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남한유엔일방가입을 남측당국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방치한다면 한민족전체이익에 관한 중대사안들이 유엔에서 편협되게 다루어질 것이고 이는 심각한 결과를 수반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북한인민공화국 정부는 남한당국이 가져온 잠정적 어려움을 극복키 위한 조치로서, 현 단계에서는,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²⁴⁾ 유엔가입문제에서 모스크바를 따라 꺼림직한 제2주자(second fiddler)역할을 맡도록 북경이 다소 강요되었지만, 92년 8월 24일 남한공식승인과 완전외교관계수립에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중국의 결정은 서울 Nord Politik의 최대성파로서, 그리고 동시에 평양의 절대적 합법성추구에 대한 최대의 타격으로서 이루어졌다. 북경측의 92년 8월의 결정은 one-Korea정책에서 법적 one-Korea 사실적 two-Korea,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적, 사실적 two-Korea정책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정점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와는 달리 북경은 평양측에 점진적으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북경측 결정시기는, 92년 6월 대만이 니제르공화국의 외교승인을 받는데 관련되고 자극된 것으로 보인다.

등소평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전해지는 서울승인결정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외교담당 그룹에 제출한 외무장관 Qian Qichen의 비밀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듯이, 중국대외정책사고와 행동지침에서 세력 균형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서 Qian는 한중외교관계는

일석사조(downing four with one)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대만의 외교적 고립, 서울과의 경협강화, 평양의 정치·경제·군사원조와 지지에 대한 무한한 요구의 감소효과, 그리고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미국측의 Super 301조의 협상요구 압력완화 등²⁵⁾ 남한정부관계자에 의하면, 중국지도자들은 외교적 협상의 일부분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도 협조를 약속했다고 한다. 서울측의 접촉은 북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지역질서를 세우는데 중국요인의 필요성을 다시금 보여준다.

Qian의 보고에서 빠진 것은 북동아시아 국제관계 재조정에서의 고르바초프의 역할이다. 고르바초프의 대외개혁정책의 최대영향은 아마 한반도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실로 서울올림픽은 서울-모스크바·서울-북경간의 초 블록간 협력강화에 있어 신기원이 되었다. 한국에서 소련의 이익은, 미국과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기 위한 수동적 형태에서 소련극동발전에 대한 남한의 지원증대와, 역동적인 신흥공업국 경제와 자국경제의 통합증진이라는 능동적인 것으로 변화됐다. 중국의 민감성 등 다양한 원인들로 대만·홍콩·싱가폴 등을 제외시킨 모스크바에는 서울이 가장 유망한 선택이었다.

1989-91년간의 모스크바-서울 화해의 가속화는 한반도 냉전동맹체제를 지탱하던 기둥 하나를 소멸시켰다. 근 10개월동안(90년 6월-91년 4월), San Francisco, Moscow, 그리고 제주에서 세차례 이상의 Gorbachev-Roh정상회담이었다. 고르바초프의 Pacific overtures, 소련의 경제적 위기, 그리고 서울측의 30억달러의 soft loan(장기저리차관) 등의 조합은 90년 9월 완전외교관계수립과 two-Korea정책에 대한 모든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의 cost-effective한 계산을 용이하게

하였다.²⁶⁾

북경은 비록 모스크바의 전례를 따랐지만, 주의깊게 진행했다. 최근의 북경은 모스크바가 외교적 페이스(pace)를 설정하도록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두 학자가 기술했듯, “최근의 중국의 관행은 모스크바를 서울과의 접촉의 선두에 세우고 너무 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²⁷⁾ 모스크바가 전격적으로 행동한다면, 북경은 주의깊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모스크바-평양관계의 빠른 해체와 함께 서울-모스크바관계의 빠른 진전은, 관련국들에게 모순적인 결과를 남기며, 장기간의 이념적 지정학적 대북중소경쟁의 독소를 제거하고 있다. 소련의 법 사실적 one-Korea 정책에서 법적 그리고 사실적 two-Korea로의 변화는, 평양이 북경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하는 동시에 중국의 변신에 선례와 구실을 제공하여 주었다. 그러나 최근의 nuclear stand off에서 보여진 바대로, 이 변화는 탈냉전기에 지역 등에 대한 유엔의 개입에의 책임과 간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거대세력의 권리와 특권을 추구해온 북경측의 maxi, mini diplomacy에 대하여 희비가 섞인 축복이었다.

소련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남북대화와 특별히 평양의 국제적 행동에 대하여 중대하고도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주의자의 배반이라는 북한측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71~72년의 중미재접근과 같이, 90년의 서울 모스크바 정상화는 91년말과 92년초의 총리차원의 남북 대화재개의 주요한 축매가 되었다. 그러나 중소경쟁의 종식, 특히 모스크바의 변신은 93~94년간의 북한의 안보행동에서 분명히 나타나

듯 한반도 주변의 안보복합체²⁸⁾에 대한 함축적의미와 함께 북한의 동맹배신감을 돌출시켰다.

2년후의 북경-서울 정상화보다 모스크바-서울 정상화는, 평양이 워싱턴·북경·모스크바의 관심을 끌 유일한 방법으로 아·태지역의 화약고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시위하게끔 하는 궁지에 세운 것으로 보인다. 90년 소련결정의 결과중의 하나는 평양이 핵을 cost-effective한 핵 억제수단으로서 그리고 서울과의 경쟁에서 전략적 균형장치로서 선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²⁹⁾ 러시아의 지원축소와 사실상 핵우산철수는 핵옵션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든 것처럼 보인다. 평양측이 cost-effective한 대체전략으로서 핵을 선택하도록 강요되어졌다는 것은, “모스크바-서울 외교 관계가 수립된다면, 소련-북한동맹조약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북측은 동맹에 의존해 왔던 모종의 무기(some weapon)를 스스로 갖추는 것 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내용의 북한 외무장관의 외교각서에서 잘 나타난다.³⁰⁾ 여기에서의 some weapon은 핵무기만을 의미할 뿐이다.

경제협력의 강화

극동의 네마리 용중 하나인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모스크바와 북경이 one-Korea에서 two-Korea정책으로 변화하게 하는데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Qian의 보고에서 언급된 네마리의 새 중 세가지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 Sino-Rok간 교역은 전무상태(78년에 약 4만불)에서 출발하여 85년 46,160만달러, 86년에 14억 9천만달

러, 89년에 30억달러(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급속히 팽창한), 91년 38억달러, 92년 82억2천만달러, 그리고 93년 약 90억달러로 증가하였다. 92년의 교역액은 중국-아프리카 교역액(10억달러)의 8배를 넘었고 중국-라틴 아메리카 교역액(30억달러)의 거의 세배에 달했다. 93년말에 중국은 한국의 세번째 수출시장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여섯번째로 큰 수출시장이 되었다.

또한 Sino-ROK간 교역은 중국-제3세계간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중국이 석탄·광물·원자재·농산물을 수출하고 강철·공업제품·섬유화학제품·최신기계·전자제품·기술을 수입하는 보완적인 것이었다. 또한 한국은 홍콩·대만과 더불어 중국연안개발정책의 새로운 참여자가 되었다. 현재 남한은 한반도에서 황하에 이르는 산동성을 (한국의 투자와 교역의 대부분이 산동성과 주변의 성에 집중되어 있다) 새로운 수출전진기지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은 생산비용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중소기업에 동기를 제공하여 남한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산동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북경의 관점에서는, Sino-ROK의 경제관계는, 중국수출의 30%이상을 소화하는 미국시장에 대한 과다의존을 극복하기 위한 분산전략의 일부이다.

서울의 대중국정책의 동인중 하나는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협력관계 수립이다. 대부분 남한기업들이, 노동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한 상품경쟁력이 저하된 남한산업에 대한 성장촉진제로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남한의 전략은,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자동차 석유화학제품·특수강철·반도체 등의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제조업

의 변화를 가속시킴과 동시에 미국·일본시장에 대한 과다의존을 중국·러시아·베트남시장으로, 수출의 유형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분산화의 이중전략가운데, 중국은 남한 상품과 대외투자의 거대한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비록 한국의 대중 FDI가 10억달러(93년말 당시)에 못 미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 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지가 되었다.

중국의 시각에서는 남한경제가 이용가능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데 비해 북한경제는 파산을 초래하지는 않을 지라도 계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모스크바의 완전외교승인과 유엔가입지원에 대한 대가로 서울에서 30억달러의 대외원조를 약속했을때, 평양은 큰 타격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모스크바는 평양에 채무(약 46억달러로 평가된)청산의 통지를 보내고 91년 4월을 기점으로 물물교환에서 경화교역으로 전환했다. 이런 소련정책변화는 1990~93년간 북한경제에 약 20%의 수축을 가져왔다.³¹⁾ 91년 이전 소련이 평양의 최대교역상대국이었지만, 91년부터는 총교역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92년 대러교역량은 88년의 약 10분의 1이며, 평양 총 교역량의 12%인 29,2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원유공급은 경화교역의 유일한 예외이었지만, 소련, 러시아의 원유수출의 급격한 감소(80년대 중반 1,000만톤에서 92년 3만톤으로)는 북한경제에 최대타격을 주었다.

중국의 전환은, 외무장관 Li Langing과 강종모, 북한대외 경제교역위원회 부의장간의 쌍자협상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양국 모두 이 변화를 우호적인 모습으로 보이려고 했다. 평양은 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세부사항 없이 발표한 반면, 중국의 통신사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양국은 경제적 교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구하고 비록 이 변화가 북한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³²⁾

중국은 부득이하게 북한의 최대교역상대국이 되었다. 비대칭적인 중국-북한-남한간 삼각무역관계(중국-북한교역량이 중국-남한 교역량의 13분의 1인)가 출현했다. 85~91년간 중국은 24,560만달러에서 8,700만달러로 수입이 감소하고 23,900만달러에서 52,900만 달러로 수출이 증가하여 약 40,000만달러 상당의 무역흑자를 낳았다. 94년 중반에 중국은 북한대외교역의 2/3이상과 석유·식량 수입의 3/4이상을 차지했다.³³⁾ 91년 4월 제3차 한·소정상회담 직후 고르바초프는 소련 최고 평의회 연설에서 자신있게 한소경제전망을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91년 15억달러 그리고 95년에 100억 달러의 교역량을 예측하며 이것은 우리의 교역량이 매년 100%씩 증가함으로써 가능하다.” 석유산업에서의 투자증가도 약속됐다. 또한 시베리아와 극동러시아에서의 천연가스개발을 포함하는 48개 산업단지의 건설을 토론했다.³⁴⁾ 러시아 국내정치적 어려움과 심화되는 경제위기, 그리고 superpower였던 소련에서 Russian Federation 내지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로 전략하는 과정에서의 국가적 주체성의 위기등을 고려했을때, 약속과 성취간의 현격한 차이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1988~93년간 한소교역(93년 전반기 6억달러)은 고르바초프의 연설상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었고, 공약된 정치, 경제적협력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한소의 밀월은 93년 말경에 양국의 국제사정에서 나온 소위 Lippmann Gap(공약과 능력간의)으로 끝났다. 러시아 경제를 원

조할 서울측의 경제력이 쇠퇴함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난은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다. 서울측의 무역수지는 88년 114억달러의 흑자에서 91년 96억달러의 적자로 등락했다. 더구나 93년까지의 논쟁적인 정치적·경제적 이슈들은 한·러관계의 진전을 좌절시켰다. 첫째, 외교적 협상의 일부로 노대통령이 약속한 30억달러차관의 절반이 제공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기존차관제공에 대한 이자지불 실패와 서울의 경제력 감퇴에서 기인했다) 둘째, 83년 소련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대한항공 탑승자 296명에 대한 보상거부, 마지막으로 모스크바의 구 러시아 제국 영사관 대지에 대한 보상요구이다. 이러한 이슈들에서 나오는 국내의 압력은 서울로 하여금 시베리아가스관 건설과 같은 대형 투자계획과 15억달러의 상업차관제공등의 모든 원조계획을 중단시키게끔 하였다. 단 2,400만 달러 가량이 소규모 기업들에 의해 구소련에 투자되었다.³⁵⁾ 분명하게 한·러 관계는 정치/경제적 협력의 문제점들의 재조정과 협상을 요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1990년을 시발점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은 두만강지역 연안국가들(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추가하여 남한, 몽고, 그리고 일본)의 정치경제적 통합가능성을 찾기위한 일련의 회의를 가졌다. UNDP 주도하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은 subregional한 정치문제에 대한 기능적 해결책으로서 출현했다. 이 계획의 목적인 북한의 나진, 중국의 훈춘, 그리고 러시아의 Poyset 등의 후진지역을 90년대 말까지 미래의 Rotterdam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두만강 유역의 면세항구와 가공지역의 조성 그리고 Vlodiostok에서 남쪽으로 청진, 서쪽으로 중국 길림성의 Yanji에 이르는 변영구의 조성. 이 계획은 15~20년간에

최소한 300억달러가 든다고 평가되었다.

이론적으로 상기 6개국은 각국의 필요와 능력의 관점에서, 일본과 남한이 투자자본·근대산업기술·경영기술·시장운영기술을 그리고 북한·러시아·중국이 제조산업에 필요한 석탄·원목·광물·원자재를 제공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중국은 이 지역에 외항이 필요하며,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정치경제를 북동아시아의 역동력에 통합시키기를 원한다. 육지에 둘러싸인 몽고는 절실히 국제항구를 원하고 있다. 북한은 두만강 지역을 중국식의 경제특구로 바꾸려한다. 그러나 초기단계부터 TRADP의 운명은 이계획을 출발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할 남한과 일본의 참여의지에 달려있었다. UNDP가 가능성 연구에 350만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핵위기 이전에도 참여국들의 경제, 정치적 현실들은 UNDP의 개념과 정치적 운영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TRADP에의 일본의 관심은 소극적이고 미약했으며 남한의 관심은 서울-북경정상화와 북핵문제의 돌출을 계기로 급격히 감소했다. 임의적이고 조심스럽던 중국은 경제특구확장의 free-riding(편승)의 기회로 생각했다. 93년 3월 27일 중국은 TRADP가 중국 최대의 계획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TRADP는, UNDP하에서, 300억불 가량의 재정적, 기술적 원조를 수반하는 개발계획으로 정의된다.³⁶⁾ 이와 같이 중국은 이 계획을 중국근대화 운동에 기여할 또 하나의 다자간 원조계획으로 재정의 했다.

초기의 거대한 다자간 계획은 이제 소규모의 양자간 또는 삼자간 계획으로 나누어졌다. 93년 3월 19일 중국과 북한은 북한 동해안의 나진항 항만 시설을 중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쌍무협력조약을

체결했다. 93년 5월 9일 중국·러시아·북한은 국경의 경제발전구역에 필요한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장기대지임대권을 인정하는데 합의했다. 다음날 일본을 제외한 원래의 6개국은 두만강삼각지 주변국들의 활동을 조정할 조정위원회와 공사부분의 투자자를 유치키위한 국제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해 합의했다.

핵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1990~92년간의 한-중 및 한-러 간의 국교 정상화로 초래된 화해 분위기는 핵사찰에 대한 북한의 변화무쌍한 대응전략에 의해 크게 가리워졌다. 92년에 중국은 외교적 협상의 일부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었다. 더구나 외교적 고립과 경제위기상태의 북한의 유일한 동행자 그리고 경제적 후원자로서 북경이 평양의 유일한 통로로 남아 있다는 워싱턴의 기대를 북경은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90~91년의 페르시아만 위기에서와 같이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94년 4월말 한 고위정부관계자가 전하듯 “클린턴 행정부의 컨센서스는 중국이 핵위기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³⁷⁾ 93년 5월에 연례 MFN 마감 시한이 닥쳐왔을때 클린턴 행정부는 “무조건으로 중국의 MFN을 일년 연장했다. 그러나 재연장은 오직 중국의 인권문제에 달렸다”고 발표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핵위기가 중국의 지원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하에 중국의 핵확산 금지규범의 위반을 눈감아 주었다. 94년 5월 26일의 주요정책 반전 또한 북의 핵개발을 막는데 중국의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가설에 근거했다.

그러나 북경의 평양핵에 대한 통제 능력과 의지에 대한 가정은 불확실한 역사적·행태적 근거에 기초한다. 첫째, 중국의 탄도미사일기술과 핵무기 문제에서의 이중적인 행동은 중국의 핵확산금지성명을 회색시켰다. 66~76년간에 중국은 미소핵특점을 막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핵확산을 지지했다. 북경은 50년대말~60년대에 북기술자들에게 핵기술훈련을 제공한 외에는 핵지원이 없었다. 그러나 80년대에 중국의 핵확산 원칙과 정책은 두갈래로 나누어졌다. 핵확산금지 선언을 하면서도, 모택동 이후의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노하우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알제리아·아르헨티나·브라질·이란·이락·파키스탄·인도(중수)·북한·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도왔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냉소적이며 무자비한 'superweapon의 전파자'라는 미심쩍은 별명을 얻었다.³⁸⁾ 중국은 또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돕고 심지어 핵재처리공장에 기술을 제공했다고 보도된바 있다.³⁹⁾

제3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상이자 핵미사일 기술의 전파자인 중국은 핵문제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인도나 파키스탄이 NPT에 선뜻 가입하지 않는 이유도 중국이 이 지역에서 핵사용을 앓겠다는 의사표시를 주저하는데 있다. 핵보유천명 5개국중에 중국은 핵실험의 사실상 중지의무를 거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중국은 96년에 체결될 포괄적 실험금지(comprehensive test ban, CTB)조약 가입이전에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과도기에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태를 비추어 볼 때, 평양의 통제는 고사하고 설득능력 또한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1949년 공산정부의 수립 이래 현재 최선의 안보환경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공언하듯이 핵무기는

강화된 핵개발계획에서 증거로 나타나듯 중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이
 라면 북한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이 아닐 이유는 없다. 둘째로 한반도
 의 비핵화에 수사적 지지를 보일 뿐 한반도 핵문제는 배타적으로 북
 한·미국·IAEA·남한을 당사자로 하는 분쟁이므로 자신의 책임은 거
 듭 부인하고 있다. 환언하면, 중국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동시
 에 외무장관 Qian Qichen은 중국정부가 경제제재 뿐만아니라 IAEA
 문제의 안보이사회 소집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혀왔다. 93년 9월 29
 일 유엔 본회의 전의 연례연설에서 Qian은 경제제재, 핵확산, 그리고
 미국 해계모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신은 타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판매에 주력하면서 무기전파
 통제와 구실하에 타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모국의 임의적인 제재에 반
 대한다.”⁴⁰⁾ 중국권력층의 태도는 국제적 제재가 사회주의 동맹국이나
 인접국을 굴속시킨다면 중국의 핵무기와 비무장에 대한 이중성에 대
 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천안문 후의 대외관계의
 상태로 회귀했음이 보여진다.

안보이사회에 이 문제가 소집된다면 북경은 어떤 결의에 대해서도
 비토하리라는 위협을 할 것이다. Big Five중 중국만 강경노선을 유지
 하고 있으므로, 안보이사회는 중국의 minimalism에 적절하게 초안을
 희석시켜야 했다. 93년 5월 11일 안보이사회는 북한의 NPT탈퇴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중국·파키스탄이 기권한 가운데 채택
 했다. 이 배후에는 북핵문제가 6월 2~11일간의 뉴욕 미국-북한 쌍무
 회담의 논제로 되었다는 사실이 있었다. 94년 3월 28일 중국은 보다
 완곡한 의장의 성명을 관철시키며 안보이사회의 온건한 결의안을 좌

절시켰다. 94년 5월 29일 안보이사회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외교적 언어로 희석된 “평양측의 완전한 협력을 얻기 위해 추가조치가 있을 것이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셋째로, 중국은 한반도비핵화의 목표보다 한반도 안정성유지에 주력한다. 북쪽 국경의 완충지대에 있는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나 국경에서의 유동인구에 추가될 피난민의 급증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질 전쟁이나 혼란을 중국은 원치 않고 있다. 중국-남한간 외교관계 수립은 중국-북한 군사요원 상호 방문과 1961년 중국-북한동맹조약이 변함없이 남아있음을 볼 때, 양국간의 군사전략적 유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평양을 포기함은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잃는 것이며, 러시아가 현재 갖고 있는 미약한 수준으로 영향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평양의 국가안보사고나 행동에 대한 북경의 영향력은 매우 미세한 것 같다. Andrew Mack이 주장하듯, 평양에게 핵이 남한과의 경쟁에서 가장 cost-effective한 핵 억제력이며 전략적 equalizer의 역할을 한다.⁴¹⁾ 러시아의 지원축소와 핵우산 철수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로서 핵보유에 대한 북지도층의 결정을 강화시켰다. 간략히 최대의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중국이 한반도비핵화 방안의 일부라면, 한반도의 비핵화의 영향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핵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다.

평양은 국제공동체를 교착상태에 묶은 다음 최후의 순간에 국제사찰을 허용하는 반면 완전하고 무조건적 현장조사를 막음으로써 북경의 기만적인 핵전략을 모방하고 있다. 평양이 지역적, 세계적 무대에서 진지하게 대접받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변국가로서의 행위규범을

무시하면서 핵보유시도를 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함이 사실상 널리 알려진 지금 워싱턴·동경·서울에서는 모든 불확실성과 상면하는 상황을 공식화한 가운데, 평양은 막연한 추측의 게임을 하면서 그 룰과 참가의 방법을 계속바꾸면서 Yes와 No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소련과 러시아의 핵확산방지정책은 국내적·지역적·세계적 상황논리에 따르는 균형적인 것이었다. 핵확산방지는 냉전의 와중에서도 미·소가 공유했던 문제였다. 1968년에 체결되고 70년에 실시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미소합작의 초안을 재조정된 결과였다. 미소양국은 세계적 핵확산금지 기구수립의 주요한 설계자였을 뿐만아니라 한국의 핵보유방지에 노력했다. 미국의 압력하에 남한은 핵우산하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속에 핵개발을 포기했다. 아마 핵무기를 위한 원자로가 영변에 건설되고 있음이 발견되자, 북한의 NPT가입을 위해 미국은 소련에 압력을 넣어 85년 12월 12일 평양의 NPT 체결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⁴¹⁾

최근 핵위기는 조기과민반응과 시기를 놓친 무책이라는 딜레마를 러시아에 가져왔다. 미국에 쉽게 굴복한 뒤의 국내정치의 어려움과 수평적 핵확산의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엘친정부는 핵위기 해결에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고조된 긴장과 정권존립에 대한 위협을 가져올 국제제재의 가능성에 대해 엘친정부는 1991년 4월, 1961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제공의 의무를 만약 평양이 무력도발없이 외부의 공격을 받는다면 이행한다는 것과, 중국·일본·러시아·미국·남북한·유엔·IAEA간의 다자간 국제

회담을 제시함으로써 대신했다.⁴³⁾ 중국의 쌍무접근방식과 미국의 해
 계모니적 제재외교에서 소외된 러시아는 지금 게임에 다시 참가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은 러시아의 다자간회담을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거부했고 중국은 당의 노선과 어긋나는 것으로 기피했다.
 IAEA에서의 평양의 요원철수를 계기로 94년 6월에 핵이슈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을 때, 엘친대통령은 8자간의 회담내지 최소한의 냉
 각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8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워싱턴이 무
 시한 이 제안을 북경은 고려의 가치가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긍정적으
 로 반응했다. 역설적인 것은 Jimmy Carter 전 대통령이 개인적 순방
 외교를 통하여 Yeltsin이 제의했던 냉각기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동
 시에 거대세력으로서 한반도에 대한 다자간 핵게임에 러시아의 자발
 적 참여의도는 중국·일본과 더불어 한반도 지리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전통적 역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양의 신뢰와 영향력을 모두
 상실하면서 남한에 모든 것을 걸었던 전략적 실패의 인식에서 기인하
 는 것이다.

세계질서의 차원에서 보았을때, 한국 핵문제의 해결은 대부분의 국
 가들이 핵문제에 있어서 이중적기준-기존 보유국과 비보유국, 그리
 고 동맹국과 비동맹국기준-을 가지고 있듯, 핵확산방지이유에 분명
 하고 일괄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해진다. 이중
 기준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93년 48차 총회에서 두개의 핵확산반
 대결의안에 대한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투표행태
 에서 나타난다. 북한이 safeguards 의무이행에 실패한 것과 증가된 협
 조거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결의안이 일본·남한·러시아·

미국의 찬성과 북한의 반대 그리고 중국의 기권속에 140-1-9의 결과로 채택되었다. 이스라엘의 핵포기와 NPT가입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결의안은 중국·북한의 찬성과 미국의 반대 그리고 러시아·한국의 기권속에 53-45-65의 결과로 겨우 통과했다.⁴⁴⁾

한반도 통일과 중국·러시아

남북한 미래의 예측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재통일 구도와 관련된 이념적, 군사적(핵), 정치적, 법적, 그리고 사회적 요소들의 복합적 작용 뿐만아니라 분단체제라는 마지막 냉전의 요새에서 중국·러시아·일본·미국의 변화하는 역할들이다. 90년 모스크바-서울, 92년 북경-서울 정상화를 계기로, 네 당사자들에 역설적 결과를 가져오며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과 안보복합체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삼각관계의 두 구도가 나타났다. 모스크바가 정치적, 전략적 배경 변화의 주된 원인였다면 중국은 서울과 평양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함으로써 주요 수혜자가 되었다. 서울의 북방정책에 기인하는 동맹의 재정렬과 독일 방식의 흡수통일의 위협은 평양의 입장을 단일국가재통일에서 2국2체제의 평화공존모델로 변화케 했다.

이러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분석의 결론은 분명하다. 비록 상황에 맞는 전술은 아닐지라도, 그 어느때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주목할 만한 의견 접근이 존재한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중심과제이자 당면한 목표가 자국의 개혁과 변화에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조성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북경과 모스크바 모두 한반도통일의 실현보다는 세계5대세력중

대세력이 모인 한반도에서 안정성을 구하는데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현상유지를 의미하며, 전쟁에 의한 통일구도가 어떠한 변수로 모스크바와 북경의 정책대안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경과 모스크바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어떠한 구도도 공식적으로 언급함은 없었지만 최근에 서구에서 유행하는 ‘평화적 진전에 의한 통일’ 구도 역시 환영하지 않는다. 이 방식에 의한 통일은 북한정권의 붕괴가 필연적인 독일방식의 흡수통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 통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예기치 못했던 의견수렴은 핵문제에 대한 정책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망의 접근과 미국주도의 국제적 제재를 매개로 한다.

천안문 이후의 시각에서 볼때 평화적 진전에 의한 흡수통일 구도는 문제가 있으며 위험스런 것이다. 미국보다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을 원치 않는다는 현재의 인식은, 모택동사후 중국 대외정책의 근본적 역학을 보여주지 보다는 가려지기 쉬운 진실이다. 역사, 지리, 그리고 이념을 종합하여 볼때 힘의 균형이라는 현실정치의 유지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냉전기간 동안 전략적 삼각관계에의 참여경험으로 중국은 국가안보가 순수한 무력의 작용일 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중국이 거대세력 경쟁에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또 이를 능숙하게 이용해 왔다.

전체적 국력의 균형이 결정적으로 남한에 기울어 흡수통일 전망이 강화된 현재에서는 북한과 밀접한 군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안보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흡수통일구도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반대를 심화시킨 요인은 한국문제에 대한 미전략의 인식이다. 친중국계

홍콩신문이 기술했듯이 “미국은 이 기회를 북한을 몰락시킬 기회로 이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주의국가들에서 평화적 진전을 수행하는 미국 전략이다.” 그리고 미국은 “서독이 동독을 삼켰듯이, 남한이 북한을 흡수케하려는 목적하에, 최후의 스탈린주의자 국가인 북한에 대해 파괴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이념적 도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완충지대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전략적 위협을 발생시킬 것이다.⁴⁵⁾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중국(그리고 러시아)의 국내정치에 대한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최대의 위협은 완충지대의 이 사회주의 동맹국이 제2차 한국대전외에는 생존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경제제재가 성공하여 중국북동경계의 정권이 붕괴할 경우 제재가 가져올 최악의 두가지 결과를 상정했을 때, 제재는 무익한 것이다. 일면에는 제재가 북의 핵보유의지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북한정권을 불안정하게 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에 많은 난민유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북의 핵보유는 차선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국익에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제재에 대한 반대 또한 평양의 핵계획이 lost-effective한 전략적 equalizer로 작용할 뿐아니라 정권유지에 lost-effective한 보장책의 일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북경의 힘의 균형의 현실정치를 복제하듯, 모스크바는 분단한국에 중개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영향력 증대를 위하여 평양을 안도시키려는 방법으로서 92~94년간에 균형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균

형조절의 방법은 분단한국의 평화와 안정성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동시에 서울측의 북방정책성과와 국제사회에서의 높은 위치는 평양의 포위감을 촉발시켰다. 모스크바의 시각으로는 북한의 동맹배신감의 감소와 공격적, 방어적 자세로의 전환방지에는 상당한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딜레마가 나왔다. 분단된 일국인 남북한의 안전한 국제승인단계 없이는 통일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⁴⁶⁾ 독일의 경험에서의 교훈은 72년 기본조약에서 성문화되고 72~89년간에 실현된 'One Germany, two states'의 모델이다. 따라서 모스크바는 91년 7월 「조·소」 상호안보조약을 2001년까지 10년 연장했으며, 92년 11월 19일에는 한국과 러시아연방간에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다.⁴⁷⁾

최종 분석에서 가장 모순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점차 고조되는 지방주의, 지역주의 그리고 분리주의가 횡행하는 속에서 자신들의 국경내에서조차 완전히 통합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북경과 모스크바의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지방기관들이 중앙정책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중앙정부의 이익에 저해되는 독자적 법률과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의 중국과 모스크바의 한국재통일에 대한 'minimalist approach'는 더욱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욱더 행동하지 않는 cost-effective 의한 전략에서 나온 것 같다.

참 고 문 헌

- ¹ See, for example, *The Economist* (London), (July 16, 1994), p. 19.
- ² See Aaron L. Friedberg,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18:3 (Winter 1993/94): 5-33; Richard K. Betts,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8:3 (Winter 1993/94): 41; Samuel S. Kim, "Superpowe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Roger E. Kanet and Edward A. Kolodziej, eds., *The Cold War as Cooperation: Superpower Cooperation in Regional Conflict Management* (London: Macmillan 1991), pp. 367-401; and James N. Rosenau,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³ See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No. 16 (Summer 1989) and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 ⁴ See Georgi Arbatov, "Eurasia Letter: A New Cold War?" *Foreign Policy*, No. 95 (Summer 1994): 90-103; Daniel Deudney and John Ikenberry, "After the Long War," *Foreign Policy*, No. 94 (Spring 1994): 21-35; and John Lewis Gaddi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7:3 (Winter 1992/93): 5-58.
- ⁵ Karl Marx, *The 18th Brumaire of Louis Napoleon*, in Lewis Feuer, ed.,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New York: Doubleday, 1959), p. 320.
- ⁶ See Robert Jervis,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4 (December 1980): 563-592.
- ⁷ During the 1990-1991 Gulf crisis, for instance, China abstained o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78 (on the use of "all necessary means"), as its own way of "adhering to principles and upholding international justice." China cannot support the use of force in the name of the UN, on the grounds that the "United Nations,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is responsible both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to history." Being "responsible to history," Foreign Minister Qian later explained in an interview for the home audience, means that "the Chinese people still clearly remember that the Korean War was launched in the name of the United Nations." See UN Doc. S/SPV. 2963 (29 November 1990), p. 62 and *Renmin ribao* (People's Daily), December 17, 1990, p. 7.
- ⁸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 ⁹ See Jon Halliday, "A Secret Wa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hereafter cited as *FEER*) (22 April 1993): 32-36.
- ¹⁰ *Pyongyang Times*, February 11, 1978, p. 2.
- ¹¹ For further analysis of Soviet and American behavior in the setting of Northeast Asia during the Cold War along this line, see Kim, "Superpowe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¹² Robert Legvold, "Sino-Soviet Relations: The American Factor," in Robert S. Ross, ed.,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ripolarity and Policy Making in the Cold War* (Armonk, N.Y.: M. E. Sharpe, 1993), p. 87.
- ¹³ With an attractive package of high salaries, free housing, and paid annual home vacations, the Chinese government is reported to have successfully recruited several hundred senior scientist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to work on new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weapons systems. See

Guocang Huan, "The New Relationship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Current History* 91:566 (September 1992): 254.

¹⁴ Lowell Dittmer, "China and Russia: New Beginnings," in Samuel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4), p. 110.

¹⁵ Quoted in Lincoln Kaye, "China: Role Reversal," *FEER* (May 27, 1993): 11; see also Patrick E. Tyler, "China's Military Regards U.S. As Main Enemy in the Future," *The New York Times* [hereafter cited as *NYT*], November 16, 1993, p. A5.

¹⁶ *Cheng Ming* (Hong Kong), November 1, 1993, in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 China [hereafter cited as FBIS-China], November 5, 1993, pp. 1-2.

¹⁷ For a hyper-Realpolitik assessment of the emerging world structure, see Wang Lin, "Zhanwang jishi niandai," (Looking Towards the 1990s," *Guoji wenti yanjiu*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o. 1 (January 1990): 1-4; 9; idem, "Shijie jushi zhengzhi fasheng juda de bianhua," ("The World Situation In the Process of Profound Change," *Guoji wenti yanjiu*, No. 2 (April 1990): 1-3.

¹⁸ See the full text of the report in FBIS-China, October 21, 1992, pp. 1-21.

¹⁹ See *Tokyo KYODO* in English, in FBIS-China, February 27, 1992, 24-25; see also Nicholas D. Kristof, "As China Looks at World Order, It Detects New Struggles Emerging," *NYT*, April 21, 1992, pp. A1, A10.

²⁰ Consider what Georgi Arbatov, a leading Soviet/Russian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 has to say on this matter: "Perhaps as much as 40 per cent of the population (by official data again!), even by our own Spartan standards, were pushed below the poverty line, while up to 7 per cent became rich or even super-rich, many of them indulging in outrageous conspicuous consumption. Mortality increased by 16 per cent and the birthrate decreased by 14 percent." Arbatov, "Eurasia Letter," p. 92.

²¹ Alexander N. Panov, "The Situ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and Russia-Korea Relations Toward the 21st Century," *Asian Perspective* 16:2 (Fall-Winter 1992): 219. See also Gennady Chufirin, "Russian Interests in Korean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World," in Andrew Mack, ed., *Asian Flashpoint: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3), pp. 29-36.

²² UN Doc. S/PV. 3001, 8 August 1991.

²³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of Chinese behavior in the Security Council, see Samuel S. Kim, *China, the United Nations, and World Ord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p. 178-241, and ide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19 (January 1992): 140-157.

²⁴ UN Doc. S/22642, 3 June 1991; emphasis added.

²⁵ See the report by Tokyo's KYODO in English, in FBIS-China, 15 September 1992, p. 12.

²⁶ For detailed analysis, see Ipyong Kim, "The Soviet Union/Russia and Korea: Dynamics of 'New Thinking,'" in Young Whan Kihl, ed., *Korea and the World: Beyond the Cold War*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4), pp. 83-95.

²⁷ Jia Hao and Zhuang Qubing,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32:12

(December 1992): 1140.

²⁸ Barry Buzan coined the term "security complex" and defined it "as a group of states whose primary security concerns link together sufficiently closely that their national securities cannot realistically be considered apart from one another. . . . Security complexes emphasize the interdependence of rivalry as well as that of shared interests." This aptly describes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is is also what is meant by "common security" in world order studies. See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2nd ed. (Boulder, Colo.: Lynne Rienner Publishers, 1991), p. 190 and Samuel S. Kim, "The Two Koreas and World Order," in Young Whan Kihl, ed., *Korea and the World: Beyond the Cold War*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4), pp. 56-61.

²⁹ For a cogent analysis along this line, see Andrew Mack,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33:4 (April 1993): 339-359.

³⁰ Quoted in *ibid.*, p. 342.

³¹ See *FEER* (March 3, 1994): 46 and *The Economist* (July 16, 1994): 13, 19.

³² *North Korea News*, No. 665 (January 11, 1993): 3 and Beijing Radio International in Korea, 30 December 1992, in FBIS-China, 31 December 1992, pp. 4-5.

³³ Se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2* (Washington, D.C.: IMF 1992), pp. 134-135; *North Korea News*, No. 724 (February 28, 1994): 5-6; *The Economist* (March 26, 1994): 39.

³⁴ *Pravda*, April 27, 1991, cited in Kim, "The Soviet Union/Russia and Korea," p. 89.

³⁵ *FEER* (October 7, 1993): 30.

³⁶ *Zhongguo Xinwen She in English*, 27 March 1993, in FBIS-China, 30 March 1993, p. 68; emphasis added.

³⁷ Quoted in Douglas Jehl, "U.S. Agrees to Discuss Arms Directly with North Korea," *NYT*, April 23, 1993, p. A10.

³⁸ For thoroughgoing analysis and documentation, see Jag Mohan Malik, "Chinese National Security and Nuclear Arms Control," (Ph.D. dis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0), especially chap. 4 and William E. Burrows and Robert Windrem, *Critical Mass: The Dangerous Race for Superweapons in a Fragmenting World* (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especially chap. 12, pp. 378-402; and quote from *Critical Mass*, p. 380.

³⁹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the Library of Congress, 1992), p. 3 and Leonard Spector, *Nuclear Ambition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1989-1990*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0), pp. 118-137.

⁴⁰ For the full text of Qian's speech see FBIS-China, September 30, 1993, pp. 1-4; quote on p. 3. For a more recent trenchant attack on US "sanctions diplomacy" via UN, see *Renmin ribao*, July 15, 1994, p. 6.

⁴¹ Mack,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⁴² John McBeth, Nayan Chanda, and Shada Islam, "Nuclear Jitters", *FEER* (February 2, 1989): 15 and Spector, *Nuclear Ambitions*, p. 126.

⁴³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9-10, 1994, p. 5.

⁴⁴ Se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4 of 1 November 1993 a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78 of 16 December 1993 in *Resolutions and Decis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the First Part of Its Forty-Eighth Session, From 21 September to 23 December 1993* (New York: United

⁴⁵ See *Hsin Pao* (Hong Kong), April 8, 1994, p. 24, in FBIS-China, April 12, 1994, 13-15 and *Hsin Pao*, June 24, 1994, p. 25 in FBIS-China, June 24, 1994, pp. 7-8; quotes respectively at p. 14 and p. 7. Nations: Press Release GA/8637, 20 January 1994), pp. 11-13, 133-134.

⁴⁶ Georgi A. Arbatov, "The End of the Cold War: Russian-American Rel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 17:1 (Spring-Summer 1993): 101.

⁴⁷ For the text of the treaty, see *Korea and World Affairs* 16:4 (Winter 1992): 744-748.

第3分科:國際化時代의 韓半島 統一問題

- ◆ 國際化時代의 韓國의 統一政策
(이상우, 서강대)
- ◆ 國際化時代의 北韓의 對南戰略
(고병철, 일리노이대)
- ◆ 國際化時代의 南北 和解協力
(김한교, 신시내티대)

國際化 時代의 韓國의 統一政策

이 상 우*

I. 서

통일정책은 변화하는 현실속에서 불변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학이며 기술이다. 흐르는 세월속에서 통일의 주체인 한국도, 통일의 대상인 북한도 변하고 또한 국제환경도 끊임없이 변한다. 한국사회를 이루는 국민들의 구성도 분단 반세기동안 크게 변하였다. 분단의 고통을 느끼는 세대는 이미 사회활동에서 은퇴하였고 분단이후 태어난 세대가 한국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따라 통일의 의지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체제역량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정치역량, 경제역량, 외교역량, 그리고 군사역량도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자신감도 커져가고 있다. 북한에 대하여 방어적, 수세적이던 국민들이 이제 북한을 어떻게 수용할까를 생각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외견상의 호전성은 그대로일지 모르나 북한의 통일의지는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다. 점점 취약점이 들어나는 “주체경제”로는 더 이상 국가의 자주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북한 체제존립의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펴고

* 서강대

있다. 이제 북한은 통일보다 체제수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9년에 공식으로 종언을 고한 냉전체제는 전체주의 전체주의의 최고형태인 레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중 어느 것이 인류 보편의 이데올로기로 정착될 수 있는가 하는 실증 투쟁이었다. 반세기에 걸친 대결끝에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범세계적 보편가치로 자리를 굳혔다. 냉전을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해 왔던 남북한 관계는 이러한 세계사적 조류속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사의 주류를 타고 나가는 한국과,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북한과의 관계는 이제 대등의 관계일 수가 없다. 한국은 이제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제환경속에서 북한을 다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사회를 하나의 민주민족공동체로 묶겠다는 한국의 불변이 통일목표를 두고 이제 달라진 조건속에서 한국정부는 그 추구방법을 달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한국편입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성급하게, 그리고 초조하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차근차근히 원하는 형태의 통일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탈냉전의 세계질서는 하나의 보편가치를 추구하며 공통의 보편규범을 공유하는 통합 질서로 급속히 개편되어가고 있다. 각 국가의 자주성과 각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자율적으로 공존공영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범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이라고 부른다면 국제화, 세계화는 20

세기말에서 21세기로 이어지는 이 시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엄청난 속도와 강도로 진행되는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한국은 통일정책을 재조정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논해 보고자 한다.

II. 불변의 통일목표

대한민국의 통일목표는 불변이다. 그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성원을 구성체로 하는 하나의 민주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적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를 누리며 고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질서의 구축과 유지가 대한민국의 정치질서의 기본이념이다. 우리 국민들은 1948년 헌법제정 이래 여러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치면서도 국민적 합의로 이 이념을 재확인해 왔으며 북한이 이 이념체제를 무력으로 유린하려 하였을 때 우리 국민들은 굴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지켜 냈었다.

한국 국민은 북한에 거주하는 2천만 주민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은 북한 동포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이 지켜지는 사회속에서 함께 살게 되기를 갈망한다. 북한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남북한 주민이 함께 하나의 민주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한국 국민의 열망이고 그 열망을 이루는 것이 곧 통일의 목표이다.

한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수호에서 유지된다. 국민의 총의로 헌법을 수정하거나 혁명에 의한 체제변혁이 있기 전에는 한국의 정체성이 고쳐질 수 없다.

국가체제 기본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로 모든 국민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freedom with dignity)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개개인은 인격의 주체로서 국가 또는 체제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국가의사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가치의 실현을 위해 국민들은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초법률적 권리로 보장 받는다.

둘째로 모든 국민은 전체질서에 현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기 책임 아래 자기의 창의적 결단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 받는다. 이 권리는 소유권의 보장을 포함한다. 이 기본권은 “시장경제체제”로 실현된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제의 유지발전을 제1의적인 과제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국가정책은 이 기본과제 수행과 일치하도록 조정되게 되어 있다. 통일정책도 국가의 정책인 한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통일정책을 초헌법적, 초국가적인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인하는 정책구상도 가능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책으로 인식하게 되면 헌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즉 어떤 통일정책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을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현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 통일정책을 기속하는 이러한 원칙은 불변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전한반도에 걸치는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질

서를 구축하는 것이며 하나의 민족민주공동체를 세워 유지하는 것이다. 선택이 있다면 다만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는가 하는 성취방법에서 몇가지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을 뿐이다.

Ⅲ. 민주화 통일론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민주화 통일”이다. 북한체제가 변화하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수용하게 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이다. 현재의 북한체제가 다원주의 이념을 수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다당제 권력체제를 수용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이다. 한마디로 민주화된 북한과의 정치통합이 곧 통일이라 할 수 있다.

현존의 북한체제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과 상치되는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체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유기체설을 기초로 하는 전체주의 이념을 기본체제 이념으로 하고 있다. 국가사회를 생명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보며 개개인은 이 유기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개개인보다 전체를 앞세우는 전체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가치의 다원주의를 부인하고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절대주의 가치관을 “유일사상체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북한정치의 기초가 되는 “주체사상”, “노동당 1당지배체제”, “수령의 유일지도체제”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철저한 국가계획의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시장경제 체제와는 상극을 이루는 체제이다.

북한의 이념과 체제는 현상대로는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와 함께 설 수 없는 상극적인 것으로 둘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한국은 통일을 위하여 북한과 이념과 체제에서 타협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남북한이 내세우는 이념과 가치는 서로 상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한국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전체주의 전체주의와는 타협할 수가 없다. 한국은 통일을 위한다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이 가능하려면 북한체제가 “민주화”되는 수 밖에 없다. 북한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다원주의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한국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민주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민주화통일”이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불변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은 1950년대까지 북진통일을 추구했다. 무력으로 북한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을 대한민국의 일부로 통합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무력통일은 너무나 많은 인명희생이 예상되어 통일자체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1960년 9월에 공식으로 포기하였다. “민족화합민주통일론”에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공식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론”을 통일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 통일론은 통일과정 설정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거쳐 하나의 민족민주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 즉 모두가 “민주화통일론”이다.

북한의 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북한정권 자체의 결

정에 의하여 스스로 민주화의 길을 택하는 길이 있다.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단행한 자구적 혁명의 길,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티가 그 길이다. 북한내부에서 민주화요구 세력이 현존 정권을 타도하는 내부 혁명의 길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현존 체제가 붕괴해 버리는 수도 있을 수 있다. 그 어느 길이건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변화해야만 통일은 가능해진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 유도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북한정권 스스로가 민주화 개혁을 시도한다면 전폭적으로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 통일정책의 핵심이다. 또한 정치적 통합 이전이라도 북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정치적, 물질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간접으로 도와주는 것이 통일정책이다.

한국은 이러한 큰 테두리속에서 하나의 민족민주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의 노력을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분단의 관리이다. 현재의 분단상태를 잘 관리하여 분단이 가져 온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과 통일과정을 순탄하게 예비하는 것이 분단관리단계의 주된 노력 방향이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속에서 점차로 희석되어가는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교육을 통하여 강화해 나가야 한다. 통일의지의 상실은 통일의 포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이전 세대는 통일을 당연히 추구해야 할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분단 이후 출생한 신세대는 통일의 당위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는 통합과정의 관리이다. 남북한이 공존을 합의하고 비정치적 영역에서 교류, 협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게 되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남북한 사회를 하나로 묶는 통합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되도록 서로의 희생이 적게 이 과정을 관리하여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정치통합을 순탄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 세계 단계가 통일 한국의 관리이다. 두번째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정치통합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형식적인 통일은 완성되나 오랜동안 다른 세계에서 살던 남북한 주민들을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융화된 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해진다. 이러한 실질적 통일은 혼란이 없이 이루어나가는 작업이 통일에서의 제3단계 과업이 된다.

한국은 통일을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있는 과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을 두고 차근차근히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빠르면 10년 아니면 30년이라도 기다릴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은 통일의 시기보다 통일의 내용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V. 국제화시대의 통일환경

20세기를 마감하는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의 하나가 이른바 “국제화”와 “세계화”의 흐름이다. 이 흐름은 누가 계획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제화란 각 나라가 범세계적 가치와 준칙, 체제를 수용하여 이를 자기 행위의 지침으로 삼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화는 웨스트팔리아조약 이후 자리잡아온 민족국가(nation states) 중심의 세계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암시하는 엄청난 역사적 흐름이다.

그동안 세계질서는 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2차적 질서로 인식되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행위는 세계질서의 준칙을 따라 행하여 왔

으나 국내에선 자국의 고유준칙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국제화의 흐름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준칙과 제도를 국내에서도 적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흐름이 더욱 강화되면 주권국가의 절대적 지위는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국가가 더 이상 인간생활의 “포괄적 기본단위”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오직 하나의 중요한 “중간단위”로 변화하게 된다.

국제화는 경제활동 영역에서 앞서 진행되고 있다. 경제활동에 관한 국경계약 없이 전세계적 무대에서 각국의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제화는 진행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이 이를 상징하고 있다. 제한없는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이 운동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세계 60억 인구는 하나의 세계시장속에서 “우승열패”의 논리에 따라 자유경쟁적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범세계적 환경규제를 목표로 하는 그린 라운드(Green Round), 모든 나라의 노동조건을 평준화 하려는 블루 라운드(Blue Round) 등이 실현되면 물질생활에 관련한 국가의 규제능력은 현저히 감소된다.

안보 영역에서도 범 세계적 안보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냉전종식과 더불어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안보체제 구축 노력은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마치 국가가 모든 폭력을 공공화하여 하나의 안전 공동체(security community)를 이루었 듯이 세계질서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폭력을 유엔 등 보편적 국제기구가 배타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공공화를 통하여 단일 안보공동체를 만들려 하고 있다. 현재는 평화질서 구축 노력이 핵무기를 포함 대량 살상 무

기의 제한, 질서 교란자에 대한 공동규제 등의 형태로 진행되나 긴 세월속에서 세계단일 안보체제가 구축된다면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는 안보단위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치이념은 각국의 고유선택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모두가 함께 보장하여야 한다는 믿음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인권문제는 더이상 “국내문제”가 아닌 인류공동의 관심사로 되어가고 있다. 한 나라속에서의 인권 탄압은 앞으로 국제적 규제와 간섭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흐름이 더 거세지면 전세계는 자유 민주주의 보편적 이념을 공유하는 이념공동체로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전제주의 독재체제는 그 존속이 허용되지 않게 될 것이다.

국제화의 흐름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도 그 내용이 다 현실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방향은 대체로 잡혀가고 있다. 역사 흐름의 주류는 국제화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의 흐름은 우리의 통일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될까?

장기적으로 남북한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려는 통일의 목표 자체의 의미를 희석시킬 것이다. 주권의 절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권통합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며 한국도 북한도 세계 보편질서에 함께 편입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국제화는 통일정책 여건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목표, 체제능력, 통일추진환경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제화의 흐름중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이념의 보편

화 흐름은 우선 남북한통일 목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세계사의 흐름과 같이 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민주화통일론”의 정당성을 확신시켜주는 목표가치로 되어 국민적 합의 창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전체주의 전제주의 이념은 세계사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요소로 되어가고 있다. 이념 차원에서는 현재의 국제화의 흐름은 한국을 승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

둘째로 범세계적 단일 시장 경제화의 흐름은 국가계획경제를 고집하는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여 주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에 친숙한 한국은 경제경쟁에서 북한을 압도함으로써 북한의 체제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주고 있다. 북한은 결국 체제 존속을 위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현재의 교조적 전제주의 정치체제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세째로 세계안보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이 점차 강화되면 북한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핵무기를 기초로 하는 자주국방” 정책은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대량살상무기제한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일차적으로 약소국가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다음으로 강대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데 이러한 국제적 노력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화의 흐름은 통일문제에서 한국을 주도적 위치에 밀어올리고 북한을 종속적 위치로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리라 예상된다.

북한은 국제화 흐름이 지속되게 되면 스스로의 체제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북한이 국제화의 흐름에 순응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시장경제체제를 택하게 된다면 남북한간의 통일을 방해하던 “체제상극성”은 없어져 통일의 여건은 성숙되리라 확신한다.

V. 결 론

국제화의 흐름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추진하는 정책 환경을 개선하리라는 전망을 전제로 하면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 방향을 점검해 본다면 결국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한국은 통일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1차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국은 남한내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통일 한국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한국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유도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민주화 도상에 있다. 아직도 계층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민주주의 이념이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의 의식속에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제도의 민주화가 완성 되어있지 않다. 한국을 모든 한 민족 성원이 회구하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고른 복지를 누리며, 민주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로 만드는 일이 국제화의 흐름속에서 통일 주도권을 확보하는 첫째 조건이 된다.

둘째로, 북한의 민주화를 돕는 일이 곧 통일의 길이 된다. 북한이

정치 안정을 유지하면서 체제민주화를 스스로 추진하게 될 때 가장 희생이 적은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은 북한이 이러한 민주화의 움직임을 보이면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통일은 한 민족 사회성원이 모두 함께 공존 공영할 수 있는 하나의 민주 민족공동체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기는 통일”보다 “함께 사는 통일”을 앞세워야 한다. 국제화의 흐름이 한국편이라고 이를 등에 업고 북한을 압박하여 굴복시키는 것 보다는 북한의 현 정권이 새로운 살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 민족 살리는 통일의 길이다.

국제화의 물결이 세계사의 흐름이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흐름을 타야 한다. 이 흐름속에서 “민족 자존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 동포 2천만도 함께 이 흐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폐의 동굴”속에서 이끌어 내야 한다.

국제화는 우리에게 통일의 마당을 새로 열어 주고 있다. 한국과 북한이 각각 국제화 흐름에 합류함으로써 둘이 자유스러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國際化 時代의 北韓의 對南戰略

고 병 철*

I. 서 언

북한에서 거의 반세기만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으니 새 정권이 어떠한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 2년 동안에 북한은 핵문제로 남한, 미국, 일본 그리고 유엔(UN)과 대결함으로써 탈 냉전시대의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잠재적인 영향력이 국토의 크기, 인구 또는 경제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만 군사적 위협, 특히 핵무기확산방지체제(non-proliferation regime)에 대한 정면 도전이 국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포스트 김일성시대의 북한의 대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대남정책의 예측에도 적용되나 기존정책의 계승이 반드시 현상 유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현상 유지라는 개념도 변화가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대외정책(대남정책을 포함)은 외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정책도 변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김일성정권의 대외정책은 유동적이었다. 카터(Carter) 전 미

* 일리노이대

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한의 대미, 대남정책에 변화가 와서 고조 일로에 있던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정책의 연장은 유화노선의 계속을 의미할 수 있으나 반대로 강경노선의 부활을 예고할 수도 있다.

김일성주석의 극적인 정상회담 제안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이흥구 통일부총리와 김용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간의 예비접촉이 7월 28일에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합의서를 도출해낸 것은 이번만은 정상회담이 실현될 것이고 한반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었다. 만일에 김주석의 제안이 하나의 제스처(gesture) 또는 책략(tactical ploy)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컸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제안이 북한정책의 조정내지 변화를 반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현재를 될 수 있는 한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 과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부터 개관한 다음 김일성주석 사망당시의 북한의 대남전략을 분석해 볼까 한다. 다음 김정일정권이 기존전략을 과연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북한전략에 남한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음미해 봄으로써 결론에 대신할까 한다.

II. 북한전략의 변화와 지속성

만일 전략을 장기적인 행동계획이라고 정의하면 북한의 대남전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특기할만한 변화를 보여왔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전략적목표는 “패권적 통일”로부터 남북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 통일로 하향 조정된 듯 하다. 그러나 북한은 적화통일과 같은 의미인 패권적 통일을 30년이상 추구하였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최초로 사용한 전략은 바로 전쟁이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끝났다. 김일성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정권의 완전 소멸의 위기를 “중국인민지원군”의 개입으로 간신히 모면하였다. 이 경험은 김일성에게 전쟁에 의한 통일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휴전이후에 그가 선택한 전략은 혁명이었다. 남한에서 일어난 4·19 학생봉기로부터 그는 남한 인민들의 잠재적 혁명역량을 알게 되었고 월남전쟁으로부터 반제국주의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두가지 예를 토대로 김일성이 만들어낸 전략이 바로 세가지 혁명역량을 배양하는 전략이다.¹⁾ 세가지 혁명역량이란 “북조선의 혁명역량”, “남조선의 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역량”을 의미한다. 북조선이 “혁명의 기지”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이 혁명기지를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²⁾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의 당위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압박과 착취를 받는 것[이] 남조선 인민들”이라는 데서 찾는다. “그러

1) 김일성,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김일성 저작 선집 4(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pp. 77-96.

2) 위의 책, p. 80.

므로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남조선 인민들이 주동이 되어 일어서야”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혁명역량은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이기 때문에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세계혁명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빠져 들어갈수록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자들의 기반은 더욱 약해질 것이며 조선혁명의 승리는 더 빨리 실현될 것”이라는 논리이다.³⁾

이러한 혁명전략은 전쟁전략 못지 않게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청사진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활동영역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북한이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외적 변수들이 그 효율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가지 혁명역량중 북한의 통제가 가장 용이한 것이 북조선 혁명역량인데 그것의 강화도 외적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 단적으로 말해서 혁명전략은 불발탄으로 전략한 셈이다. 북조선에서 정치적통제가 강화되고 군사력이 확장하고 경제력도 1970년대 초반까지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남조선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사실 남조선 혁명역량의 강화는 완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친북한, 용공적 정치활동이 철저히 규제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은 생활수준의 점진적인 향상을 가져와서 혁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머물었다. 특히 반정부 시위는 독재반대, 민주화 지지의 차원에서 진행되었지 북한의 혁명전략과는 무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외교활동은 1970년대에

3) 위의 책, pp. 80-81.

어느정도의 성과를 보았고, 또 북한이 제3세계를 중심으로 “주체사상” 연구지원, 북한지지도단체의 조건, 테러리스트의 훈련 등 “국제혁명역량”의 배양에 열을 올렸지만 실제로 얻은 것은 아주 미약하다.

이처럼 혁명전략의 부진내지 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연방전략이다. 이 연방전략은 1990년 10월 10일에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주석이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 그 윤곽을 나타냈었다. 그런데 그 방안은 지난 14년동안 적어도 3단계를 거쳐서 변천해왔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⁴⁾ 첫번째가 선전단계(1980년 10월-1983년말), 두번째가 방안단계(1984년초-1990년말), 세번째가 조정단계(1991년초-현재)이다.

제6차 당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김주석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제의하였다. 연방의 개념 자체는 1960년부터 북한이 얘기했던 것이나 그러한 연방은 통일로 가는 길에서 잠정적으로 취하는 조치라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80년에 나온 방안에서는 처음으로 연방 자체가 통일의 형식이라는 주장이 나온다.⁵⁾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서는 “북과 남이

4) 고병철, “북한 ‘고려연방제안’의 정체와 운명” 신동아, 1991. 8, pp. 148-157

5)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 12. 이것은 김일성주석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중에서 통일정책에 관한 부분만 따로 출판한 소책자이다.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방공화국은 자주적인 정책실시, 민주주의와 민족대단결 도모, 남북간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비롯한 다방면의 합작과 교류, 전 인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리증진 등을 시정방침으로 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내지 15만명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 양쪽의 군대를 “통합하여 단일한민족연합군을 조직”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남북이 연방공화국을 세우기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 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 대표단을 보내야”한다고 북한은 주장한다.⁶⁾

이러한 통일방안이 처음 3년동안은 엄격한 의미에서 방안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선전도구에 불과하였다. 왜냐하면 이 기간동안 북한이 남한 정부와의 대화를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연방안을 설명하는 연설에서 전두환정권을 연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그 정권의 전복을 선동했다. 그는 “남조선에서 군사 파쇼 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만 연방형태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또한 남한에서 (1)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폐지

6) 위의 책, pp. 12-22.

할 것 (2)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할 것, (3)부당하게 체포 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석방할 것 (4)유신체제의 청산 (5)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의 수립을 촉구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연방제안은 혁명전략, 특히 남조선 혁명역량의 강화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 선전의 성격을 농후히 가지고 있었다.

김일성의 10.10 제안이 선전도구에서 방안으로 격상된 것은 1984년 1월에 북한이 처음으로 전두환정권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추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북한이 미국과 남한이 1979년에 공동 제의했던 3자회담을 지지하고 나옴으로써 묵시적으로 표명된 것이었다. 이것은 북한이 혁명전략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연방전략과 병행시키려는 의도를 반영한 듯하다. 단 북한의 3자회담 수용이 남한정권과의 대화 의사 표명보다도 미국과의 대화가 그 길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이 더 큰지도 모른다. 랑궁테러사건을 배경으로 발표된 북한의 제의는 남한도 미국도 물론 받아드릴 수 없었다. 북한이 연방제안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승격시켰을 때 남한은 어떠한 종류의 제안도 호의적으로 취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북한은 연방제안을 보다 실현성있게 조정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번째 단계인 조정단계의 특징이다. 1991년 1월1일 김일성주석은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가장 공명 정대한 통일방안이

라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지역정부 [남북한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시켜가는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⁷⁾” 그후 북한의 지도급 인사들은 연방제의 점진적이고 유연성 있는 측면을 강조했는데, 특히 지역정부가 잠정적으로 외교권, 군사권, 내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연방공화국이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 사실상 군사력을 통합하려던 본래의 의도가 대폭 수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외교권, 군사권, 내정권을 남북의 지역정부가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그것은 실제로 두개의 국가가 연방의 테두리 안에서 존속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변형된 연방제는 1989년 9월에 노태우대통령이 내놓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이전에 과도기적 잠정적 기구로 설정한 “남북연합”과 사실상 대동소이한 것이다. 북한은 자기 체제가 지배하는 형태의 통일의 비현실성을 통감하고 남북의 동등한 위치가 보장될 수 있는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게 된 것이며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은 그러한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상 필자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전쟁에서 혁명으로, 혁명에서 연방으로 변화해온 것을 요약하였는데, 그렇다면 북한전략의 지속성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지속성은 안전보장과 정통성(legitimacy)이 전략목표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전쟁 또는 혁명을 통해서 사실상 팽창(aggrandizement)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

7) 로동신문, 1991년 1월1일

도 안전보장이 최대 목표로 군림하고 있었다. 자체를 소멸 또는 흡수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경쟁 상대 또는 적대국을 타도하는 것은 안전보장의 담보가 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실용주의적으로 조정된 새로운 전력하에서 동등한 지위의 확보를 추구하는 것도 안전보장의 최종적 수단이다.

북한전략에서 정통성은 안전보장과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쟁도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만일에 북한이 승리하였다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절대적 정통성을 과시하는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의 지원을 받고 있는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은 북한에게 폭력적 해결방법을 시사해 주었는지도 모른다. 혁명도 같은 논리를 내포하고 있었고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이 연방전략을 채택했을 때에는 이미 절대적인 정통성 추구를 포기한지 오래이고 상대적인 정통성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부각하여 있었다. 그것은 수교국의 수를 늘려 남한과의 격차를 줄이고 국제무대에서 남한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외교활동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는 뜻이다.

Ⅲ. 김일성 사망 당시의 북한전략

전략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북한의 대남정책은 지난 40여년간 변천해 왔을뿐 아니라 지금도 다분 유동적이다. 북한의 전략적 레퍼토리(strategic repertoire)에 포함되어 있는 3대 개념 “전쟁, 혁명, 연방”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정된 시기에 그중 하나

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뿐이다. 물론 전쟁을 하고 있을 시기에는 혁명이나 연방제추구를 동시에 할 수 없었다. 혁명전략이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을 시기에 전쟁이 완전히 배재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군사력의 보강은 끊임없이, 그리고 경제 건설에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강요하면서까지도 추진되었으니 전쟁준비, 따라서 전쟁전략의 가동을 위한 준비는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지적인 것처럼 연방전략의 부상이 혁명전략의 완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통일 전선 전술을 끈기 있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남한 혁명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연방전략 우위시기에도 전쟁은 북한의 전략적 레퍼토리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이 하나의 대안으로 남아 있다는 뜻이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략은 아니다. 전쟁 수행 능력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막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한의 군사력, 그리고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감안하면 상당한 정도의 평가절하를 필요로 한다.

북한의 절대적인 군사력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질적인 면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최신 무기가 별로 많지 않은 데다가 러시아와의 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최신형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탱크등의 부분품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연료부족이다. 작년에 북한은 원유를 150만톤 가량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수요의 반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그중 100만톤 가량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인데 주로 흑룡강성의 대경유전에서

은 것이다, 대경원유는 중동에서 나는 원유보다 독해서 군사용으로 필요한 제트연료(aviation fuel)와 디젤(diesel)이 훨씬 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100만톤에서 상기한 두가지 종류의 연료가 20만톤 밖에 나오지 않는다⁸⁾ 이것은 북한이 예비(reserve)로 비축된 연료를 합치더라도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두말할것도 없이 경제력과 직결된다. 물론 경제적 및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우방이 있으면 별문제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위기에 달해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다음 3년간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조정기”로 지정하고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의 방침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⁹⁾

북한은 형식상으로는 군사동맹국을 둘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 중국과의 동맹도 북한의 전쟁능력을 뒷받침해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하는 침략행위에 조금도 도움이 안될 것이다.

북한의 집권층은 이러한 환경하에서 넓은 의미의 안전보장에 대하여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불리하게 된 안보환경(security environment)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상해낸 것이 핵무기 개발계획

8) “それでも ‘개전확율ゼロ’ とみるてだけの근거”, サンデー매일 '94. 6. 19, pp. 32-33

9) 월간조선자료, 1994. 6(동경 : 조선문제연구소), pp. 10-15

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북한의 핵정책은 북한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왔다. 그중 중요한 것으로 (1)남한에서 미국의 전술핵이 완전 철수된 것, (2)미국과의 외교접촉이 격상한 것, (3)제1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의 결과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과 그 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의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불사용 및 대화계속을 약속한 것, (4)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된 것, (5)미국과의 점진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할 확률이 높아지고 흑연감속형 원자로를 경수로로 대체하는데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전망이 생긴 것 등을 들 수 있다. 실질적인 이득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이득이다. 북한은 세계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클린턴행정부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김일성정권은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해야만 외교적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을 이용하여 유화적인 제스처와 제안을 했다고 본다. 제3단계 미·북한고위급회담의 개최가 가장 시급했지만 김일성은 남북정상회담도 제의함으로써 북한정책의 실용주의적 전환을 예고했던 것이다. 정상회담제의를 카터에게 선물을 준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보며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의지도 반영되었다고 풀이된다.

만일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을 성의있게 이행하겠다는 합의가 나오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협력과 교류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것은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역에 남한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북한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와 남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로 실현

될 수 있고 경제협력이든 보상이든 어떤 명목하에서 던지 상당한 규모의 일본자금, 설비,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방정책은 “사상오염”의 위험을 수반하며 체제를 흔들리게 할 가능성이 있으나 김일성은 경제개방 및 개혁과 사회주의체제의 공존을 적어도 단기적 내지 중기적으로 성공시킨 중국의 모델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북한에도 적용해볼 의도를 시사한 적이 있었다.¹⁰⁾

IV. 김정일정권의 대남전략

김정일정권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권안정이다. 이것은 대외 문제보다도 대내 문제가 새 정권으로부터 더 높은 우선순위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우선 순위에 있는 권력기반의 강화가 대외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정권안정을 위해서 꼭 풀어야 할 문제가 경제활성화와 인민생활의 향상이라면 이것은 내부의 자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김일성사망으로 중단되었던 제3단계 미·북한고위급회담이 후계체제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기도 전에 재개된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북한고위급회담이 성공하여 외교관계가 수립된다면 그것은 김정일정권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신호가 되니 새 정권의 정통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금수조치 해제, 경수로 도입을 위한 경제협력등 여러가지 혜택이 가시화되면 정권안정에 플러스가 될 것이 확실

10) North Korea News, No. 702(September 27, 1993), p.5.

하다. 미·북한관계 개선이 일본에게 미칠 영향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막대하다. 이 모든 것이 남북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남한은 공식적으로는 미·북한대화와 남북대화의 연계를 끊었으나 사실상으로는 연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김정일정권의 대남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중의 하나는 남한의 대북정책이다. 후자가 비우호적이면 전자가 우호적으로 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김일성사망후에 일어난 일들, 특히 남한의 강경정책은 남북관계의 단기적 전망을 흐려놓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7월27일에 있는 북한망명자 강명도와 조명철의 기자회견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간의 협의체제(trilateral consultations)에도 찬물을 부는 행사였다. 3단계 미·북한고위급회담의 재개를 9일 앞두고 미국에게 북한 핵활동의 과거를 추궁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문제만큼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남한정부의 저의였다면, 가장 중요한 동맹국과 우방에게 협의는 커녕 사전 통고도 안한 상태에서 신빙성 없는 “폭탄선언”을 발표한 것이 과연 현명한 접근방법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좌경된 학생, 노동자 등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행사였다면 과연 손익계산이 선행되었는지 궁금하다.

북한의 대남전력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첫 시그널(signal)은 김일성 추도행사에 남한사람들을 초대한데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통일전선전술의 표현이었고 남한정부가 경직된 자세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선전적 효과가 오히려 확대된 셈이다. 그후 남한정부가 김일성 추도식날, 6.25관계 러시아 문헌을 공개한 것, 그

리고 위에서 언급한 북한 망명자의 기자회견— 특히 그들이 강성산총리의 사위이며 전 건설부장의 아들이라는 점과 그들의 발언이 문자 그대로 폭발적이었다는 점¹¹⁾—은 사실상 남한의 남북대화 포기선언과 다름없었다.

남한이 강경정책을 쓰지 않았드라도 북한이 종전보다 더 유연성있는 대남정책을 채택할 확률은 희박했었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 직전에 보여준 유화노선을 계승할 가능성은 압도적이었다. 당분간은 대미정책에서만 전정권의 정책이 연속되고 대남정책은 냉각기에 들어갈 듯하다.

중기적인 전망은 훨씬 밝다.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새 정권의 정통성 강화를 위해서도 남북 화해와 교류가 필요하게 된다. 경제적인 혜택이 가장 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도 남북관계가 냉각되어 있으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계속해서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이 사회주의 붕괴가 시작된 후 부터 발표한 담화와 논문을 보면 그는 개방과 개혁을 매도하고 강경노선의 고수를 주장해 왔다.¹²⁾ 따라서 그의 주변에서 어떠한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는가. 그리고 외적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그의 정책의 경질성 내지 유연성이 결정될 것이다.

11) 독매신문, 1994년 7월28일.

12)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년 5월27일;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로동신문, 1992년 2월4일;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용될 수 없다.”, 로동신문, 1993년 3월4일.

V. 남한정책의 진로

근 반세기만에 일어난 북한의 정권 이양이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그러한 전망이 남한의 근시안적 정책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은 아쉬움을 가중시킨다. 김일성사망과 관련해서 김영삼정부가 강경정책을 쓴 것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6. 25남침이 남침이 남긴 지울 수 없는 적대감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다. 그러나 과거를 덮어두고 민족화해, 평화정착, 통일의 조기실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약속했던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더욱이 그를 신격화한 후계자와 측근들에게 전술적인 차원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쓸수 없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안할 수 없다.

미국 클린턴대통령의 조의를 표명한 것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갈망하는 그의 행정부와 미국 국민들의 의지를 대변한 것이고 적절한 전술적 대응이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은 미국의 본을 딴 것이며 다분히 전술적인 것이었다. 물론 북한과 가장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당이 연립내각의 수상직을 맡고 있다는 우연(coincidence)도 일본의 반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 두 나라보다도 정치적인 제약요건이 훨씬 많은 남한정부가 공식적인 조의표명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으나 비공식적, 비정부 차원의 조의표명까지 금지하고 조문객의 방북을 차단한 것을 과잉반응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한국 전쟁관계 러시아문헌 발표는 분명히 김일성이 전쟁범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효과를 노린것이니 북한의 새 정권을 극도로 자극했음이 당연하다. 북한의 강성산총리의 사위라는 강명도와 전건설부장의

2남이라는 조명철을 2개월이나 기다리고 있다가 7월27일에 기자회견을 시킨 것, 특히 강명도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5개나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 단절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이미 지적인 것처럼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3자협조 체제에 찬물을 끼얹는 그 기자회견이 남한의 안보 정책 조정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실현된 것인지 또는 안기부의 단독결정으로 연출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남한의 정책으로 풀이될 수 밖에 없으며 아무런 증거도 없고 논리적인 설득력도 결여된 선동적인 발언을 허용 또는 조작한 것은 김영삼정부의 판단력과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든 일이었다.

그 사건의 손실을 제한(damage control)하기 위하여는 두 망명자의 기자회견과 발언내용의 배경을 철저히 규명하고 만일 판단의 오류가 있었거나 관계 부처간의 권력다툼 또는 점수따기의 측면이 있었다면 책임 소재를 추궁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비공식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대안도 배제해서는 안될 듯 하다. 미국과 일본에게는 해명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종전에 했던것처럼 남북대화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미·북한 고위급 회담의 진전에 연계(link)시키는 대안도 고려가치가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연계(formal linkage)보다는 비공식적 연계가 더 바람직스럽다. 특히 경수로 도입문제는 남한과 일본의 참여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북한이 남북대화과 교류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것이 바람직스럽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한이 유화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 듯 하다. 대화상대인 북한을 “반국가단

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대폭 개정내지 폐기, 그법의 위반으로 구속되었거나 복역 중인 양심인의 석방 및 사면, 대북무역의 자유화, 기업관계자들의 투자상담을 위한 북한방문허용, 고려연방제안의 긍정적인 평가 등이 고려해 볼만한 조치들이다.

김정일정권의 안정화, 북한경제의 활성화, 인민생활의 향상 다시 말하면 북한체제의 조기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남한의 국익과 일치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평화적으로 또 무리한 부담을 피하면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남한의 대북정책의 대전제가 된다면 아니 이미 되어 있다면, 남한의 국내정치적 제약을 과감히 극복하고 남침이 도발한 동족상잔의 쓰라린 경험을 잠정적으로 불문에 부치고 대북유화정책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의 경험은 북이 남의 유화정책에 반드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새정권의 과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용주의적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김정일정권의 대남전력이 적어도 중기적으로 기존전략의 온건화 추세(momentum)를 계승하는나의 여부는 김영삼정권의 정책에 달려 있다.

國際化 時代의 南北 和解協力

김 한 교*

최근 수 개월간 세계언론이 북한의 핵개발에 관심을 쏟아온 결과 더욱 근본적인 남북한관계가 소홀히 취급된 감이 있다. 그러나 핵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경쟁·긴장에 기인한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바가 아니다. 이 글을 쓰는 현시점에(1994년 6월 29일) 핵문제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제3차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7월 8일부터), 또 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첫번째 남북정상회담이 7월 25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에 크나큰 정치적·상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문제중 하나인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불과 몇주일 전만 해도 매우 우원한 사안으로 생각되던 일이다.

본 논문은 먼저 화해와 협력(화협으로 약칭)이 1972년 이래로 주기적으로 시도되어온 과거의 노력을 약술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홍보가 있었지만 대체로 처음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밖에 없었다. 그러나 화협이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요인 내지 과정인것은 분명하다. 남북한이 화협을 추구하는 이유 내지 목적은 상이하다. 이러한 이유와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전략을 이 논문에서 고찰해보려고 한다. 다음은 본 논문 제목이 『국제화 시대』라고 명기한것은 남북한 관계를 특정된 조건하에서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 신시대

1) 오늘날 국제화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힌 다음 그가 화협에 미치는 긍정적 또 부정적 여파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은 끝으로 정책입안상의 제안 특히 남한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열기해 보겠다.

I. 和解와 協力을 위한 努力的 記錄

남북한이 그들 선전속에 정치적 화해와 경제적 협력을 이야기한지 오래이다. 7·4성명 이전에도 우호적 관계를 바란다는 말이 평양이나 서울에서 흘러왔었다. 상대방을 무찔러야한다는 호전적 구호를 하면서도 북한은 1960년에 연방제를 제창했다. 이어서 경제협력이나 원조를 제안했다.²⁾ 남한에서는 『북잔론』이 점차사라지고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도발적이 아닌 구호, 남의 경제적 자위한 그리고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하는 노력이 강행되었다.

(1) 1972년 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의 공동성명은 남북대화의 문을 열고 그 의제로서 화협을 포함시켰다. 이 성명은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방면적인 제반교류』(제3항)를 포함한 여러조치에 합의하였다. 이에따라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고 그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전략)

(ㄴ) 남북의 각 정당·사회단체·개인간의 광범위한 정치교류를 이루는 문제를 상의·결정하며 이를 실천함.

(ㄷ) 남북의 경제·문화·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문제를
상의·결정하며 이를 실천함.』

조절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에 관한 더 상세한 안(예를들면 『경제인·상품·과학기술의 교류…교역전시회교류…학술문화방면교류…체육교류 등). 그러나 이러한 교류가 성사된 것은 거의 없었다. 1973년 가을에 남북대화의 첫단계가 끝나자 상호화해 아닌 상호비방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도 긴장완화와 반도통일을 위한 여러방안을 쌍방은 계속 발표하였다. 북은 1980년에 종전과는 달리 연방을 통일의 최종단계로 하는 통일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평양측의 근본방침은 여전히 정치협상 범민족회의 또는 다른 일괄해결안을 써서 정치적 단일화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와 반대로 남은 경제·문화·사회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신뢰구축을 한다는 점진적 기능주의적 방침을 고수하였다. 전쟁과 장기간의 적대관계로 말미암아 생긴 불신과 긴장을 신뢰와 평화공존의 자세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남은 각종교류·협력을 위한 문호개방(1974년), 민족화해(1982년), 경제협력 20개시범사업(1982년), 원자재·제1차 산업생산품 거래(1982년)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여러제안은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묵살되어 버렸다. 1972년에 대화 시작한 후 십년이상 화협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2) 1984년 수재구호

화협과정의 으뜸가는 실적은 1984년 남한 수재시 북한이 구호물자를 제공하고 그 다음해에 소수의 일반시민들이 연예인들과 함께 서로

상대편 수도를 방문한 일이다. 이어서 대화의 새로운 창구가 열리게 되어 화해의 기대가 커졌다. 그중 하나는 경제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남북의 물자교환품목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기까지했다. 교역을 주관할 경제공동위원회도 거의 결성되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1986년 중기에 한미합동군사연습이 구실이되어 이러한 유망한 일이 급작히 무산해 버렸다.

(3) 1980년대 후기이후의 평양측 정책의 새로운 초점

1980년 후반기에 구소련권이 급히 쇠퇴하고 서울측의 북방정책이 성공함에 따라 평양측의 외교적·경제적 입지가 약화되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과 일본에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고 또 외자를 유치하였다. 1988년말경 미국과 북한은 북경에서 공식접촉을 시작하였다. 1993년초에 북한핵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더 높은 차원에서의 쌍방교섭이 뉴-욕과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었다. 전대통령 지미, 카-터의 “이니시아티브”의 결과 제3차회담이 마련되었다. 북한은 유사한 외교노력을 일본과의 수교를 위하여 해왔으나 현시점에 서는 북미교섭 결과를 기다리면서 보류상태에 있다.

이와같이 외교적 노력이 이제까지(1994년 6월 현재) 별로 성과가 없었는데 외자유치노력 역시 비슷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1984년에 북한 지도층은 주체주의 경제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어 자급자족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채 합영체에 대한 외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1993년말까지에 111건의 외자투입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98건 즉 거의 90%가 제일 조련계 자본이고 중국과 구소련은 겨우 3건씩 밖에 되지 않는다.⁶⁾ 금액으로는 조련계출자가 130억원(일본원),

미화로 9,000만불 정도이다. 이렇게 부진한 외자 도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1994년 4월 북한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서방측 그리고 남한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발표하였다.

남한자본의 대북투자는 1989년 현대의 정주영의 북한방문이 널리 보도되었을 때부터 거론되어왔다. 1992년에는 대우의 김우중이 역시 방북하고 자유무역공업단지로 예정된 남포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남한은 또한 UNDP주최로 다국가 공동사업인 두만강하류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사업은 1991년 8월에 처음으로 준비모임을 가졌었다.

북한이 얼마나 큰 기대를 이 사업에 걸고 있는가를 1993년 가을 즉 북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된 때에 서울에서 열린 이 사업에 관한 기술 모임에 북측대표단이 참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4) 1991년의 기본합의서

앞서 본 외교적·경제적 사태에 병행하여 남북대화도 1990년대초에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1990년과 1991년에 8차에 걸친 총리회담을 거쳐 포괄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결실되었다. 그 전문을 보면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제1장 『남북화해』에는 다음의 8개조목이 있다.

제1조 상호체제인정과 존중

제2조 상호내부문제 무간섭

제3조 비방과 중상중지

제4조 상대방과괴·전복행위금지

제5조 정전을 평화상태로 전환. 그때까지는 정전협정 준수

제6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7조 관문점에 연락사무소 설치

제8조 합의 이행하기 위하여 정치분과위원회 구성

또 제3장 『남북교류·협력』에는 다음 9개조목이 있다.

제15조 자원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

제16조 과학·기술·교육·문학·예술·보건·체육·환경과 신문·라디오·텔
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에서 교류와 협력

제17조 남북자유왕래와 접촉

제18조 이산가족의 자유서신거래, 왕래, 재결합

제19조 철도·도로·해로 항공로 개통

제20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개통과 비밀보장

제21조 국제무대에서 경제...문화 등 협력, 대외공동진출

제22조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공동위원회 구성

제23조 합의이행하기 위하여 교류·협력분과위원회 구성

이상 조항이 다 완전히 이행되었다면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에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실현되리라고 믿기는 어려웠고
사실 이행되지 않았다. 조인후 1년도 되기전에 이렇게 힘들여 구축한
화해기구가 완전히 무너지고 『타임스피리트』 훈련 그리고는 핵문제때문
에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고 말았다.

(5) 상호방문과 접촉

위에 말한 일만가지고 따지자면 남북간의 평화적 교류는 완전히 실

패했고 남북에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발표해온 것이 선전에 불과했다고 결론짓기가 쉽다. 그러나 좀더 시야를 넓혀 진상을 알아내기 위하여는 그동안 조용히 이루어진 상당수의 각종의 접촉이나 교류를 함께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비록 예기치 않게 중단되는 일이 있었지만 남북간 접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소수의 한국인이 상대편 지역에 갈 수 있었다. 물론 그 중 대다수는 정부관리·언론인·체육인·예술인 등이 공식 또는 준공식자격으로 여행한 것은 틀림없다. 글이나 그림으로서 상대편 사회의 소식을 대중보도기관을 통하여(특히 남한에서) 널리 알려지는 일이 점차로 늘어났다.

이 이외에 해외의 국제모임에서 남북인사가 계획적으로 또는 우연히 만나는 일도 생기고 있다.⁸⁾ 그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 한인 수천명이 최근에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접촉의 집적적 결과는 화협 과정을 아마 돕게 되리라고 본다.

(6) 1988년 이후의 남북교역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또하나의 중요한 화협기구는 남북간의 물품 교역이다. 1988년에 남한이 북한산수산품을 제3국을 통하여 반입한 것이 확인된 최초의 상거래이었다. 1989년 초에는 북한산 석탄이 남한항구로 직종되어왔다. 뒤이어 다른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1991년에는 남북한의 상사가 제3자의 중개 없이 직접 상담하여 쌀과 석탄을 빠-타 교환하기로 계약하였다. 1988년 10월에서 1993년 7월에 이르는 기간에 남한공식통계에 의하면 4억93만3천불에 달하는 반입(북한으로부터)과 1,983만7천불의 반출이 있었다한다. 이 4년여 동안에 남

한은 20대1이란 반입초과를 기록했다.⁹⁾

1991년의 기본합의서가 명기한대로 남북교역은 국내상거래로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하나하나가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정치적 효과를 면밀히 계산하고 있는 듯하다.¹⁰⁾ 교역이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러한 비경제적 변수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또하나 분명한 것은 핵문제가 해소되고 비위기상태가 부활되는 날에는 남북교역이 급증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거래를 통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주민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과거의 화협노력은 선전효과가 주로 접촉이나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종이였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반면 비록 서서히 조심스럽게나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 냉전시대적 대립이 아닌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 특히 경제교류에 있어서 현저한 발전이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II. 和解와 協力 政策

한반도의 분단은 이제 50년째에 접어 들어가고 있다. 동족상잔은 휴전으로 끝났으나 서로 대진하고있는 군대가 언제 다시 포문을 열런지 알 수 없다. 상호비방의 소리가 높았으며 폭력과 테러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 통신왕래가 두절된 상태에서 사상교육을 해왔으니 적대심과 불신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악감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공표된 화해지향적 발언은 실속없는 “제스츄어”에 불과한 적이 많다. 협력이니 원조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도

1984년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실천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화협사업은 선전효과만을 노린 것이라는 비꼬는 견해를 바로잡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화협이 가능하다거나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반도의 내외형편 특히 외부상황을 생각해보자.

(1) 남북이 직면하고 있는 새환경

국내문제로서 승계문제는 북한의 가장 중대한 당면과제이다. 이에 겹쳐서 경제적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하니 김일성 다음 시기로의 전환이 불안스러울 밖에 없다. 북한주민이 남한이나 다른 주변국을 쳐다보면 자기내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한편 남한에서는 민주발전과 경제발전의 두 요인이 근본적인 사회변천을 가져오고 있다. 권위주의적 탄압이 끝나고 상당한 민주적 자유가 가능해졌고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상당히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남한주민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열약감이나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구소련제국의 붕괴와 중국의 변신은 북한에게 외교적 고립화 뿐아니라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다. 북쪽주민에게 『국제화』라는 개념이 생소할지 모르나 그중에서도 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주체사회주의가 냉전종식으로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여러 면에서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짐작할 것이다. 북한지도층내 여러 인사들이 강약의 차는 있겠지만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 있어서도 국제화시대는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왔다. 무역자유화 압력으로 지금까지 국내시장을 보호해온 장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정치적 민주개혁과 경제성장이 병진되면서 노동임금이 오르

게되어 생산비가 높아졌고 특히 노동집약적 기업에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소자금·저기술분야에서 대자금·고기술분야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동과정에서 불안과 걱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2) 화해와 협력의 이유

남북한이 화협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이 나의 가설이다. 다음 표에 제시한 대로

| | 제 1 목 적 | 제 2 목 적 | 제 3 목 적 |
|-----|---------|---------|---------|
| 북 한 | 생 존 | 통 일 | 평 화 |
| 남 한 | 평 화 | 경제이익 | 통 일 |

북한의 제1차적 목적은 정치·경제적 생존이다. 정치적 생존은 국가로서의 독립과 안보를 말한다. 현 정권과 김 일가의 존속도 거기에 포함된다. 경제적 생존은 최소한·완전한 파산을 면하자는 것인데 에너지와 식량부족이 보도된 바와 같이 심각하다면 급한 과제이다. 경제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외부로부터의 자본, 공장 및 기계·기술 등의 도입으로만 가능한데 그 공급원으로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곳은 남한이다. 북한의 국제적 접촉이 많지 않고 신용도도 높지않은 까닭에 (1970년대 중반에 외채상환실패가 원인중의 하나) 남한이 가장 용이한 공급원이기도 하다. 북한의 두번째 목적은 민족통일이다. 북한에서 통일을 열정적으로 회구한다는 것은 북한연구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화협은 평화통일의 선행조건이요, 동시에 정치적통일에 뒤따라야할 업무이다. 만일에 정복을 통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그 가능성은 희박하지

만) 화협은 사회의 통합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여건이다.

인상론적 견해이기는 하나 북한은 생존과 통일 다음에 전쟁회피를 설정을 하는 듯 하다.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남한이 선공하는 전쟁은 있을 것같이 보이지 않으므로 북한입장으로는 그다지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화협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책 목적 순위상 낮다.

남한의 목적 순위는 이와 다르다.

제2차 내전방지가 최고순위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놀라운 발전의 경제적 기반이 전쟁을 와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쟁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화협은 긴장을 풀고 북측의 공격가능성을 극소화시키는 방편이 된다. 제2순위는 경제적 이익이다. 최근에 또한번 있었던 일인데 전쟁소문이 나면 그 즉시로 외국인의 대한 상거래 또는 한국관광여행 등이 타격을 받게된다. 그 반대로 화협은 남한기업인의 대북거래나 투자를 돕는 결과가 된다. 제3순위는 통일인데 통일이야말로 화협의 목적이라고 남이나 북이나 공인하고 있으나 순위로 따진다면 남에 있어서는 평화와 경제적 고려에 뒤따르고 있다.

화협의 목적이 북(생존·통일·평화)과 남(평화·경제·통일) 사이에 순위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차이는 화협전략과 방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한가지 부언할 것은 이러한 여러 목적이 서로 상치되지 않을 뿐더러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3) 전략

(1) 북한

북의 화협정책은 국내정치질서에 대한 협위를 극소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소련의 경우를 보아도 “그라스노스트”나 “페레스트로이카”가 멀지 않아서 폭발하도록 장전된 시한폭탄이었다는 것을 평양의 지도자들은 알고 있다. 사상교육·통제·규율 등은 경제개혁중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중국의 예는 북한에게는 부분적으로 밖에 도움이 안된다. 공산당 독재와 공인된 정치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 신봉은 평양이 수긍하는 바이지만 그 반면 중국의 시장경제 실험은 경제적 효과는 불만하지만 정치적 여파는 반감지 않다. 중국 사회는 내외국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중국내외에서 여행할 수 있게 되자 소위 “정신오염” 현상으로 해독을 입게 되었다. 이와같은 소련의 실책과 중국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외부사람들과 그들의 정치적·문화적 영향을 못들어오게 막아야 한다. 북한사회에 있어서 문호개방은 그의 생존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된다.

북한은 두만강개발사업·남포자유무역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사업을 자국민과 외부인간의 접촉의 범위와 성격을 규제하는 조건하에서만 수용할 것이다. 외부인 특히 남한주민의 방문이나 북한내 여행이 자유화되면 오래동안 폐쇄된 북한사회의 기강이 약화되고 말 것이고 더 욱이나 정치적 교란활동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 왜 자유왕래가 북한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만일에 경제교류가 자본·물품 또는 기술에만 국한된다면 “오염” 걱정은 분명히 줄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에서도 만일에 외부의 지배 내지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은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화협형식으로는 경영 지배권이 없는 투자 제한 조건이 많지 않는 방식의 기술이전 북한이 선정하는 주요물품의 교역 북한내 자원의 북한경영하의 공동개발 등이 있을 수 있다.

(ㄴ) 남한

남한의 화협정책은 전쟁방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남이 선제 개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이 자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두가지 전제하에서 생각해 보면, 북을 싸우거나 아니면 자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필자는 여기서 북 스스로도 옛 동맹국의 도움을 바라볼 수 없는 현상황에 비추어 전쟁을 가망성 있는 선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간 의사전달의 완전한 실패 또는 지도자의 엄청난 판단착오의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제2차 한국전쟁을 예방하는 길은 북한이 최소한의 안보와 경제수준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화협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북의 고립감·불안감을 덜어주는 공개적·의도적 노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남의 교육·언론·정부기관은 종전의 홍보내용을 수정하여 한민족의 단일성과 한국문제해결을 위한 무력사용 반대(단, 자위행위는 제외)를 강조하여야 한다. 기본합의서에 담겨있는 불가침·상호존중 약속을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감소책을 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이 이런 일을 위한 이상적인 모임이다.

경제관계에서는 남은 현재 북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식량을 공급하고 나아가서 북의 경제발전의 기반을 닦기 위한 원조와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교역·투자·합작·기술이전등 분야에 있어 양

자가 다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자존심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두만강하류나 남포사업외에도 남북이 협력할 일이 있을 것이다. 남한은 국제경제적 진출을, 북한보다는 앞서 추진했고 경험도 더 많으니 북이 경제적으로 문호개방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의 단기 또는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돕는 가능성은 여러가지 있다.¹¹⁾

(ㄷ) 쌍방

화협은 조심스럽게 입안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쌍방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양측의 최우선 목적인 북의 자주, 남의 평화는 양립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목적이다. 그리고 이 두 목적은 다른 목적의 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의 제2차 목적인 통일은 화협이 가능한 여건하에서 제1차 목적에 뒤이어 있을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가족의 재회와 같은 인도주의적 사업·학술·예술·기타 문화교류 체육행사 등은 문화적·사회적 간격을 좁히고 “커뮤니케이션”을 돕는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분야나 문제를 회피한다면 이러한 상호교류는 쌍방정치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 남한의 제2차 목적인 경제적 이득은 남북교역 투자등을 통하여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고 서로 보완하게 됨에 따라 자연히 따라올것이다. 『규모의 효율성』(즉 어느 정도 큰 규모를 가진 기업이 높은 수치상 효율성을 갖는다.)만 따져도 남한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고 동시에 북은 새로운 직장 과학기술·경영기술의 이전, 그리고 국제시장까지도 얻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득과 앞서말한 다른 목적과는 상충되는 것이 없다. 제3차목적 즉 북의 평화, 남의 통일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병립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남북의 화협목적은 꼭 동일한 것은 아니나 서로 합치·중복되고 상호모순이 없다. 이런 목적을 추구하는 남북의 전략 역시 차이는 있지만 상충되지 않는다. 어느면에서는 이러한 여러 목적이 상호 보완적(Synergism)으로 관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협만이 군사적 충돌이나 극심한 사회혼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Ⅲ. 國際化 時代

냉전이 끝날무렵 새로운 국제관계양식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국제화」라고 부르게 되었다. 구소련권이 망하자 정치적 이데오르기가 국가간의 대립의 기본요인이 되었던 시대는 대체로 사라졌다. 경제적 경쟁이 초강대국간의 군사대결을 대신하게되었다. 사람·물자·자본·기술이 대규모로 국제간에 오가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었다. 다국적기업체가 좋은 예가 되듯이 탈국국적인 경제교류가 규모도 커지고 그 구조도 복잡하게 되었다. 기술혁명의 속도가 빨라지고 전세계로 전파되게 되었다. 환경보호필요상 지구촌의 상호의존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되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국제간의 교류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 협약의 수가 늘어났다. 현존하는 GATT가 좀더 체제화된 WTO(세계무역기구)로 대체되면 국제경제기구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이와같은 세계의 정치경제의 근본적 변화에 병행하여 지리적·정치적 경계를 넘는 문화·사회교류가 급증하였다. 현대적 교통 통신기술은 사상·정보·예술의 전세계적 전파를 가능케하였다. 그렇다고 전통

문화가 없어진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종이나 국적을 초월한 어떤 공통된 희망과 가치관이 세계 여러 곳에서 특히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세계문화가 자라나고 있다고 하겠고, 특히 人生의 근본 명제인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국제화시대의 국가간 관계는 현대 과학기술을 토대로 하여 시장경제와 상호의존원칙에 따라 서로 경제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기본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전세계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국제화가 남북한의 화협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IV. 國際化와 和協

현재의 세계환경은 한반도의 화협에 잠정적 그리고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몇가지만 지적하기로 한다.

(1) 화협에 도움이 되는 요소

국제화는 평화적 비폭력적 탈이데오로기적 실용적 국제교류를 조장한다. 남북한 주민도 이러한 실리분위적 거래의 혜택을 알게된다. 고립된 북한의 주민은 남한인보다는 더 큰 시련을 겪게되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체제변동의 여파는 한반도에도 미친다.

세계를 덮는 통신망의 덕택으로 여러지역의 현대 발전 체험에서 나오는 정보나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체험 중에는 분단국이 재통일되었거나 재통일되어가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남북한 화

협사업은 전세계를 교실삼아 효율적인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동시에 한반도외의 자본이나 기술같은 자원을 남북화협사업에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국제단체나 다국적기업중 다수가 한반도 특히 저임금 유능한 노동력을 가진 북한에 진출하여 반도내의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게 될 수 있다.

(2) 화협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

국제화시대는 치열한 경제적 경쟁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으로 인하여 지금 초창기에 있는 화협을 방해하게 될런지 모른다. 비한국계 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간 거래를 가르칠 수가 있다. 남북간 경제 유대가 튼튼한 기반을 닦기도 전에 자유경쟁의 바람이 불어 닦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비한국 집단이 분단된 한국이 통일된 한국보다는 다루기 쉽다는 생각으로 화협자체를 고의로 사보타지 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화 시대의 국제경제기구는 남북한간의 거래를 국내적 상거래로 간주 안할려고 할 수 있다. 1990년에 남한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싸게 쌀을 북한으로 보낸일이 있는데, 이때 미국의 항의가 있었다. 남북교류에는 비경제적 변수를 생각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불법보조이니 불공정거래라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동서독간의 무역의 경우 1990년에 국내거래라고 변명하여 성공한 전례가 있다.) 이 밖에도 공산국과의 무역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미국 국내법이 앞으로 북한내에 설립될 합동기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¹²⁾

좀더 추상적인 관찰이 되겠지만 지금 발생하는 세계질서가 근본적으로 국가를 초월하는 입장인데 반하여 남북한의 화협은 근본적으로

민족국가의 이익에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론상 상반되는 움직임이 세계무대에 병립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 인종·종교등 이유로 분리·독립을 찾는 운동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국가를 초월한 광역의 통합운동이 같은 시기에 때로는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앞서 말한 상반되는 역사의 큰 조류가 어떤 영향을 한반도에 미칠 것인지 속단할 수 없다.

이러한 긍정·부정적 요인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적어도 국제환경에 관한 한 화협의 장래는 유망하다. 부언할 것은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화시대에 더 잘 견뎌나갈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북정부당국에 특히 화협에 더 관심을 표시해왔고 “이니시아티브”를 취해야 할 입장에 있는 남한당국에 어떤 정책상 제안을 할 것인가?

V. 和協政策을 爲한 提案

여기 열거하는 것은 화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국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이다. 이미 본 논문에서 언급한 것으로 각항목을 대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화협은 공평·상호원칙을 따라야 한다.
2. 쌍방이 다 물질적·심리적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정치적 색채가 강하거나 무슨 이유든지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은 보류한다.

4. 단기적 이득보다는 장기 내지 중기적 결실을 고려해야 한다.
5. 줄속보다는 점진적·축적적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
6. 화협사업은 가시적 결과를 바라보아야 한다.
7. 가능한 한 민간·비정부단체가 주관해야 한다.
8. 화협공동위원회는 정치이념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보다는 기능면에서의 유자격자가 직원이 되어야 한다.
- 9 남한은 북한이 ADB·IMF·IBRD·APEC 등 국제기구에 참고하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10. 남한은 화협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국제화시대는 남북한화협이 불가피하다고 까지는 말 못하더라도 적어도 얼마나 시급한가를 강조해주고 있다. 그와 동시에 화협이 통일을 성취하고 통일된 나라의 진정한 통합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긴요한가도 강조되고 있다. 남한은 화협노력을 이끌어 나갈 지혜와 의욕이 있어야 할 뿐아니라 관대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globalization은 「國際化」의 영역인데 종전에는 internationalization으로 적어왔다. 이 두 영어단어는 내포하는 뜻이 분명히 다르지만 한국내의 영문출판물은 globalization을 선호하는 듯하다. 아마 더 현대적ニュ앙스가 있기 때문이겠다. 여기서는 한국의 예를 따르면서 그 어의는 영어단어대로 풀이한다.
2. 1960년 8월 14일자 김일성 보고초록, 박순성, 최진욱 저 『통일논의 변천과정 1945~1993』(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58~60
3. 1972년 공동성명영역판. 금세진편 『Korean Unification:Source Material with An Introduction』(Seoul: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pp. 319~320.
4. 동상. p. 325.
5. 박·최·전기서 pp. 99~104.
6. 다른 투자국은 폴란드(2건) 향항·일본·프랑스·덴마크·벨지움(각 1건) 전홍택 “동포기업의 선행투자가 성공의 열쇠” 『통일한국』 1994년 5월 pp. 28~31.
7. 통일원이 1992년에 출판한 책자 『Intra-Korean Agreements』 속에 있는 기본회의서 영문판에서 인용 내지 참조.
8. 상호방문과 접촉에 관한 남한정부통계를 보면 1989년에서 1993년 8월까지 남한주민 688명, 북한주민 572명이 상대편 방문, 1989년에는 남한에서 1명만이 있었으나 1990년에는 183(남)· 291(북)으로 늘어나고 1991년에는 237(남)·175(북), 1992년에는 257(남),

103(북)이었는데 1993년의 처음 8개월간에는 10(남), 3(북)으로 격감되었다. 동일 기간중에 2882명의 남한 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했으며 그중 465명은 가족상봉, 841명은 학술목적 345명은 문화활동, 375명은 사업상 이유로 되어있다. 김병로. “남북한 화해·협력단계에서의 실천적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5권 3호 (통권 제19호)(1993, 가을) pp. 49~51. 통일원이 출판하는 이 계간지는 이후 TMY로 약칭.

9. 동상 pp. 46~49.
10. 북한은 물품교환에 있어서 소위 「수평」 양식을 주장, 즉 농산물은 농산물하고만 교환하고 가령 공산품과는 교환 못한다는 식. 「수직」적 교환을 하면 한쪽의 공업수준이 뒤떨어진 것이 나타날까봐 우려한 결과이다. 연하청,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 TMY 제4권 2호(1992. 여름), p. 92. 보도된바에 의하면 남한산임을 표시한 상표나 표찰을 쌀부대나 기타 제품에서 띠고난 후에야 북한에 운반할 수 있었다.
11. 물품교역·직접투자·합작·하청제·합영(외국합영기업에 공동투자하는 것 포함). 그리고 각종의 기술이전을 생각할 수 있다. 김병로, 전기논문 pp. 55~60. 1990년에 북한이 UN-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제출한 부문별 투자유치희망프로젝트를 보면 83프로젝트를 11부문(광업·식품 및 농수산물·직물 및 의류·목재 및 목재가공·화학제품·유리 및 요업품·금속산업·조립금속품·기계공업·전기전자공업·조선)에 걸쳐 총투자액 15억6천1백만불, 그중 약 57퍼센트인 8억8천7백만불이 해외투자로 되어있다. 연하청, 전기논

문 pp. 97~100.

12. 대적국통관규제법(1917년), 통관법(1974년), 수출관리법(1979년)
이 주요미국법이다. 백진현, “남북경협과 미국의 대북한통상규제”
TMY 제4권2호(1992, 여름) pp. 264~283.

제10차 미주지역 한반도문제 정보교류회의 논문집

국제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문제

1994년 11월 일 인쇄

1994년 11월 일 발행

발행처 : 통일원 정보분석실

전화 : 720-2141

통분 94-11-53